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하루소식

제1769호 ~ 제1886호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지난 1월 한미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4시20분 통일외교통상위는 소파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소파 개정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비준안 통과에 찬성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국민을 기만할 소지가 있다" (박상천) "신설된 환경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한번 개정되면 또 다른

개정안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 (장성민) 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응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3시 50분 경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김관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씨가 먼도칼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그으며 "한미행정협정을 비준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정화되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김관태 사무처장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76바늘에 이르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심보선)

소파개정안 통일외교통상위 통과 규탄과 국회 비준 반대, 제협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민행동의 날 집회
2월 28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노동·법조·인권·종교계 인사 472명이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연대투쟁을 천명했다.

27일 오전 기독교시민연대, 노동자 의회 등 18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헌법적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복수노조금지 반인권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복수노조 유예결정은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악의 서곡"이라고 비난하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권에 대한 총체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노동계 외에 법조계 67명, 인권사회운동계 28명, 종교계 62명, 학계 62명 등 각계 인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은 2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심보선)

기자의 눈
'좌익사상'이 뭐길래
수많은 시민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한복판 종묘공원 앞에 커다란 입간판 하나가 서 있다. 거기에 쓰인 문구는 "신교하는 국민정신, 사라지는 좌익사상".
서울경찰청 명의로 세워진 이 입간판의 메시지는 '좌익사상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신고해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측은 26일 "경찰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각 관할 경찰서에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혀 같은 내용의 입간판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음을 시사했다. 입간판의 의미에 대해, 경찰청 보안과 계도간관 담당형사는 "계도간판을 세워왔던 전통은 60년대 '무찌르자 공산당' 시절부터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 담당 형사는 "현재 남북대치 국면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고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좌익사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신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도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좌익사상'에 대해 "수상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 "국가에 반대되는 사상",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는 등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종묘공원을 지나던 시민들은 "좌익사상이 뭐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도간판. 그 기능은 '좌익사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비판세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이다. 사상의 자유, 비판과 견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 구시대적 유물은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001년 3월

(제1803호 - 제1824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1일(목)

제 18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 · 굴욕적 소파 비준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불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소파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표결 끝에 찬성 120표, 반대 27표로 법안이 처리됐으나, '복수노조 유예' 법안에 대해선 의원들 내에서 한마디 이의제기조차 없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의도에서는 소파개정안 비준거부와 노동법 개악 반대를 호소하는 각계의 집회가 열렸지만, 공허한 외침이 됐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오전 11시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소파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국민행동 사무처장의 함박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개탄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윤배반적이고 인면수심적인 행동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국민행동은 또 "소파 문제는 정부당국이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시간 후, 맞은 편 인도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약 1천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복수노조 연기 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단병호 민

주노총 위원장은 "실직, 해외매각, 경제파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2001년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적 저항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재석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범용)

인천 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편, 정권의 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천주교회 앞뜰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 2백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천 시내 곳곳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가 하면 유인물 홍보조차 막고 있다.

당국은 10여 개에 달하는 지하철·국철 역 입구마다 정복 경찰 2-4명씩을 배치해 경계를 서고, 차림새가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검문 후 연

행하고 있다. 검문시 소속 및 이름, 검문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후과를 두려워하는 듯, 근처에 대기중인 경찰 버스의 변호관 초차 녹색 테이프로 가리고 있다.

또한 경찰은 28일 낮 1시부터 인천주안역, 동인천역 등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려던 대우자동차 노조원 12명을 연행했다. 유인물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행사유가 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밤 8시가 돼서야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농성중인 산곡성당 부근에서도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성당 근처에 병력을 잠복시킨 가운데 방문객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관련 구속자 15명 가운데 5명이 농성장을 방문하던 중 연행됐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류정현 교육선전실장은 "단체 버스로 오면 버스 차로 길에 못 들어오게 막고, 개인적으로 오면 부평역에서 붙잡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해 그 통제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공 시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육내 행사인 회의조차 막는 경찰들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혀를 찼다.

(심대섭)

3·1절 휴무로 내일 하루소식 쉽니다.

모이자! 서울역광장, 3·1 시국대회

3대 개혁입법 쟁취, 언론·교육개혁 촉구, 민중생존권 파탄 규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시국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각 단체는 깃발과 함께 집회장소로 모여주시시오.

· 때 : 3월 1일(목) 낮 12시 / · 곳 : 서울역광장(이후 명동으로 행진)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2월 21일엔 1만3천6백여 명의 각계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들이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내에서도 개혁입법 처리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결정됐다. 이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나, 19일 헬기와 굴착기, 4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력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이후 부평 산곡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한 노동자들이 거리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마구잡이 검문과 불법연행, 폭력행사로 노동자들의 시위마저 원천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4. 자유로운 이동을 꿈꾸며 ... 장애인들, 철로점거 시위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요구가 폭발했다. 장애인들은 2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면서까지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정부당국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이에 2월 26일부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항상적인 '사고'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마저 불사해야만 집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생명권 보장'과 다름없는 절박한 요구사항이다.

5. 집시법 골레에 '1인 시위' 물결

대사관 및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으로 인해 집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1인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변칙상속을 규탄하는 국제청 앞 1인 시위가 연초부터 시작된 데 이어, 2월 들어서 소과개정을 촉구하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박정희기념관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청 앞 1인시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장애인들의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등이 연이어 전개됐다. 악법의 존재로 인한 희극인지, 비극인지...

주요 판결

◎ 서울지방법원 형소1부(주심 심준보, 재판장 길기봉)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 (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호)

: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행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 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 (2/17)

◎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 한국의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고 (2/23)

논평

◎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2/3)

◎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2/10)

◎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2/17)

◎ 대우차 사태,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2/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3일(토)

제 18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국가보안법 재판에 나선 증인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국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현(42,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공범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는 송학삼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재미교포 김명철 씨의 지령을 받아 송영현 씨와 연락을 취하며,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란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했으며, 북한을 방문하여 지령을 받아 국내의를 넘나들며 수시로 송 씨 등과 통신을 주고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송영현 씨 가족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가협 송소연 간사는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풀렸지만 사건은 간단하다"고 잘라 말한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변해도 이런 책이 팔리는 걸 막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종류의 책이 출간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본심일 것"이라는 것이다. 김명철-송학삼-송영현 잇기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책의 저자는 김씨고, 판권이 송학삼 씨에게 있는 이상 책을 출간하기 위해 송영현 씨가 송학삼 씨와 연락을 취하고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업상 통신이 지령을 전달받는

관계로 탈바꿈해 버렸다는 것이다.

송 간사는 송학삼 씨의 방북을 국정원이 잠입 탈출로 규정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송학삼 씨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뉴욕주재 한국 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방문후에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명철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가 하는 점이다. 송학삼 씨의 지령수수니 회합 통신혐의도 결국 김 씨가 반국가단체라는 조총련 성원이라는 데서 유추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근거도 사실은

(= 2면에서 계속됩니다)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지난 1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5개 방송사의 전파를 뒀다.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으나 허기진 우리의 심정은 채워질 수 없었다.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김 대통령의 단골 메뉴인 '인권'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당선자 시절부터 부르던 '지정곡'이며, 올해 신년사에서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건 '인권'에 대해 말이 없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말해봤자 손해라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이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갖지 말라는 사망선고인가?

'대화'가 있기 며칠 전에도 국보법에 화가들이 작품 전시를 위협받았고, 하루 전에는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재미동포 송학삼 씨가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촌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줄로 착각하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호소해왔다. 부평에서는 노동자로 보이거나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면 불심검문과 연행을 당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온갖 미사여구로 꾸며 다니던 빈수레를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폐기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취지가 증발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부패방지법안, 수렴을 해어나지 못하는 국보법 개폐 문제를 그 빈수레와 함께 소각하란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취임식장에 손잡고 들어갔던 개혁사안들을 이제 문밖에 내쳐버리고 거지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적 관심사' 위주로 나간 것이라 한다. 그 실문조사란 것이 갖는 객관성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하면서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다.

어찌됐건 청와대는 인권에 대해 입맛을 잃었음을 이번 '대화'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스스로 낙제생임을 인정하고 책상만 차지한 채 세월을 보내겠다는 배짱이 아니어서야 이런 처사는 있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을 '선전도구'로 이용했음을 명백히 증명했으며, 인권침해자의 증상으로 외치고 있다. "내 정권 하에서 '인권'을 논하지 말라!" 이제 인권에 대해 입을 다문 그대여, 국민의 열린 입이 그대를 삼킬 것을 명심하라.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 중인 민주노총의 박점규 조직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 본부를 방문해 "1997년 3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2002년부터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노동관련법을 개정할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이 제출한 민주노총의 제소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존속하기로 합의

했다고 강변"하지만,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니며, "복수노조 금지규정으로 인해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제소장에서 복수노조 금지로 인해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1999년 11월 (주)대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대교의 정규직 노조에서 규약을 변경, 학습지 교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 노조 설립을 막은 경우를 들기도 했다.

한편 ILO 집행이사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8일부터 제280차 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이 제소한 안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토의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보고되어 권고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들은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보선)

(1면에서 이어집니다)

그 내용에 있다기보다 저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조총련 성원이 아니라면 송영현 씨와 송학삼 씨의 혐의는 근본적으로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김씨가 조총련 성원이라는 믿음만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란 고자 '영사 확인서' 한 장뿐이다. 이에 대해 송영현 씨 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김씨가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사'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85년 퇴직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총련에서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 제일교포가 관련된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성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사증명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는데, "영사증명에는 대개 '일본관계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하는 형식이어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김명철 씨가 쓴 「김정일의 통일전략」이 시중에서 팔리는 걸 막기 위해 "국정원이 영성한 사건 하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광길)

바로 잡습니다

2월 27일(화)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중 '베리 전 미국무장관'을 '베리 전 미국방장관'으로 바로 잡습니다.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국내 유명 통신회사인 넷츠고가 자기 통신망 내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자사 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넷츠고에 만들어진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올해 1월 동호회 명칭이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 투표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동호회」(아래 국보철폐 동호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동호회는 새 이름을 넷츠고 측에 알리고 명칭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넷츠고 측은 "현행법상 논란이 있는 명칭은 사용 할 수 없다", "동호회 개설 시점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경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넷츠고 측은 또 국보철폐 동호회 회장인 전재성(27) 씨의 대표시삽 운영권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지금 국보철폐 동호회는 대표시삽이 관리하는 신입회원 가입·회원조회도 안 되고 겨우 게시판 관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넷츠고는 2월에 자사 동호회 운영지침도 대폭 변경해 동호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표현 금지와 다른 통신망을 통한 넷츠고 통신사 비판 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넷, 네티앙, 프리첼 등 주요 통신회사 동호회 운영지침에는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은 없다. 다음넷과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모임이 3개 있다.

국보철폐 동호회 전재성 대표시삽은 "넷츠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넷츠고의 자세는 네티즌을 억압하는 폭력"이라며, "국보철폐 동호회 이름 변경은 이러한 폭력에 맞서는 상징이기에 이름과 동호회 운영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6일(화)

제 18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담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공청회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동위)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진술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3년에 걸친 인권단체와 법무부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가인권위에 독립성과 강한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인권위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법무부 및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과 권한과 관할에 있어서 중첩되어 마찰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로 '역할 중첩'과 '입법 과잉'을 우려하는 질문을 진술인들에게 퍼부었다. 특히 최병국 의원(한나라), 김학원 의원(자민련)은 인권위원회 무용론까지 풍기는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동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제·개정에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은 "인권기구를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발언, "국가기구로

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천정배 의원의 호된 질책을 샀다.

장장 6시간 여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고 법사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잘 지켜!"라는 말이 들려왔다. 한때 공안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과 악수를 하며 단정 격려의 말이었다. 법무부의 권한과 위신을 잘 지키라는 뜻이었을까? 어쩌면 바로 이 말이 답답했던 법사위 공청회의 결론이었는지도 모른다. (범용)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울산 동구청은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 등은 필증 교부 직후 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5일 현재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노조설립 후 서울 감서구청에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감서구청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 반대 시위'를 벌이고,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지난 2월 1일에는 '홍익매점 노조결성 무산'이라는 벽보까지 부착하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배척했다. 지난 2월 1일 서울 감서구청은 홍익매점 노조가 낸 설립신고에 대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필증을 반려했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철도노조 지방본부의 하나로 자체 단체협약, 자체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는 한명도 홍익회본부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 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이를 문제삼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보선)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중대회의회의 항의에 시청 도시과 직원은 “강원도 국정원에서 게시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먼저 게시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먼저 게시물을 부착한 다음 시청에 통보, 게시허가를 받은 것이 관례.

올 2월 민주노총 강원본부(본부장 길기수, 아래 강원본부)는 ‘국보법 철폐’ 현수막을 시청 옥외게시판에 걸려고 신청을 했다. 춘천시는 지난 해 민중대회위원회 현수막 건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게시를 불허했다. 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국보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을 명백히 반대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허가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강원본부 서철상 정책부장은 “시내 곳곳에 ‘물 값 인상 반대, 호주제 철폐’ 등 현행법률에 반하는 현수막이 많은데, 유독 ‘국가보안법 폐지’ 현수막만 못 걸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본부는 춘천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태섭]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서울시경 및 경기도경 보안수사과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해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위 2명 외에 김영재(국민대졸), 김재현(한국외대), 김성훈(고려대졸) 씨다. 두해전, 김성훈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광일, 김영재, 김재현 씨는 경기도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심태섭]

3월 6일(화)의 '인권이야기'는 쉽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 (2/26) /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 (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단!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 (2/26) /금속연맹, 3만여명 4시간 연대파업 (2/28) /민주노총·학생 2천여 명, 신촌에서 ‘정리해고 분쇄’ 가두시위 (3/1) /사회관계 장관회의, “화염병 투척 엄벌,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 (3/3) /산곡성당, “찾은 노동부 장관, ‘정리해고 철회부터’라는 호소에 줄행랑 (3/4) /경찰, 대우 노동자 1인시위도 연행, 인천 사회단체 대표 1인시위는 ‘허용’ (3/5)

3. 복수노조 유예? 국회·정부 기능을 유예해야!
‘복수노조 5년유예’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 (2/28) /민주노총, 복수노조 금지가 ILO 조약 제87호 제2조 위반이라며 제소 (3/2) /울산 동구청,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홍익매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홍익매점 노조 설립필증 교부 (3/2)

4. '미국이 정하면 무조건 옳다?' - 결과 속, 일치하길 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발표 (2/26) /중국, '미국인권 2000'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개선하라”고 촉구 (2/27) /공보처, “언론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지적은 외면한 채, 세무조사 의도만 부풀린다” 불평 (3/1) /북한, “미국이 자기나라의 기준으로 인권을 정치적 이용”고 비난 (3/2) /중국,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3/2)

5. 고문장비 수출허가 하고, 고문금지 주장하는 이중성
앰네스티 미국지부, 고문기구 수출금지 촉구 “미국, 불법 고문장비 수출허용” (2/26)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동안 전기충격기 생산 세계2위” (2/27)

6. 실업자, 비정규직·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 (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실업정책 제대로 하라” (3/2) /경총, “비정규직 활성화하고,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라” 등 입단협 지원 발표 (3/2)

7. 새만금 - 빗발치는 반대를 뚫고 그래도 한다?
새만금갯벌 평화연대, 해양수산부 “새만금 사업 간척유보” 보고서 공개 (3/2) /정부, “그래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다” (3/5) /유종근 전북지사,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 사업 반대하는 모든 음모를 뚫고 나가겠다” (3/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7일(수)

제 18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이랜드, 정규직화 쟁취 정규직·비정규직 하나된 263일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마침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이랜드 노사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 안을 마련해 7일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이에 6일 이랜드 노조는 9개월 여만에 파업을 끝냈다.

이랜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만2년 이상 근무한 부곡분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만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특별 채용을 통한 정규직 채용 △파견근로자였던 부곡물류창고 도급계약 해지자 15명 직접 채용 △성희롱 예방 전담자 선임 △기본급

기준 임금 5~10% 인상 등이다. 또 이랜드 노사는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생계비 차원에서 1인당 1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이랜드 노조는 사측이 요구한 ‘파업참가자 5명에 대한 1년 동안의 무급정직’에 동의하고, 기타 정계는 노조간부 선에서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랜드 노조는 6일 저녁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 해 2월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스스로 규약을 변경해

비정규직, 도급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에 포함시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지난 해 6월 16일을 파업을 시작해 협상 타결까지 모두 263일이 걸렸다. 이랜드 노조 홍윤경 교육선전분과장은 6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 특히 부곡물류창고 도급계약 해지자를 직접 채용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의 무노동무임금을 요구를 뚫지 못하고 물려선 것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덧붙여 홍윤경 씨는 “1년 무급정직 5명”의 범위는 내일 아침이 돼 봐야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다”며 “파업은 끝났지만 이제 조합원들은 새로운 ‘투쟁’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노조원들은 오는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심보선]

경찰, '민혁당 사건' 수배자 체포

〈속보〉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생활을 하던 임태열(서울대 영문학과, 36)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임 씨는 6일 오후 3시 50분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자택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8~9명의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고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와 3.5인치 디스켓 9개를 압수 당했다.

6일 저녁 늦게 임 씨를 면회한 부인 박윤희 씨는 “남편에게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고 캐묻는 것 같다”며 “남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씨는 지난 91년 이른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 사건으로 수배됐으며, 98년부터는 ‘민혁당’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배됐다.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공소장에는 임씨가 민혁당 학생운동 사업부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심보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오는 8일 93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 아래 한여노협)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 아래 여성노조)이 「여성노동자대행진 전국버스투어」(아래 전국버스투어)를 진행하고있다. 전국버스투어는 지난 3일 서울을 출발해 전국 9개 도시를 돌며 각종 문화공연과 지역별 비정규직 투쟁 사례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염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버스투어를 마친 후 모두 청와대로 보내질 계획이다. 전국버스투어단은 지금까지 안산, 인천을 방문했고 7일에는 부천을 방문한다. 이후 수도권을 벗어나 광주, 대전 등을 방문하며 12일 대구 방문을 끝으로 ‘투어’는 막을 내린다.

전국버스투어단원인 한여노협 배진경 선전부장은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보고 싶었다”며 “전국버스투어를 통해 현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권리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심태섭]

[특별 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잠깐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곽 노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이 예정된 존재, 거꾸로 박힌 활자처럼 거북살스럽고 밟살스런 존재였다. 구태여 없어도 될 존재인데 시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허욕을 부리는 탓에 태어나는 사생아였다. 개탄스러운 법 홍수시대, 제도 천국 시대의 빛나간 산물이었다. 공인히 국가제도 간의 균형과 기강을 뒤흔들기 위해 특권적 지위를 구하는 눈엣가시였다. 아무도 탄생을 기뻐하거나 고대하지 않는 이단이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법사위의 인권위법 공청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외 싸고 끌어내리려는 기존 국가기관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소리들이 내게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절절한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층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모자라 제 기능을 못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물론 없었다.

모두가 법무부 싸고돌아

여덟 분 공술인들의 의견진술이 끝나자 여야 법사위 의원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질문 내용으로는 소속당을 구별할 수 없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이 버젓이 있건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으로 '소신파'들이었다. 대부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위가 전횡할까봐 걱정스럽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집권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해 놓고도 계속 탄소리를 했다. 여전히 민간기구가 낫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의 견해인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물었다. "법무부 소속직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론을 정한 건 그쪽 사정이고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였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겠지만 여기는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국회 공청회 자리다. 공식적인 당정합의를 거쳐 제출한 법안의 기본 골간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가 탄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사직서를 내야 합당한 것 아니냐"고 천 의원이 다그쳤다. 한나라당의 최모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공술인을 유박지르는 건 법사위의 전통이 아니라"며 법무부 인권과장을 두둔했다. 법사위 위원장도 "여기 공술인들은 개인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분명히 법무부 인권과장 신분으로 공청회에 나온 건데 이렇게 능구렁이 답변듯 넘어갔다. 또 다른 한나라당 최모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의원께서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라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점입가경이었다.

"법무부 법안이 제일 바람직했어. 갑자기 민주당이 국가기관으로 바꾸자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누구라도 참을 수가 없었을 거야" 한나라당 최모 의원은 이렇게 법무부를 부추겼다. 인권위법안을 둘러싸고 전개된 집권당과 법무부의 갈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각시키며 즐기는 눈치였다. "잘 지켜!" 공청회가 끝나고 공술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자리에서 또 다른 최모

의원은 법무부 인권과장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의 특권을 잘 지키라는 선배 감사의 당부였다. 공청회는 이렇게 끝났다.

역사를 길게 호흡할 것

이번 공청회는 기존 권력기관들이 민주당 법안 수준의 부실약체 인권위마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것은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이 편견의 벽이 되고, 보수적 해석이 제도의 벽이 되어 개혁입법을 퇴색시키는 고전적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충실히 재연해준 공청회였다.

좋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이 두터운 현실의 벽을 뚫고 또 뚫을 것이다. 벽은 계속 쌓이는 것이기에 고통과 실망은 언제나 있지만,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마는 법이기에 위안과 희망도 우리의 것이다. 역사를 길게 호흡하면서 결코 절망하지 말 것. 우리의 선의와 힘을 최대한 모아 광취할 인권위원회를 사랑할 것. 우리가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실험정신을 늘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인권위원회일 수도 있는 것이기에...

◎ 정보샘 ◎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 토론자: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회: 민주노동권투법 법규차장/변호사
- 인사이드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8일(목)

제 18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시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나아가야 한다." (단병호 민주노동총 위원장)

이처럼 노동자들이 격양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자초한 일이었다. 지난 달 16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 왔기 때문이었다.

7일은 대우차 부평공장이 다시 조업을 시작한 날, 겉으로는 대우차가 정상화의 길로 가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선 하루종일 연행, 계엄을 발발케 하는 검문검색, 노조출입 봉쇄 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됐다.

○ 오전 5시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인천 백운공원에서 대우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미 전투경찰병력에 의해 부평공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이 차단된 가운데, 회사측은 출근자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고, 이에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버스 앞에 드러눕기까지 하며 이를 막아섰다. 결국 가족들을 포함해 2백여 명이 대거 경찰서로 연행됐다. 해고노동자의 부인 박현숙(33) 씨는 "경찰이 방패로 찍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연행해 갔다"며 "납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공장주변을 철통같이 경계하던 전

투경찰 대오는 오전 11시경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한 변호사의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나 해고자라 하더라도 조업원 신분인 이상, 노조 사무실 출입은 기본적인 권리다. 회사와 공권력은 이마저도 무력으로 막았다.

○ 오전 투쟁을 마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낮 12시 산곡성당으로 모여 집회를 가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해고자의 부인은 "죽고싶었다. 그러나 살아서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하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30여분의 휴식 후 다시 집결한 노동자들은 몹시 지친 표정 속에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동자만 때려잡는 김대중을 쳐죽이자!"고 분노의 외침을 토해냈다.

○ 오후 2시 부평역광장에서 민주노동총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평역 일대는 이미 전투경찰에 의해 완전히 점령된 상태였다. 최소 80여 대가 넘는 전경버스가 광장과 도로변에 늘어섰고, 전철 역사 안에서부터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마다 전투경찰이 수습 내지 수백명씩 배치돼 통행을 제한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목전에 범죄를 하려 하거나 범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심검문을 한다"고 밝혔다. 반듯한 옷차림이 아니면 '막무가내'로 검문검색을 한다고 지적하자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 집회를 불허당한 민주노동총은 인천 교대로 장소를 옮겨 오후 3시부터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민주노동총 중앙지도부 및 연맹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고, 울산·부산 등지에서 상경한 노동자들과 대학생, 사회단체 활동가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를 마친 뒤 부평공장으로 가려던 시위대는 경찰병력에 의해 행진이 봉쇄되자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전투경찰 역시 날라온 돌과 화염병을 되던지며 행진을 저지했다. 집회장 상공에선 헬기 한 대가 계속 날아다니며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의사를 전하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집회를 사전에 불허한 정부였다.

○ 오후 6시30분 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 플랫폼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8백여 명에 육박했다. 플랫폼에서 개찰구로 통하는 계단은 이미 전경 병력에 의해 차단되었고, 결국 외부로 나가는 것이 차단된 시위대는 플랫폼 위에서 30여분간 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7시20분 경 전투경찰이 플랫폼으로 투입되자, 시위대는 선로로 뛰어내리거나 출구 쪽으로 몰렸고, 10여분만에 모두 해산됐다.

민주노동총은 8일에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되며, 강제퇴출이 예정된 생명보험사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한석)와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회원들은 7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개인 유전정보은행 반대 거리캠페인'을 갖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를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 검찰 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범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일방적으로 제명처리 되어 사실상 해고된 동두천 소재 현대다이내스티 골프장 경기보조원 김 아무개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 1월 29일에 판정하고 2월 28일 발송한 판정문에서 김씨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무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에 대해 △내장객과 경기

보조원 사이에는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되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경기보조원 모집·관리·배치에 관여하며, △내장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봉사를 지불했다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이어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자치조직이라고 주장한 한결회회장이 제명 2일전에 경기마스터에게 먼저 김씨 제명을 통보하고, △경기보조원 점호시간에 이 사실을 발표하고 신청인 김씨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고 뒤늦게 밝힌 점으로 볼 때 제명처분이 한결회 자체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씨보다 회칙 위반 회수가 더 많은 다른 경기보조원은 벌금으로 처리하고 탈퇴처리 된 사실이 없는 사실도 언급했다.

골프장 업계는 경기보조원이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맞따르자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사용자 주도로 결성, 자신들이 경기보조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판결은 이런 골프장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 김씨는 노조가 없는 현대다이내스티 골프장에서 홀로 부당해고에 맞서왔다. [심보선]

● 정보섬 ●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 발제 : 최홍업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원)-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교정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자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 토론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경총 이승길 법제팀장, 인사이드코리아 지무영 노조위원장
- 주최 : 파견철폐공동대위 (02-756-3656) / 민주노총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 3월 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금감위 앞
- 대회 이후 국회 앞까지 행진할 예정
- 주최 : 민주노총 (02-2637-1133)

◎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순회투쟁단 전국순회 투쟁

- 3월 8일(목)~11일(일)
- 한통계약직·불보코리아비정규직·인사이드코리아·이랜드 노조원 205명으로 구성된 순회투쟁단은 각 지역 한통계약직 현장·대우캐리어·대우자동차 군산공장·불보건설코리아 등 어렵게 투쟁중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각 지역 민주노총과 간담회, 집회를 열어 노동자 투쟁 확산에 나선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9일(금)

제 18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경비업체가 고용한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 이전에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청원경찰을 시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주요 시설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교육·보수·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배치'해왔다. 청원경찰의 임용·교육·보수·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시설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과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군대, 경찰에서도 총기분실, 오발사고가 발생하고 사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민간인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 △청원경찰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때 인천신공항의 경비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를 소홀히 한 채 개정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특수경비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청원경찰과 달리 최저보수기준이 없어 일정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지, △자격미달의 특수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그 사실을 알게'될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또한 민간인 총기소지 제한이 풀리게 돼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에게도 총기보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보선]

"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 철폐" 8일, 김대중 퇴진 결의대회

8일 금융감독위 앞에서 열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총력 결의대회'에서 한일생명보험 등 보험노동자 4천5백여 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를 요구했다.

대회에서 삼신생명보험 유정기 노조 위원장은 "대선 때 김대중을 찍었는데, 지금 그 손가락을 찌르고 싶다"고 울분을 토하며, 금융감독위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철폐를 요구했다. 또 대우차노조 강윤기 사무국장은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내겠다고 협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위와 금융감독위 상정물을 불태우고, 금융감독위 건물에 1천여 개의 계란을 던졌다. 이어 전경련, KBS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2001년 3월, 대한민국 ...!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차씨가 재소자와 싸워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들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형법상(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소자가 징벌로 금치를 받은 때이다. 그러나 조영두 변호사가 차씨의 접견을 신청한 때는 차씨의 징벌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또 전주교도소는 행형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접견금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재소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차씨는 집단구타의 후유증 및 위염 등의 이유로 징벌이 유예돼 지난 2일 조변호사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차씨는 "교도소 측이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다가 피를 토하거나 실신을 해야 외부진료를 허가한다"며 "서신

불허가 다반사다"고 호소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편지는 물론 안부를 묻는 편지도 "교도소 내부질서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발송을 불허했다"고.

차광주 씨는 99년 구속당시 신장원을 닦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토하는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씨는 수감자로서 교도소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려다 서신발송마저 불허 당한 것이다. [김보영]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구지 모르겠다

동해바다 북한잡수정을 배경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의 포스터!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정신' 포스터는 공식적인 협조공문도 없이 국정원 간부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 대중교통 시설에 부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 운영과 표용렬 과장은 "연초에 국정원 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부착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협의해 와서 (내가) 포스터 부착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작 제작 당사자인 국정원은 국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 정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신고정신' 포스터를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좌익사범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고 질문하자 국정원 상담요원은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법률적 정의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지역 대공상담소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에서 일일이 답변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해, 포스터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내용의 경찰청의 이념계도 간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념계도 간관은 경기도에만 7백여 개, 강원도에만 3백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념계도 문구는 전국적으로 총 1백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념계도 간관의 단골메뉴인 좌익사상의 개념을 묻자, 경찰청 계도 간관 담당자는 "내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 내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했다.

또한 "60년대부터 쓰여져 왔던 문구들 중 폭력, 멸종 등 딱딱한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 만든 것은 없다"고 말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주민감시 기제가 딱딱한 문구가 아닌 세련된 형태로 '국민의 정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10일(토)

제 18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9일 전국 대검공안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시민단체를 초청해 누가 법을 어기는지를 감시하는 '집회시위 현장 시민참관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비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시민참관단은 경실련, YMCA 등 이미 경찰내에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경찰 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경비과는 "경실련, YMCA, 녹색교통운동 등 9개 시민단체가 참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가부분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YMCA, 녹색교통운동 등은 "연락 받은 바도 없고, 앞으로 그런 연락이 와도 참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찰이 밝힌 9개 시민단체 중 '한국교통시민협회(한교협)'는 시민참관단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교협 김기홍 회장은 "우리는 음주주정현장 등에 경찰의 요청을 받아 참관해 왔다"며 "시민참관단'에도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다만 신고한 집회를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다중이 모이는 집회,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의 일시, 장소를 시민단체에 알려 참관을 요청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관단에 대해 민가협이 남규선 총무는 "왜 화염병이 등장했는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며 "생존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 정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소장은 "대우자동차와 관련해 경찰이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를 기억해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지금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만들고 '시민참관단'을 운용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횡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보선)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게 뭘 물어볼 줄을 모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 경비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여분 수렴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의사야 어찌됐든 정부의 의지대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목표한 바를 관통해 버린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와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총'은 주어진 풀 수밖에 없는 사물이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주위담을 수 없는 살상 도구이다. 사용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고, 훈련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진 자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선호할 일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는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 주인공들이 영웅담을 다루는 곳도 아니고,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총기범죄나 폭발물 테러 위험이 실재하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자가 총으로 무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기사고와 총기범죄를 애써 빚어낼 생각이 아니라면 기막힌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군인과 경찰을 놔두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민간경비업체에게 담당시킬 절박성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경쟁과 이윤 지배적인 경제 논리에 맡길 생각이라면 총기보다 더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총기 휴대·사용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강화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완전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현재보다 총기분실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물샷 틈 없는 삼엄한 보안과 경계를 외치는 군과 경찰에서도 총기 탈취와 도난사건이 엄존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도 안전 및 인권교육의 미흡, 불충분한 사격훈련, 총기남용 경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런데 총을 든 자를 믿어보라? 심장이 떨릴 뿐이다. 총부터 치우고 원점에서 얘기돼야 한다.

◆ 인권운동사랑방 3월 월례포럼 ◆

NMD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주제 : NMD체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한국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때 : 3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 발제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 토론 : 이광길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참가비 : 2,000원
- 문의 : 배경내 (02-3675-5363)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지난 3월 2일부터 4일까지 멕시코의 누리오스 시에서는 제3차 선주민국민회의가 열렸다. 56곳의 선주민 중 42곳의 대표 3천3백여 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선주민을 차별하는 헌법, 법률을 개정하고 선주민국민회의를 정부의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아래 사파티스타)은 지난 달 25일부터 치아파스에서 3천 킬로미터를 행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사파티스타는, 1914년 11월 27일 에밀리아노 사파타(1910년대에 농민봉기를 지도하다 암살당한 혁명가)가 농민전사를 이끌고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11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정부와 협상을 한다.

사파티스타는 점증하는 빈부격차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멕시코 지역 선주민인 인디오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데 항의, 94년 극빈 지역인 치아파스 지역을 중심으로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선주민과 빈곤층에게 큰 지지를 받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선전활동과 전설적인 지도자 부사령관 마르코스를 통해서 전세계의 이목도 끌게 되었다. 96년 정부는 사파티스타와 산 안드레스 협정을 체결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70년만의 정권교체로 집권한 폭스 대통령은 선주민 문제에 있어서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약속했다. 폭스 대통령은 선주민 권리보장, 인디오 공동체 자치, 국부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약속하였으며 사파티스타를 포함한 선주민 대표들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선주민국민회의는 이번 협상의 주요내용으로 ▲인디오 민족의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96년 산 안드레스 협정 준수, ▲전국의 선주민 거주지의 무장해제, ▲선주민 권리 투쟁 중 투옥된 사람을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주민국민회의는 또 ▲선주민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치적 자유와 사회문화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 ▲정치·경제·행정·사법 등 각 방면에서의 자치권, ▲멕시코 사법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독립적 사법제도를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또 이들은 생존이 걸려있기도 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영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선주민 대표는 특히 자연은 신성한 것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스 대통령이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했다. 또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에 선주민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폭스 대통령과 선주민의 협상의지에도 불구하고 70년간 집권에 온 제도혁명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의 반대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로 남아 있다. 선주민회의 참가자들은 선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했으며 12일에는 국회 주위에서 인간사슬을 만들어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민선)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동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사용자의 의미를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 노동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하고도 직접고용 계약을 회피하고 용역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업 교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입법취지는 분명 파견노동자들이 당할 수 있는 중간작위를 막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있으나, “행정당국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다루는 시능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교수는 이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쪽으로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경총 이승길 법제조사팀장은 “파견근로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계약상 유일한 사용자인데 때문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계약 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해고를 제한하게 하는 법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진희 위원장은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대부분 사용사업주에 의해 임금,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파견사업주가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공박했다. 노무법인 참터 노경석 대표노무사도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이 2년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라는 권고문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인사이드코리아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여명이 참가해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13일(화)

제 18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병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감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

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서비연맹)도 홍익회본부의 가처분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개인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김재호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홍익매점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시켜주지 않다가 올해 들어 9명을 받아들인 것은 복수노조 논란만 가중시키려는 속셈이고,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이 사용한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격”이라며 “홍익회본부가 진정 매점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홍익회의 용역 전환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제소한 민주노총은 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사례를 ILO에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

지난 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감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기존 운항승무원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종사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종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근거로 삼은 점에서 홍익매점노조와 아주 유사한 경우다.

○ 대한항공 승무원노조의 경우 :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같은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종호) 설립을 취소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법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 해 12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조종사들의 자주적 단결과 권익보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던 대한항공 노조가 승무원 노조설립 직전 노조규약을 바꿔 조종사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조종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무원 노조의 실체가 형성됐던 지난해 8월 당시에는 기존 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조종사들이 제외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원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노조가 자신과 가입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을 취소 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족자주·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발족식

2001년 3월 14일(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노동자의 권리가 자본권력이나 사용자 측에 의해 억압받고 침해당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굳건히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희망은 있다. 물론 고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사측의 노무관리 체계에 맞서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는 최소의 권리만을 보장할 뿐인데 그마저도 침해당하기 일쑤다. 그것은 사용자 측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법망을 피하고 헛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추천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

추천인 제도라 함은 회사에 입사할 때 사내 관리자 급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일종이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추천인들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대의원 출마자들이 후보를 사퇴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신원보증에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현장통제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95년도부터 추천인 제도가 도입, 강화되었는데 신규입사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조의 각종 선거나 투쟁에 이 제도가 회사측에 의해 요긴하게 쓰였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2001년 주요사업계획의 하나로 추천인 제도철폐를 내걸었다. 비단 이 제도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추천인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노조통제를 위한 탄압에 이용하는 등 반인륜적 제도가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5대 대의원 선거에서 추천인과 추천인 가족을 동원하고 고향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등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취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인제도는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 인간적 관계로 추천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취업의 기회마저 봉쇄 당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째 이처럼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가기에 철폐되어야 한다.

◎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합 대표)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 (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3/6)/법원, 김우중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구타-261명 연행/인터폴, 김우중 '적색수배' (3/8)

2. 공권력의 '과격 공안', 어디까지 가는가?
경찰, 시민단체 참관단 운영방침-"과격시위 예상되는 집회 중심", 시민단체들, "참가의사없다" (3/8)/전국공안검사, '불법·과격 집단행동 엄단' (3/9)/경찰, '화염병 전달 특수기동대'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 (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찰·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 (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잠정 마쳐 (3/6)/철도노조 총회, "울산동구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울산지법에 행정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 (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5년 동안 여성관리직 점유율 감소", 고위공 점유율 최하위 수준 (3/7)/여성의 날, 비정규직 철폐·장애여성 노동권 보장 요구 (3/8)

5. 유엔·국제기구, 일본의 전쟁책임 묻다
세계여성의 날-유엔본부, '일본군 군대위안부 단죄 2000년 도쿄법정' 행사 (3/8)/ILO 보고서, "일본은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해 별도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3/8)/58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막, 일본 보고서에 "제일동포 일본정주 원인을 강제징용이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라고 표현" (3/6)

6. 밝히고 넘어가야 할 남미인권 침해
미국 70년대 남미 좌파제거 '콘도르'에 개입, 비밀해제 국무부문서 (3/6)/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군정시절 인권유린 행위에 면책특권 부여한 '콘도르파일'에 무효판결 (3/6)

● 해외소식
미 연방법원, 넉스터는 음악과일 공유를 차단 명령 (3/6)/시험관야기 권위자들 인간복제 준비, 이스라엘 등 6개국 실험장소 제공의사 밝혀 (3/9)/사파티스타, 멕시코 시티 소갈로 광장에 도착, 원주민권익보호법 요구 (3/11)

● 통계로 보는 인권
AI 보고서, 세계여성 20%가 고용주·가족 등에 강간·구타당해 (3/6)/2001년 중국 국방예산 17.7% 확대 (3/6)/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상위 10%, 하위 10%의 6배 (3/7)/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 6개월 동안 121만 명 증가, 통계상 실업률 (3.6%, 98만명) 보다 실업자 훨씬 많다는 의미 (3/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리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반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문화방송 보도국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8년 2월, 부산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 급 연안어선 영창호(선장 정창수)는 갑자기 떠오른 미 제7함대소속 7천 톤 급 핵잠수함 라홀라(당시 선장 데이비드 존스)호를 채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라홀라호가 갑작스레 부상해 미리 소나(Sonar)로 탐지할 수도 없었고, 달리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 선장만 입건

두 선박의 충돌로 영창호는 배 밑 부분에 큰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거의 수직 상태로 침몰했다. 승선 중이던 정창수 선장과 나머지 선원 4명은 바다에 빠졌다. 정 선장 일행은 라홀라호 승무원들에 의해 겨우 구조됐으나 정자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진해항에 정박한 라홀라호는 정 선장 일행을 부산해경에 넘겼고, 이들은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막상 침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핵잠수함의 사고부위 사진촬영 요구조차 거부했다. 미군은 일본에

있던 미 제7함대 조사단을 급파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해군 고위관계자는 "미군의 자체 조사 결과 잠수함 측의 잘못이 드러나 함장과 부함장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입건된 정 선장은 해경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 하던 정 선장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미국무성에 피해보상을 요구, 98년 10월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인 2억 2천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 선장은 이미 사고 직후 선박허가증을 빼앗긴 상태라 속초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타야하는 처지가 됐다. 정 선장은 13일 소파개정국민행동, 매항리법대위, 전민특위 주축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린 '소파전면개정' 집회에서 이 사연을 털어냈다.

경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정 선장은 "일본 배가 침몰했을 때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사과를 받아냈었는데, 나 때는 경찰이 와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탄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사과 △정 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은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2001년 3월 14일(수)

제 18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섭]

건설노동자 주당 70시간 노동

13일 2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연 '건설현장 노동자의 실태에 관한 공청회'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공청회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영종도공항, 대전지하철 등 관공공사 현장노동자 3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주당 70.27 시간 일하고 있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노동에 대한 근로부나 노동부의 조사나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또한 영종도공항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68.7%가 구두계약하거나 아예 계약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지만, 75%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사실을 몰랐으며, 실업급여도 3%만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선 전국건설노련 정책차장은 "정부주도 관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정부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범용]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표현의 자유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옹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대구지사장은 이상호 씨 등이 조선일보의 과거 친일행각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유인물은 "친황폐화와 황실가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과 의를 다 바치겠습니다"(조선일보 1939년 4월 29일) 등 과거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의 고소에 대해 이유경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홍보팀장은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행각을 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유인물 내용이 과거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에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상호 씨 등은 대구 인물과사상, 대구 희망의시민포럼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범용)

민족자주·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발족식
2001년 3월 14일(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통지서', 그 후 ① 생일날 수감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린' 아내

지난 2월 17일 허미경(35) 씨의 남편은 대우자동차 1750명 '정리해고' 대열에 섰다. 아침에 만난 집배원이 부지런히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어 "다 들리는 거냐?"고 물었다. 남편이 근무하던 설비개선부 '직장'이 "사장이 전사원에게 사과문을 보내니 그냥 받아라"는 말을 들은 터였다. "다 보내는 게 아니다. 정리해고통지서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허 씨는 그 집배원의 방문을 받고 '정리해고통지서'를 수령했다. 믿기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냈다.

14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한 곳에서 남편이 '정리'되는 아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허 씨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속에 열물이 터질 것 같아서" 3월 8일 새벽 부평공장 동문근처로 갔다.

남편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대여섯명 남짓한 사람들과 함께 동문 건너편 신호등에서 서 있었다. 경찰, "아줌마, 여기서 있으면 잡아간다." 허미경 씨, 피켓을 벗어 손에 맡아주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전경이 신호등을 조작해 계속 빨간불이다. 이 때 한 여경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와 상급자에게 물었다.

"실어요?" 상급자, 고개를 끄덕끄덕. 전경들이 차에 신기 위해 허씨를 들었다. 저항했다. 주춤하는 순간, "그냥 실어! 무조건 실어!" 허씨는 전경들에게 다시 들렸고 여경(허 씨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 계양경찰서 여성소년계 이 아무개라고 한다)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 계양경찰서에 들렸다가 서부경찰서에 도착하니 아침 8시나 됐을까.

허씨는 난생 처음 피의자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서부경찰서 지하보호소라는 곳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밤 10시 무렵 유치장에 들어가 9일 아침을 맞았다. 유치장에 있던 어떤 아가씨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거듭 요구하자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깔아놓은 담요를 빼앗았다.

경찰은 연신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누우치는 모습을 보여라!", "양심이 있어야지, 죄 지은 주제에 이것저것 다 챙길려고 해?"하며 욕바 질렀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요구한 그 아가씨는 말대꾸했기 때문에 면회를 중지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금도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발언들이었다.

아침 9시 무렵, 남편이 면회를 왔다고 한다. 면회하러 가자며 수감을 채우려고 한다. 허씨는 "내가 무슨 죄자인가? 수감차고는 남편 못만나겠다"고 항의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훈방이라고 한다.

허미경 씨, 지하보호소에서 나가는 데 형사가 갑자기 수감을 채웠다. 훈방이란 말을 거짓이었다.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텔레비전뉴스에서 나쁜 사람들 잡았다고 나오던 그 모습 그대로다. 허씨는 지난 밤 조사 받던 사무실로 들어섰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수감을 찬 모습을 봤다. 울었다. 허씨도 울었다. 형사가 바로 수감을 풀어주는 했다. 9일이 허미경 씨 생일이었다.

그날 다른 곳에서도 연행된 해고자 가족들에게 수감을 채운 채 면회를 한 사실이 인터넷에 올라온 모양이다. 허씨가 "내가 무슨 죄인이길래 수감을 채웠냐?"고 항의하다 수사계로 걸려온 통화내용을 들으니 은통 수감채운 이야기다. 허씨가 보기에 전화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자 같았다. 허씨는 9일 12시에 서부경찰서를 나왔다.

13일 산곡성당에서 만난 허씨는 "앞으로는 정리해고니 뭐니 하는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며 "기자들이 우리 절절한 심정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다"고 충을 털어놓았다.

15일 저녁 7시 인천 가정동 대우사원아파트에서는 '일터를 찾자'는 주제로 문화제를 연다. 바로 대우 가족대책위(회장 정순희)가 힘내서 싸우자고 다짐하는 자리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1750명이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아낸 지 26일 제. 지난 7일 다시 조업이 재개 후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이르는 도로 곳곳에 진압봉을 하나씩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쏘아보는 전경들과 마주친다.

부평역에서 부평공장으로 향하는 큰 길 옆에 있는 민주당 지구당, 은행 앞에는 어김없이 전경들이 진을 치고 있고, 부평역 마그넷 쪽으로 나가는 출구에도 전경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다. 부평역 광장 로터리 쪽에는 적게는 11대, 많게는 21대까지 전경버스들이 도로에 늘어 서 있고 역으로 통하는 모든 골목, 지하도마다 전경들이 어김없이 지키고 서 있다.

노조사무실 문 용접

부평공장 내 노조사무실은 '월천봉쇄'됐다. 노조사무실로 통하는 모든 통로가 폐쇄됐다. 프레스부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외부에서 노조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용접되어 있다. 식당에서 노조사무실로 통하는 복도와 건너편도 막아 버렸다"고 전한다.

차체 2부에서 일하는 또 다른 조합원은 "12일 대의원이 노조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공장'에 게 걸려 모조리 빼앗겼다"고 전한다. '공장'은 현장 상급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밀어로 직장, 조장 등이 있다. 또 "지난 주 출근할 때 들리지 않고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간 조립 2부 대의원이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동원한 용역들에 의해 순식간에 수거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공장 내에서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자리 비우는 대의원 적어내라"

프레스부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평소에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료들이 자리를 비우면 적어내라"고 압박한다"고 밝히고, 차체2부 조합원은 "공장·직장들이 노조 집행부가 있는 산곡동 성당에도 가지 말고 조용히 지낼 것을 종용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회사는 또 용역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나섰다. 부평공장에서는 용역을 고용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거나 군대를 갓 제대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들은 식당 등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조합원들을 감시"한다. 심지어 지난 주에는 "서너명만 모여 있어도 '무슨

2001년 3월 15일(목)
제 18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이야기하느냐'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 "전경이 4인1조를 이뤄 공장 내 중심도로를 순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출근길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차체2부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출근 때 이용하는 정문, 서문, 남문에 가드레일을 쳐놓고 양쪽에 용역들이 늘어서 있다. 두 명씩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명씩 한 명씩 비표를 보이고 들어간다. 하루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당한 느낌이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또 "출근 때 '공장'들이 문 옆에 서 있다가 부서 대의원을 용역에게 찍어준다. 12일 유인물도 그렇게 뺏긴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상주, 노조원 출입 통제

부평공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은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차체 2부 조합원은 "전경버스가 정문 안 도로에 9대, 주차장에 6대, 하치장에 20여 대가 상주하고 있고, "전경들은 운동장 옆 식당에서 숙박을 해결하다 14일에 구식당으로 숙소를 옮겼다"고 전했다.

애써 산곡동 성당에 있는 노조집행부나 정리해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현장도 부평공장 폐쇄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다. 부평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컨설팅회사의 의견이 발표된 것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측이 최근에 발행한 '한마음'에도 "필요하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또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프레스부 조합원은 "공장폐쇄든 정리해고든 조만간 다시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며 "1750명 정리해고도 정상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GM에 매각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지금 뾰족한 수는 없다"며 "하루빨리 조직력을 복원해서 싸우는 길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 발간!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갖가지 인권사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가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4)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전면광고로 하시죠!"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등은 김 대통령 방문지인 시카고와 워싱턴 지역 한국어 일간지에 국보법 폐지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려 동아·한국·중앙일보 지역판 광고국과 접촉했다. 미주지역 중앙일보는 애초 게재를 거부했고, 한국일보는 "다른 곳에서 내주면 내주겠다"며 유보했다.

그런데 한청련 등이 애초 5단광고를 희망하자 오히려 전면광고가 어떻냐고 권유까지 했던 시카고 동아일보가 광고비 입금 직전에 게재가 안 된다고 통보했다. "부사장이 밖에 나가 누군가를 만난 후 전화로 게재할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광고거부에 대해 한청련 윤대중 회장은 "신문사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도 있지만, 앞 뒤 정황을 생각해보면 부사장이 만난 사람은 영사관 직원이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미국에서조차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카고한국청년연합의 박건일 총무도 "올바른 보도를 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 애써야 할 신문사가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압력에 굴하는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회원 단체인 시카고한국청년연합(회장 김남훈)을 통해 시카고 총영사관에 공개서한을 보내 "(김 대통령이) 평민당 시절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국보법 폐지 및 개정을 수 차례 약속했음에도 집권 4년째인 오늘까지 국보법을 폐지하지는 커녕 국보법 7조 삭제 등의 최소한의

개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의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간지 광고는 그 내용을 시카고지역 동포사회에 넓게 알리기 위해 서었다.

한청련 등이 내려던 광고는 245명의 북미주지역 거주 동포들의 재정후원으로 준비됐으며, 광고 원본 하단에는 재정후원 참여자 서명 또한 포함됐었다. 재미한겨레동포연합과 재미한국청년연합은 지난 84년 결성돼 북미주지역 6개 도시에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 인권 그리고 북미주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심대섭)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국에서 모여든 정규직·비정규직, 강제퇴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5천여 명이 14일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통신은 계약직노동자 7천여 명을 '계약해지'하고, 대우자동차는 1천7백50명을 정리하고 했다. 금융감독위는 지난 1일 한일·삼신·현대 생명보험 3사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는 자정까지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파업중이다. 14일 현재 한성CC 노조는 226일째, 동양기술개발공사 노조는 65일째 파업 중이다.

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고, 동광주병원노조 간부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병원이 계속해서 위장폐업을 한다"고 질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3

월말에 중앙 및 장기투쟁 사업장의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4월초에는 주요 거점농성 등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범용)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14일 오후 2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전농 정광훈 의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2백50여 명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이 출범했다.

민중연대(준)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상설적 투쟁조직의 임무를 다하기로 하였다.

민중연대(준)는 발족선언문에서 "살인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중들의 몸부림 위로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력공포가 몰아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선언문은 이어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사이비 개혁정책마저 실종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준)는 또 "민족민주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결, NMD 반대 등 '민족자주권 쟁취' 등 4대 투쟁방향을 정했다.

민중연대(준)는 팩스와 이메일로 발송하는 '주간민중연대'를 발간하고 중앙·지역의 대표자·활동가 합동수련회를 열 계획이다. 또 3월 31일 1차 민중대회를 열기로 했다.

14일 현재 민중연대(준)에는 민주노총, 전농, 민연련, 사회진보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16일(금)

제 18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경찰청이 국민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시 관리해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동규칙'(아래 계도규칙)은, 91년 경찰청훈령 25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되며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주관하여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정비 및 강화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계도규칙이 규정한 대국민 계도체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계도활동은 '이념계도요원'을 교육시켜 연

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계도요원'에는 우선 경찰관 전원과 고정신고망·특별신고망 등을 이용한 '주민신고 조직요원' 그리고, 통·리, 직장, 부녀계도요원 등 '지역·직장신고계도요원' 및 '택시·버스운전자, 이·미용업소 종사자, 사찰관리인, 우편집배원' 등이 포함된다. 가히 전 방위적인 '국민 이념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벽·오지, 공단 주변, 대학가 하숙촌, 영세민 마을 등은 '이념계도 취약지'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행된 지금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과 교육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마치 박

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반공이념교육을 떠올리게 된다"고 평했다.

계도규칙이 지정한 계도 교육 내용은, △최근 공산권 국가의 동향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도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그 내용은 월간·분기간·연간 단위로 분석돼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국민의 이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만, 국가에 의해 계도되는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계도 활동을 벌이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념계도활동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과 담당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생각을 국민에게 교육만 할뿐이지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념계도활동 내용은 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 범위 안에 있으며 북한이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교육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2000년 7월부터 12월 발행분을 모은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남희섭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 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가단체연합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의 유료화나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음반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P2P, 정보 소통의 혁신적 변화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 방식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웹 기반에 비해 훨씬 발전된 것이다. 소리바다나 냅스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개인이 직접 만나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다. 서버는 파일을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위치(IP 주소)를 넘겨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소리바다는 기존의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유사하며, 개인 간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D로 가지고 있던 음악 데이터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소리바다에 접속한 개인들은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의 소통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저작권법,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다

음악 CD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만든 CD에 갇혀 있는 음

악이 소리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의 판매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 손실이 연간 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농협에 따지러 갔다가 연행 경찰, 농민 구타에 옷까지 벗겨

겨울 대과 수급안정과 대과 계약물량 44.8%(1만여평 분량) 보상 폐기를 요구하던 농민이 경찰에 연행돼 가족행위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소속 진도농민회(회장 김수복) 회원 30여명은 '겨울 대과 대책' 이행을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진도군 지부에 항의 방문을 갔다. 그러자 농협 측이 경찰공권력을 요청, 진도경찰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경찰이 충돌했고 경찰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진도농민회 김수복 회장과 곽길성 사무국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진도경찰서로 연행했다.

진도농민회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곽사무국장이 연행에 대해 항의하자 군화발로 짓밟고 바지를 벗겨 유치장에 집어넣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경찰은 곽 사무국장을 수갑과 포승줄로 묶어 유치장에 7시간동안 방치했다"고 전했다.

전농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관련자 문책 △진도경찰서장 사퇴를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심태섭]

◆ 3월 24일, '사발 나발'에 초대합니다 ◆

- 사랑방 상임·자원 활동가, 후원인 들이 만나는 날-

연 제 :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 전진상 교육관 강당

(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행사 내용 - 사회자 이동수 화백 (인권하루소식 '반화사랑방' 작가)

축하 공연 -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영상 메시지 - '인권운동사랑방의 삶과 운동'

나눔의 시간 - 간단한 다과와 참가자 이야기 마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17일(토)

제 18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

정리해고된 대우노조원과 그 가족들 가슴에 한이 서리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참가하던 대우자동차 차현호(33, 연진부) 노조원의 부인 이옥선 씨가 유산을 했다. 이씨는 16일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끝에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고 이날 수술을 했다. 이씨는 임신 5주였다. 가정동 5거리 연세산부인과 김완기 원장은 "에기집이 밑에 걸려있다"며 유산이라고 진단하고 이씨에 대한 수술을 마쳤다. 수술 후 김원장은 이 씨의 남편 차 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씨는 부평공장 '조업제개일'인 지난 7일 아침 8시 30분 경 백운공원에서 부평공장 출근을 저지하다가 6~7명의 전경들에게 팔, 다리, 머리카락은 물론 가슴까지 잡혀 끌려갔다. 이씨는 이 때 "삼의와 속옷이 목까지 올라가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 사진기 자들과 경찰들이 지켜보게 돼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반대 가족대

<인권하루소식> 합본 15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2000년 7월부터 12월' 발행분을 모은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들어 있어 인권 관련 사건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에기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임신초기라서 많이 배려했고, 7일 백운공원에 나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 씨가 우리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또 "이 분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책위'(아래 가족대책위) 정순희 회장은 "우리들이 '이 씨는 임신부다. 제발 거칠게 다루지 말아라'고 여러 번

이씨 남편 차 씨는 "지난 14일해야 (2면으로 이어집니다. ☞)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가 요란한 정리해고식을 치렀다. 경찰의 과잉출연 속에 시동을 걸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질주하고 또 질주했다. 시민들은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인권단체들은 익히 알고 있던 인권기준들을 모조리 폐차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무기력했다.

계엄을 방불하는 부평역 주변에서 연일 벌어졌던 사건들은 인권침해라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2월 16일 정리해고 당한 1,750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을 위로 받고 구제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검문 당하고, 연행 당하고, 언어타격, 문물 연 체 경찰 앞에서 용변을 봐야 하고, 수갑을 찬 채 가족을 면회하고, 발가벗기우고, 울부짖는 아이와 격리되는 악몽을 겪었다.

노동하고 가족의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도 외면 당했다. 철통같은 봉쇄가 이어졌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허락된 1인 시위도 이들에게엔 그림의 떡이었다. 경찰에게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당한 그들의 신체는 유린당할 대로 유린당했다. 한마디로 대우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에 등장한 다목적 전시물이었다.

대우자동차를 휩쓸고 간 이 폭압은 우리 정부의 인권의식을 발가벗겼을 뿐 아니라, 무력할 대로 무력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말라붙을 때까지, 노동자를 때려잡은 경찰의 의기양양한 무용담이 제풀에 수그러질 때까지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질주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받아칠 정의는 없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경찰과 국가폭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언론들에 한발 날리지 마라. 김대중 정권이 이제 '정리'됐다고 느낄 틈을 주지 마라.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한 법과 인권이란 것의 한계는 뻔하지만 그것으로라도 막과 경찰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 우리들을 다그치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사각하자. 김대중 정권은 인권을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자신의 본색을 철저히 드러냈다. 이 정권에게 심판과 단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겠는가.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16일 2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 대우자동차노조(이하 노조)가 대우자동차회사(이하 대우)를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재판장 권순일, 2001카합 545).

대우 해고노동자 925명은 이미 인천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터라 중앙노동위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조합원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가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는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대우측은 노무담당 김현태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김 이사의 증언을 통해 대우측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한 것은 △대우가 부평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노동자들이 회사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파업과 과격한 투쟁을 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우측의 질문들은 노조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일상적인 조합활동에서 벗어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요?", "본신이나 투신자살 등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지요?", "노조가 경찰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 현실적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리라 예상되지요?" 등등.

노조를 대리한 박 훈 변호사는 이러한 추측성 질문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노조가 과거 불법파업을 했더라도, 노조활동이 설사 과격해질 우려가 있더라도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근거는 없다"며 대우측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조차 굳이 하지 않았다. 교육, 토론 등 노조의 일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후에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때 판단해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결정기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재판장은 뜻밖에 인성을 높였다. "지금 재판장한테 기일을 당장 말하라는 겁니까? 그게 재판장에게 할 말입니까?"라고. 노조가 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결정 지연으로 막혀 있는데도 변호사가 관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장은 박 변호사가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듯 호되게 야단치다 급기야 퇴정명령까지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대우가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합원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하룻밤인 6일 받아들이는 신속한 용단을 내렸다. 반면 지난 7일 노조측이 낸 가처분신청은 9일 만에 열려 심리만 종결됐을 뿐이고 결정기일조차 언제 잡힐지 막막하다.

그 무엇보다 의해서도 도전 받을 수 없다는 재판장의 권위 앞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기약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해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 낸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종결된 후 42일만에 열린 적이 있다.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사회보험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범용)

(- 1면에서 계속됩니다)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았다면서 "아내가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경황이 없어 그 동안 말을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차 씨는 이어 "가족대책위에서 7일 이후 성당에도 나오지 못하게 적극 만류해 그 동안 격한 행동도 자제해 왔다"며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부평공장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은 정환희 노조원의 아들이 평소 양친 심장판막 증세로 16일 밤 병원에 입원했다.

정 씨의 부인 서정심(28) 씨는 3남 3녀 중 장남인 정진(4) 군과 함께 지난 7일 아침 8시 30분 경 인천 백운공원 앞에서 "진료카드를 꺼내 보여줬어도 전경이 방패로 아이를 밀어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또 "효진이 그 때 놀란 이후 자다가도 자지러지게 울고 몸서리를 쳤다"며 "남편이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치료를 해 볼 요량이었는데..."라고 울먹였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김창근 쟁의교육부장은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다. 거기다 임신부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과 똑 같이 대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쟁의교육부장은 이어 "두가지 사례 말고도 오랫동안 임금을 제대로 못받아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며 "정리해고는 더 존중받아야 할 모성과 아동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바로 잡습니다>

2001년 3월 16일 1813호 2면의 '농협에 따지러 갔다가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3월 14일입니다.

◆ 3월 24일, '사발 나발'에 초대합니다 ◆

- 사랑방 상임·자원 활동가, 후원인 들이 만나는 날-

언 제 :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 전진상 교육관 강당(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행사 내용 - 사회자 이동수 화백 ('만화사랑방' 작가) / 영상 메시지 - '인권운동사랑방의 삶과 운동'

축하 공연 -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 나눔의 시간 - 간단한 다과와 참가자 이야기 마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0일(화)

제 18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 한 달, 이후 부평은 '인권침해 종합전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 실태를 조사한 끝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인권유린을 규탄했다.

인권유린 조사결과 발표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9개 인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지무집행법을 무시한 검문, 편치 차림으로 실시한 몸수색, 취재기자 폭행, 임신부 유산' 등 10여 가지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 1백 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이날 회견에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임재환(31, 조립2부) 씨가 직접 나와 자신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했다. 임 씨는 지난 2월 24일 치아 교정 치료를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씨는 2명의 전경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계양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경들

은 자신들의 소속, 이름은 물론 연행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임 씨를 조사하던 계양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욕박지르고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

또 정순희(34,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의장) 씨도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은 아기 아바를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20개월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지난 7일 백운공원 집회에 나갔다가 난생 처음 '닭장차' 신세를 졌다"며 "경찰서에서 아이는 물어대는데 젖병도 주지 않고 뭐라 묻는 말엔 대답조차 안 해주 너무너무 답답하고 무서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또 함께 집회에 나갔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사지를 들린 채 땅에 깔려 연행 당한 이옥선 씨가 지난 16일 유산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정 씨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린이 팔을 비트는 어른의 폭력”

한편 인권단체들은 "무려감에 휩싸인 그들의 엉거주춤한, 연민마저 느끼게 하는 약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경찰의 묵시적 묵살은 폭력과 인권유린은 흡사 어린이 팔을 비트는 우악스러운 어른의 폭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하고,

“부평의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이날 회견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간부들이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서에서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권단체 대표자들의 경찰청 출입을 막아 결국 회견은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 “우리들이 경찰청 기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경찰들이 부평에서는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이 있는 공장 출입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고, 인천시내 전체에 계엄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우노동자들에게 대한 이 같은 탄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찰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 △인권 침해 관련 책임자 사퇴와 해당 경찰관 처벌, △부평 일대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상주한 경찰 병력 즉각 철수, △대우자동차 노동자·가족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회견 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등 5명은 인천지방경찰청장·인천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장·전투경찰대 지휘책임자들을 폭행·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심대섭)

◆ 3월 24일, '사발 나발'에 초대합니다 ◆

- 사랑방 상임·자원 활동가, 후원인 들이 만나는 날-

언 제 :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 전진상 교육관 강당(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행사 내용 - 사회자 이동수 화백 ('만화사랑방' 작가) / 영상 메시지 - '인권운동사랑방의 삶과 운동'

축하 공연 -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 나눔의 시간 - 간단한 다과와 참가자 이야기 마당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여~영자야, 내 딸년아, 몸 성히성히성히성히 잘 있느냐. (중략) 여기에 있는 니 아버지는 사장님이 아니란다. (중략) 서울하고도 시청 앞에서 싸싸 쓰는 청소년란다. 니 미씨팔 사회구조 좇도”였던가? 이제는 가사마저 가물가물해진 이 구전 가요가 떠오른 건, 산골소녀 영자 아버지가 광고출연료를 노린 ‘도시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읽고서이다.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다소 촌스러운 신과조의 가락에 실은 이 노래가 불러내었던 ‘영자’는 잘날 것도, 못날 것도 없는 이 사회의 평범한 여성의 상징이었다.

자신으로선 별날 것 없이 살아가던 강원도 산골소녀 영자가 어느 날 언론에 의해 갑자기 화려하게 호명되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서 정규교육도 받지 않은 채, 자급자족의 촌락 생활을 18년이나 해왔다는 영자의 삶은 이제 어린 한 향수 속에서나 가능해 보였을 대중들의 달뜬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삶을 상품가치로 조작하는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발빠름이 탐탁지 않았지만 몇 안 되는 주파수로만 다른 세계와 교신할 수 있었던 영자에게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가질 권리는 있다고 위안했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기제를 활용해 정신없이 영자의 삶에 몰아친 이 다른 세계는 유감스럽게도 그녀를 불러내었던 열의와 동일하게 그 뒷감당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다.

“이걸로 친구들 다 만나요”라는 광고 멘트가 사실은 휴대폰 없으면 친구 만날 생각도 말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일 수도 있다는 그 아이러니를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영자는 모진 세상의 파고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영자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자못 언론을 뒀던 이가 사기를 치기까지 했다니 안타깝게 혀를 찰 일이지만 그녀를 데뷔시켰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차차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그 거칠 것 없는 물욕의 실상이 얼마나 반인권적인 것인지 다시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말이다.

비만한 체중을 비하하는 유머로 그야말로 ‘영자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개그맨 이영자가 이제는 20kg을 감량하고서야 ‘당당한 여성’으로 복귀하는 현실을 보자니 어쩐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영자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이 씁쓸함이 당치않은 연상작용이라는 생각만은 들지 않는다.

◎ **엄혜진**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주간인권호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1. 도전받는 ‘신자유주의’ 정략해고, 비정규직 컨설팅회사 ‘아더 앤더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 또는 이전 바람직” 보고 (3/14) /민주노총,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비정규직 차별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 (3/14)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쟁취 등 4대 공동강령 채택 (3/14) /신국환 산자부 장관·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유지” (3/15) /민주노총, 서울·각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3/17)

2. 온라인에 자유를! 전교조 등, 한국통신 학교 인터넷 독점-서비스 선택, 탈퇴의 자유 제한 (3/13) /경찰, 자살사이트 운영자 구속 영장 청구 (3/14) /음반업체-불법복제방지 위해 ‘DRM’ 암호화기법 이용 저작권보호장치 도입예정 (3/14)

3. 건강보험, ‘국민은 더 이상 붕이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 (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 잠식’ 예상 (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 (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 (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판매 : 중국-중미관계 악화, 미국 ‘인권’ 연계 저울질 (3/12)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미국이 NMD 체제를 추진으로 핵군축 정체” (3/14) /미국 해군, ‘전역미사일방어 (TMD) 체제 2006년 배치’ (3/15)

6. 교과서 바로잡고 국가범죄 사죄하기를! 일본 교과서 개악저지 운동본부 발족-정대협, 전교조 등 28개 사회단체 참여 (3/14) /일본 문부과학상 문제점 인정,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최초신청본은 불합격 확실” (3/15) /오에 겐자부로 등 일본 지식인, “주변국에 대한 가해사실을 기술하는데 후퇴해선 안 된다” (3/16)

◎ **기타 소식**
고 최종길교수 동생, “형은 중정 교문으로 숨졌다”며 정황증거 공개 (3/12) /부시 대통령, 이산화탄소 규제공약 철회 (3/12) /건설노동자 실태공청회, 주당 70시간 노동 (3/13) /새만금 평화연대, ‘새만금 갯벌 생명살리기 범종교인 기도회’ (3/14) /환경운동연합, 일본 핵연료 선박 대한해협 통과 반대 (3/15) /이산가족 서신 300통씩 교환-분단사상 처음 (3/15) /노동부, IMF 이후 뇌혈관·심장질환 직업병 사망 급증-98년 236명. 지난 해 493명 (3/15)

기고 >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남희섭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이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행위인지 문제로 좁혀진다.

넵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넵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 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해 법원은 넵스터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린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에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담당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복제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가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결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가격 : 1만원(우송료 별도)

넵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넵스터 사용자들의 음악파일 교환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 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비해 법원은 넵스터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린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에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담당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결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

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2조의 규정(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좀더 충실한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주태준 현대생명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오후 4시 민주당사 3층 김중권 대표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대표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김 대표가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당직자들이 농성단을 끌어내기 위해 폭언을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성단은 오후 5시 무렵 당직자들과 협의해 4층 회의실로 옮겼다. 이들은 김 대표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민주당사 농성투쟁에 돌입하며”라는 유인물을 통해 “최근 생명보험 3사에 대해 일방적인 영업정지조치로 생명보험 3사 직원 및 생활설계사 등 7천5백여 노동자들이 생존위기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에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 △7천5백여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정권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기업퇴출이 노동자 퇴출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한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1일(수)

제 18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54년 동안 한반도 위원장 및 지방본부 지부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였던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 아래 철도노조)에서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해 1월 14일 '조합원의 직선·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대의원대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3중 간선제'라는 노조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철도노조가 전국 지부장, 지역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장은 3년, 지방본부 위원장은 5년, 본조 위원장은 10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제외된다. 또 오는 31일 각 지부대회를 열어 약 1백40여 개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결성된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민주철도투본)는 지난

3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노조의 경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원 경력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노련도 위원장 출마자격을 노조원 경력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도다.

또한 선거규정에 소속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출마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철민주)의 이철의 사무국장은 "개정 전 '대의원' 2할 이상 추천 조합보다 훨씬 강화된 조합이다. 과거 투표율을 감안하면 선거에 참가하는 소속 지부 조합원의 반수에 가까운 추천을 받아야 겨우 입후보할 수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실시에 대한 시행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과거 철도노조 선거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지부는 선거함으로 '서류봉투'나 '박카스 상자'를 이용하기도 해 공명선거 시비가 불기도 했다. 철민주 이철의 사무국장은 "지부 선거관리 위원을 현 지부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을 지방본부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시행세칙을 정비해 선거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런 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부장 선거 이후 곧 있을 지방본부 위원장, 본조 위원장 선거에서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일정에 의하면 지부장들은 23일까지 선거공고,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그리고 31일까지 선거를 마무리한다. (심대섭)

남민전 이재문 씨 직권조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삼청교육'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7일 9인의 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79년 유신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된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에 서 병사했다고 발표된 이재문(당시 47세) 씨와 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구(당시 48세) 씨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청교육' 당시 사망한 사건 중 1~2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80년 5월 신군부에 저항하다 사망한 이세종(당시 전북대) 씨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을 받은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심보선)

정보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정권 퇴진촉구 결의대회

· 때 : 3월21일(수) 오후 2시 / · 곳 : 서울역 - 명동성당까지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한국통신 계약직 파업투쟁 100일 결의마당

· 때 : 3월22일(목) 오후 5시부터 8시 / · 곳 :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 주최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전원 석방·정치수배 해제 촉구 5차 문화제

· 때 : 2001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 곳 : 명동성당 농성장

릴레이 단식농성, 새만금 중단 촉구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 새만금 백지화!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백여 환경·종교·지역단체는 지난 19일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상임대표 문규현 등, 이하 생명평화연대)를 발족했다. 생명평화연대는 학계·종교계·교육계 등 전국 1만8천8백75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이달 31일까지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새만금 간척사업 최종정부방침이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생명평화연대 발족 후 문규현 신부로부터 시작된 단식농성은 20일 한국천주교여성수도회장상연합회 오영숙 수녀로 이어졌다. 오 수녀는 "새만금은 전북지역 갯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고,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고 철새들의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 등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새만금 사업을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방조제 공사의 60%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전체 새만금 사업을 고려하면 현재 1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공사비용(약1조원)의 6~7배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철새들의 서식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대통령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유독 농림부·총리실 등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부서의 잇권을 위해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려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오는 21일 농업기반공사에게 주어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립 면허를 농림부장관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신청할 예정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계·학계·법조계 등 100인 릴레이 선언을 이어갈 것이며, 27일 대전충남지역 환경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반대대회, 29일 새만금간척사업 저지 범국민집회, 30일 새만금간척사업 저지 전라북도 군산집회를 계속해서 가질 계획이다. (범용)

◎ 3월 20일(1815호) 3면에 보도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해 민주당사를 점거한'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저녁 8시 40분 경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 필요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는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 및 양심선언'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화운동계승 국민연대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같이 추진한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캠페인에 들어가기 앞서 밝힌 성명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6개월 남짓하다"며 "이 6개월을 그대로 보낸다면 독재정권에 대해 항해 싸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들의 발자취는 그대로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이어 "또 다시 반민특위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인권과 자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끝 만한' 제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의문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나 주변인물의 양심선언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계승 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건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된 조사기간 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작업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제보, 양심선언 등 자료수집 작업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에서 4월말까지 벌일 캠페인에서는 △대자보 사진전, △의문사 사례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의 개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부분을 삭제해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사건까지 확대하고, △출석요구 등을 받은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법관에게 구인장 등을 발부 받을 수 있게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기간을 연장하고 사건 조사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해 캠페인 기간 중에 서명운동을 벌인다. 4월 초에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화국민연대는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박사를 초청, 29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토론회를 열고, 30일 오전에는 란데라 박사, 민간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과 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 및 양심선언' 캠페인은 4월 10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4월 11일부터 4월말까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벌어진다. 공휴일에는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도 4월을 '전국 일제 홍보기간'으로 정해 지하철, 라디오, 전광판 광고, 제보전화 (3703-5000) 설치 등을 통해 자료수집 작업에 나선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2일(목)

제 18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이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인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앞으로는 더욱 더 훼손될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던 민중들에게 주선회란 이름 석자는 전혀 낯설지 않다.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은 97년 1월 20일부터 98년 3월 22일까지 14개월 동안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97년 5월 26일 공무원노조결성 추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7월 8일 공공부문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간부 전원에 구속수사하겠다고 천명하고, 9월 28일 기사자동차 노조파업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98년 2월 12일

민주노총이 파업할 경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에 ‘엄격한 법집행’으로 화답했다.

또 97년 6월 11일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구속자 50여 명에 최고형량을 구형하기로 결정하고, 7월 20일 한총련 미탈퇴 1천3백여 명에 대한 전원수배를 지시하고, 8월 1일 한총련 간부 5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검거를 지시하는 등 한총련 대의원만 되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주 법무연수원장은 또 97년 8월 12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초기 인권영화제 때 개최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싸움이었던 인권영화제가 이제 대학을 벗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을이 아닌 봄에 열리게 돼 시민들과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월 18일(금)부터 23일(목)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열릴 올 영화제의 핵심 기획의도는 ‘5년 동안 꽃피어 살아남은’ 인권영화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봄으로 앞당기는 이유는 △상영된 작품 중 재상영 요청이 들어와도 시기상 재상영이 쉽지가 않았고, △가을에 각종 영화제가 집중 돼 상영장소를 구하는 데 대단히 어려우며, △인권영화제 말고도 다른 많은 일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영화제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다. 이외에도 각 지역영화제에서 보다 치밀하게 영화제를 준비하는 데 과거의 영화제 개최시기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상영예정 작품수는 25~30편이며, 이 중 반 이상을 ‘다시 보는 명작’, 즉 리부전으로 프로그램할 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인권영화제는 ‘제6회 인권영화제’가 아닌 ‘5.5 인권영화제 - 다시 보는 명작선’이다.

‘5.5 인권영화제’에서는 ‘다시 보는 명작선’ 말고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이슈 포커스’를 마련하고,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된 극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실험 영화 등 장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영화 출품작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4월 7일(토)까지.

‘다시 보는 명작선’에서는 <철레전투>,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 불리비아 일기>, <쇼아> 등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천하는 ‘명작’, <열대야>, <인간의 시간> 등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작품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인기작’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5회에서 6회로, 교정에서 도심으로 넘어가는 짐꾼다리 역할을 수행 할 2001년 ‘5.5 인권영화제’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점은 ‘무료 상영 원칙’을 지킨다는 것. 물론 시민들의 소액 후원으로 영화제를 꾸리는 것 역시 변하지 않는 인권영화제의 특징이다. 물론 2002년 봄에 제7회 인권영화제가 아닌 ‘제6회 인권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찾아간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를 내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선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보험 재정이 갈 원인은 의보통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정부의 보험료 인상시도를 국민들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소속 1천5백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요구로 내걸고 연대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 추가 부담이 8조 3천여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의보수가 인상으로 지출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진료비가 연동돼있는 비급여부분과 의료보험·산재·자동차보험 등에서도 이미 4조 4천여 억 원의 국민 추가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금 의료보험 체계는 진료비의 반 정도밖에 보장해주지 않는 ‘반토막 보험’인데 국민부담을 더 늘려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20~30%사이의 보험인상이 실현된다면, 올해 임금 인상요구율을 12.7%로 잡고있는 민주노총은 임금이 오르나마나 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15개 단체들로 이루어진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아래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향후 있을 의료수가 조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99년 의료계·정부·시민단체 사이에 합의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약품 싼거대 가격을 조사하고 약품가격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 위기는 국민 부담을 늘여서 풀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을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감제의료 저축제도’ 같이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획기적 국고 지원 강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현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현재의 위헌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심태섭]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일 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 방침을 천명하고, 12월 26일 한총련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98년 1월 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때도 한총련 관련자가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이영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터여서 주 법무연수원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 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지역안배와 검찰부 고위직 미배정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으로 이루어져, 현 정부가 검찰 개편기를 통해 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범용]

한국영화 출품공고

올해 ‘5.5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한국영화 출품작을 공모한다.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 영화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출품 마감은 4월 7일(토)

문의사항은

Tel) 02-741-5363 / 02-741-2407

Fax) 02-741-5364

◆ 3월 24일, ‘사발 나발’에 초대합니다 ◆

- 사랑방 상임·자원 활동가, 후원인 들이 만나는 날-

언 제 :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 진진상 교육관 강당(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행사 내용 - 사회자 이도수 화백(‘만화사랑방’ 작가) / 영상 메시지 - ‘인권운동사랑방의 삶과 운동’

축하 공연 -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등 / 나눔의 시간 - 간단한 다과와 참가자 이야기 마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3일(금)

제 18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제법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분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 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위헌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유로 △보호감

호는 제법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법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한결같이 "(재소자와) 옷 색깔만 다를 뿐 훈련이나 처우 등 교도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감호결정 여부와 기간도 검사의 요청대로 진행돼 판사의 재량권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가출소율이 80% (사법개혁위 99년 자료) 이상이지만,

대부분 감호기간의 90% 이상을 채운 후에야 가출소(2000년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치고·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경우는 수개월 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방치되었다가 의부진료를 통해 해당암 말기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형법과 사회보호법은 구금과 보호처분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장 아무개는 1심에서 절도혐의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해 절도 전과 2회를 갖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해 출소 후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하숙 생활을 해왔다. [김보영]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령을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정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재정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처분의 주요 범죄유형이다.

사회보호법 1조는 "죄를 범한 자로서 제법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경찰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

대우인천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 등 8명은 기자회견 출입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다. 경찰은 "이미 20일 '소속단체 가운데 불법집회를 행한 단체가 있어 기자회견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며 "왜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노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집회보장,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회견 후 대우인천대책위는 수 차례에 걸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제출했다. 대우인천대책위는 또 '부당한 경찰청 출입 통제·기자회견 방해'에 항의하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평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대우자동차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경찰 기자실 기자회견이 '금지'된 것은 지난 19일 9개 인권단체들이 경찰청에서 가질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을 알리려 했다"며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할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노동위원은 또 "대우인천대책위는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인천 가

톨릭정의평화위원회 등과 함께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이하 발전위)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제동을 거는 한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발전위는 갯벌·수질·경제성·사업 중단 대책 등에 관해 쟁점을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무리한 정책결정보다는 논쟁수습과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자문할 수 있도록 (발전위에)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발전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만금사업이 수 없는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농림부 전경구 사무관은 그간 정부부처간 이견에 대해 "환경부조차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을 우려하며 갯벌 문제만을 마구잡이로 물고 늘어지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강력한 사업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환경부 수질정책과 담당자는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경강의 부영양화가 우려되고 특히 16km나 되는 2~5구간은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여 수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이라며, 농림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문제제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부논의가 마치 불난 집과 같다"며 일절 논쟁을 거부했다.

한편 녹색연합 남호근 간사는 "발전위의 기자회견은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한 정부방침이 나올 때까지 새만금사업 반대선언 및 쉼기대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4일(토)

제 18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작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체는 "경찰의 전면 수사방식은 징병제의 문제점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는 매우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하며, 이를 경찰이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 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역 문제를 감히 입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경찰 발표이후 집에 못 들어가는 '안티미러터라사이트' (<http://non-serviam.org>) 운영자 조약골 씨는 "병역거부를 선동한 적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나는 전쟁 없는 세상을 바란다. 그러나, 폭력 지향적인 군대가 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군대를 반대할 뿐이다"고. 또한 "지금 경찰에 출두해봐야 내 생각은 싸움도 안 먹힐 것 같고, 암담하다. 사방이 벽으로 느껴져 극단적 해결책만 떠오른다"며, "징병제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저들의 먹이감이 되었다"고 쓰게 웃었다. 조 씨뿐 아니라 다른 두

사이트 운영자들도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꿩고 품이었으면 하는 생각만 든다"고 하소연한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자살-폭탄-병역 시리즈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확실하게 '찍혔다'는 점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현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현재의 별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며 "교도소가 아닌 보호감호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현재의 논리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청송'의 수인들은 분명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들이 교도소와 똑같은 시설에 구금되어 교도관의 관리하에 교도소 이상으로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화'라는 사회보호법의 취지도 이 법 20년의 역사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송'이 '교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광적인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음은 많은 출소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이며, 사실 '청송'에 수감된 많은 수인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좁도독질과 싸움질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늙어가는 무력한 전과자들일 뿐이다. '범죄는 사회가 생산해내는 병리현상'이라는 진리를 외면한 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 엄벌 일반도는 애당초에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보호법의 본질이 결코 이 사회를, 따라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해(威嚇)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현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걸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해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이렇게도 참담하다.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해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근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분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동 대표자회의 및 향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을 지휘감독했던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의 관계자는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 전세버스를 막은 사실은 있다"고 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률원 측은 "인천에서 열릴 집회를 우려하여 노동자들이 탄 전세버스를 부산에서부터 막은 것은, 위의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불법연행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은 있었지만, 집회참가 자체를 봉쇄한 것에 대해 해당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금속연맹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및 길가던 시민을 경찰이 강제연행·구금한 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용)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지난 3월 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을 향의방문하려다가 붙잡힌 대학생 18명 중 최○○(25, 외국어대) 씨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23일, "연행당일 목비권을 행사하자 조사2계 장성규 경장이 'X' 같은 년',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신분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지갑을 찾는다며 강제로 사지를 붙잡고 운명을 만졌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안 사람들은 '가혹행위 불법수사 규탄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5일 경기동부총련, 경기동부 여성연합(의장 김기창),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향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질타에 의한 징계, △제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 10일 청문감사실 김재호 주임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조사과정 중 욕을 하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사실"임을 밝혀냈고, 가해경찰관 3명을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12일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또 성북경찰서는 17일 최씨에게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경찰관들의 성추행사실을 부인했다. 경찰관들이 지갑을 찾기 위해 최씨의 사지를 붙잡고 몸을 만진 사실은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언어폭력에 성추행이다"고 반박했다.

'사 발 나 발'

오늘! 임니다

사랑방의 상임·자원활동가·

후원인들이 만나는 날

연제: 3월 24일(토) 오후 3시~7시
어디서: 전진상 교육관 강당(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계성여고 후문 앞 ☎ 02-776-1712)

이번 사건으로 성북경찰서는 홈페이지(<http://sb.smpa.go.kr>) 게시판에 '피의자조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인권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지의 공고를 했다. (김영일)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경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동구청의 행정 행위가 홍익회 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신청에서 쟁점이 됐던 복수노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결정문에 없었다"고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심태섭)

(1면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유해한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목소리가 독주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넷 장영경 정책실장은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온라인을 장악할 명분을 조성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며, "이번 일 역시 인터넷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보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녀 사냥의 연장'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조씨 등은 "징집제 거부 선동하는 병역기피 사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소동'을 증폭시킨 연합뉴스 김 아무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7일(화)

제 18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도급계약 노동자가 실제 파견관계에 있다면, 파견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칙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을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에 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따라서 SK와 같은 주유소 업계의 LG, 한화, 현대 등이 대부분 도급을 위장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도급으로 위장하여 파견된 노동자들의 고용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참터 배동산 노무사는 합법형태의 파견보다 불법적인 파견이 더욱 많은 현실에서 "이번 결정

은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SK 인력팀 담당자는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채용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계약직을 제안했으나 그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에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해고자 지씨의 주장에 의하면, SK가 2001년 초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다른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3개월만에 다시 도급형태로 전환한 적이 있어서, 계약직 채용의 의도를 의심케 했다.

한편 이번 결정 후 사용주들이 용역업체를 계속 바꾸어 가며 파견노동 형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보다 철저히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파견제도가 악용되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기 위해서는, "파견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에 대해 SK는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지무영 씨 등은 자신들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결국 작년 1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따라 지씨 등 4인은 같은 달 9일 및 27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황씨의 해임이 보복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영원)

한국영화 출품공고

올해 '5.5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한국영화 출품작을 공모한다.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출품 마감은 4월 7일(토)

문의사항은

Tel) 02-741-5363 / 02-741-2407

Fax) 02-741-5364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개입'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 단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반인권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정권인 현 정부에 대하여는 다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성을 방어해 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결코 자랑할 것도, 치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누적인 폐해로서 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석고대죄'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집회와 시위는 바로 그러한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의 결함과 실패로 희생된 무고한 인간들의 외침과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는 모두가 겸허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 만을 되뇌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오만한 일일뿐만 아니라, 경제의 결함을 곧 인권과 법의 실패로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일이다. 무릇 법집행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대개 권위적 우세와 더불어 가치적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간적 질규까지도 짓밟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예컨대 부당한 폭력시위를 엄단한다는 것과 같은 우월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수가 많다.

나는 수업시간에 법의 사명은 폭력의 순화와 통제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 '법'을 행한다면, 오히려 폭력적 충동에 빠지게 되고, 실제 그런 행동을 낳기도 한다. 특히 우리 아이에게 말이다. 왜 그렇게 나는 쉽게 소위 '위협형' 아버지가 되는가? 보다 나약한 대상에 대한 힘의 확인의 충동과 같은 어떤 존재론적 폭력성을 접어 둔다면, 그것은 아버로서의 권위와 더불어 보다 더 잘 알고 현명하다는 어른으로서의 인지적 및 도덕적 우월의식에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법과 폭력, 도덕과 폭력은 서로 상극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다. 인간의 의지란 간사한 것이다. 모든 법적, 도덕적 권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정태욱(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간인권호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
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 박종철·이한열·동아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민주화운동 인정(3/20) / 민주화국민연대, 양심선언자
찾기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캠페인 시작(3/21)

2. 이어지는 '새만금' 중단 요구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발족,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3/19)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위, 새만금사업
중단 촉구(3/19) / 대통령소속 지속발전가능위, 대통령에
게 "새만금 사업 결론 유보" 건의(3/22) / 조계종 중앙회,
새만금 중단 촉구(3/23)

3. 대우 '부평', 집회를 보장하라
9개 인권단체, '부평'의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3/19)
/ 대우 인천시민대책위, 대우 관련 집회보장 요구, 경찰
서 앞 1인 시위(3/21) / 금속연맹, '대우' 집회 참가 막은
경찰관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3/23) / 금속연맹, 경찰 봉
쇄로 또 다시 인천대 화염병 시위(3/24) / 주한 미상의회
장, '대우자동차 공짜매각' 발언(3/24)

4. 현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
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 현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라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
상 반대, 포괄수가제로 전환 등 의보개혁 촉구(3/20) /
민주노총, 임단협에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핵심요구로
내세우기로(3/21)

6. 경찰, 마녀사냥 통해 병역논의 '차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 평화인권
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 (3/23)

7. 국가기관 결정에 옳고옳은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흥익회 본부가 제출한 '흥익매점 노조필증 교
부' 가처분 신청 기각(3/20) / 서울지노위, '노조활동한
래미콘 운송기사들 원직복직' (3/20) / 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100일째(3/22) / 서울지노위, '파견노동자 2년 지나
도 채용 안 하는 것은 부당해고' 결정(3/24)

8. 미국이 개입되면 한국은 정신을 못차린다
경찰,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에서 문정현 신부 구
타, 인권활동가에 폭언(3/23) / 경찰,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무원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3/24) / 소과개정 국
민행동 등 3개 미군관련 단체, 검사파면 요구(3/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8일(수)

제 18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경찰폭력이 끝간테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의사표현 기회를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목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석해 경찰이 아침 출근길 교통혼잡을 일으키며 집회참가를 막아섰다(2월 22일). 경주에서는 부평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3월 6일)하기도 했다. 전남 진도에서는 농협에 항의하던 농민회원의 목을 짓밟고 수갑을 채우는 만행도 보고됐다(3월 14일).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전에 없는 듯 하다.

막 나가는 군산경찰 사제에겐 군화발, 여성에 성 폭언

인간의 존엄성이 경찰의 몰상식과 비이상 앞에 얼마나 쉽게 땅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태가 군산에서 발생했다. 군산미군기지 되찾기 금요일 집회는 4년째 매주 금요일 군산미군기지 정문앞에서 열렸다. 그러나 23일 군산경찰이 금요일집회를 봉쇄해 미군기지 정문에서 평소보다 100여 미터 더 뒤로 밀려나 집회를 했다.

134 <인권하루소식> 합본 16 호

경찰은 집회 후 5시경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뒤풀이를 하려던 군산미군기지우리평창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를 군화발로 짓밟고 뒤돌아선 노동자를 발길질했다. 문 신부는 4시간 동안 격렬히 항의하다가 밤 9시경 사북경찰 대여섯 명이 문 신부를 '작은자매의집' 근처까지 강제로 옮겼다. 작은자매의집은 문 신부의 거처.

문 신부는 자신을 강제로 옮긴 것에 항의, 경찰차 안에서 폭박도 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외인권연대 공동대표)는 밤 11시경 '작은자매의집'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사북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문규현, 문정현 다 나와! 나도(성이) 문가인데, 오늘 나 옷 벗는다. 한번 해보자"라고 흥분했다. 그리고 문규현 신부의 목살을 붙잡고 발로 걷어찼다.

그 경찰은 옆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 인권활동가에게도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폭언까지 퍼부었다. 이후 이내연 군산경찰서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성적 폭언을 퍼부었던 경찰은 특검대장 문승태 계장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적 폭언을 들었던 여성활동가는 "그 경찰이 '희식하다 불려왔다'고 '발광'하며 술 냄새를 풍겼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회원 30명은 이튿날 새벽 2시부터 군산경찰서 앞에서 밤을 새워 경찰의 폭력·목살에 항의하며 △평화집회 보장, △경찰폭력 공개사과, △성폭언경찰 징계를 요구했다.

이내연 군산경찰서장은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만나 "평화집회는

보장할 수 있으나 공개사과는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성폭언을 자행한 문 계장에 대해서는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되뇌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27일에도 배회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만났으나 대답은 군산경찰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여성단체연합 오수연 성과인권위원회 간사는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게 문 계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심한 성적 폭언을 들었던 피해 여성인권활동가는 문 계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19개 여성·인권단체, 경찰폭력 규탄

한편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산인권센터, 한국여성성문화연합 등 19개 여성·인권단체는 경찰이 자행한 여성인권활동가에 대한 언어성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술에 취해 문규현 신부의 목살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여성인권활동가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군산경찰서 문승태 계장을 파면하고, 여성활동가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3월 23일) 집회봉쇄, 욕설과 구타, 성폭력 언사까지 일삼는 것은 경찰의 공무수행이 아니"라며 23일 자행된 일체의 경찰폭력에 공식사과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부산, 신고한 집회마저 가로막아

부산에서도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시위용품으로 신고한 자전거가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금속연맹 부산양산지역본부 사직운동장에서 '정리해고 분쇄 및 김대중정권 퇴진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후 1백여대의 자전거를 (= 2면에서 계속됩니다)

아시아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의 퇴직금 소송", "안산경찰서, 중국인 노동자 살인누명 씌워 가혹행위", "베트남 여성노동자 리아 사망사건". 기존 언론에선 사회면 한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아 워커스뉴스'(Asian Worker's News) (편집실장 정윤식, 아래 AWN)가 지난 25일, 발행 4년만에 제호 100호를 돌파했다. 이는 전국에 배포되는 이주노동자 소식지로는 처음이다.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대표 정귀순)에서 발행하는 AWN은 97년 3월 창간해 격주마다 발행되는 소식지로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국의 소식과 중요한 이주노동자 관련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해왔다. A4 용지 8쪽 분량으로 발행돼 처음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배포됐지만, 지금은 우편을 통해 전국에 퍼져있는 이주노동자 상담소와 현장에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직접 배달되고 있다. 또 한글과 영어 양쪽 모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AWN은 중요 기사를 뽑아 인도네시아어·중국어·베트남어 판을 만들어 1개월에 한 번씩 모아 내기도 한다.

AWN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민감한 고용허가제·출입국 관리법과 같은 한국법령, 원화 대비 자국환율 등 경제소식, 임금체불 해결사례·산업재해 보상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AWN은 또한 '운나드카바안(필리핀)', '카와사키 시티 유니온'(일본) 등과 같은 해외 이주노동자 상담단체도 정기구독한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이윤주 사무국장은 "AWN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고 현장성 있게 전달해왔다"라며 "AWN이 다루는 현장 상담사례, 이주노동자 관련 소식들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련단체들에게도 쓰임새가 많다"고 평했다.

AWN 편집실은 기자, 번역, 교정, 편집 등 모두 3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은 대학생, 직장인, 타 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자원활동가 등으로 다양하다. 편집부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편집회의가 주로 편집부 전용 BBS나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것도 독특하다.

AWN 김민정 제작부장은 "AWN 기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AWN 제작에 참여해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AWN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이라고 100호 발행 소감을 밝혔다.

발송료만 받는 우편 구독 신청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으로 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051-802-3438, 홈페이지 주소는 <http://any.to/fwr> 이다. 한글판은 진보네트워킹 메일링 리스트(<http://mail.jinbo.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태섭)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한국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다시 5년 동안 추가 연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y regret)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아주 조속한 시일 내(in the very near future)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추가유예한 것은 심각한 퇴보(serious setback)"라고 평가하고 "노사정위가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제안을 낼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관한 노사정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ILO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 제소한지 1달여도 안 되고, 노사정 위원들이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노사정위 합의사항'이라고 변명했음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는 ILO 이사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중연대(준)은 27일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금지'를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심보선)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용해 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았다. '노동자퇴출 중단', '김대중 정권 퇴진' 등 구호가 적힌 몸벽보를 붙인 채 행진하려던 조합원들을 6백여 경찰을 동원해 겹겹이 에워싸고 자전거 행진을 막았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인도로 몰아 붙이고 행진을 가로막을 뿐이었다. 부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경찰이 방송차량을 통해 폭력집회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차량을 '탈취'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집시법상 주변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에 집회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부산인권센터 이재학 씨는 "자전거 사용을 못하게 하고, 방송차량을 빼앗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교통혼잡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용,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29일(목)

제 18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 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현, 아래 한총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회법사위에 보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서 "한총련은 해마다 직접·비밀투표를 거쳐 구성되는 전국 규모의 총학생회 연합체이고 공개 대중조직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년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 손으로 뽑는 꼴"이라며 "김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조성된 지금 한총련 이적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고 주장했다. 국보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98년 '이적단체'로 판결한 5기 한총

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유효성 △한총련이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9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이적단체'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구속 또는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의 수배해제 및 석방 석방용의 △2001년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는 오는 4월 5일부터 개최될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공안당국의 간섭 없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변한 것이 없다"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매년 수배되고 구속되는 현 상황을 당국이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알고 싶어 공개질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집중사업으로 붙잡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보 샘 ◎

- KBS 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가해자 처벌 촉구, 사건 완전해결을 위한 2차 집회
 - 일시 : 2001년 3월 29일(목) 12:00 정각
 - 장소 : 여의도 KBS 본관 1BC 입구 앞 (한나라당 당사 뒤, 국가보훈처 건너편, 보이스카웃연맹 옆)
 - 주최 :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초청 강연 및 토론회
 - 초청강연: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파즐 라데라 위원
 - 발제: 김동춘교수(진상규명·과거청산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경과와 내용)
 - 시간 : 3월 29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명동성당 가톨릭 회관 7층
 - 공동주최 :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지난 97년 5기 한총련이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김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다. (심태섭)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공대위)도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동기본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씨는 "이번 권고는 복수노조 금지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한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 공무원 단결권 침해 등 정부가 광범위하게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걸 지적했다"며 "다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공무원들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태섭)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장애인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기 까지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고등교육이든 중등교육이든 가리지 않고 "사정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다"는 학교측의 되뇌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장애학생들은 의욕을 접어야 한다.

박지주(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매번 도움을 부탁하는 것도 피말리는 일"이라며 결국 휴학을 했다. 박씨는 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 문제는 "학교 당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숭실대 최재용 시설계장은 장애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며 "그러나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신축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숭실대의 각종 건물을 돌아본 장애인고등교육센터 김형수 간사는 "대부분의 신축건물은 강의동이 아니며, "경사로를 설치해도 경사가 너무 급하고 좁아 계단보다 못한 꼴"이라며 숭실대 편의시설의 실상을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이 10분이면 할 일을 장애학생들은 1시간이 걸릴 때 이러한 학교 측의 노력조차 장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더디게 느껴진다.

한편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01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중 광주자연과학고에 배정된 7명 중 3명의 입학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광주자연과학고 김선덕 교감은 "이미 특수교육대상자가 8명이 있고 특수학

급이 1개 밖에 없어서 4명만을 받아들였다"며 "입학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적정원의 10%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에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수가 12명이 넘을 경우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입학에 거부당한 3명 중 2명은 광주정보고등학교에 재배치되었고, 1

명은 진학을 포기하였다. 광주교육청 정인국 장학사는 "모든 것이 부모와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진학을 포기한 학생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중군 간사는 "입학을 환영하는 학교를 보내는 것도 두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 부모들을 대변했다.

이어 "광주자연과학고가 입학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진학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학생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용)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위를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인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5%로 9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제기하는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이다. 장시간노동, 갑근노동, 작업장내의 성희롱, 성폭행, 건강과 의료문제로부터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노동자의 매춘, 인신매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위를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는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관 이금연 관장은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의 모경순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로서, 계다가 여성으로서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며 설립취지를 밝혔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져 사업을 논의하고 각 단체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

올 한해 사업으로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국제결혼 가족모임 구성 및 지원 △정책워크숍 및 실태조사와 자료집발간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 비준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 문제와 대책'에 대한 워크숍으로 발족식을 대신하고, 법무부에 결혼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F-2(거주비자)에 관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30일(금)

제 18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서울의 새벽 올린 노동자 절규

한국통신 비정규노동자, 목동 점거투쟁

“정리하고 철화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이 깊이 잠든 서울의 새벽을 갈라냈다.

29일 새벽 3시,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 조합원 2백여 명은 서울 화곡전국 목동분국을 기습 점거하고 5시간 30여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농성은 긴급 출동한 6백여 명의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되고, 흥준표 위원장을 비롯한 농성 참가자 1백98명은 전원 연행돼 현재 서울 시내 14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다. 연행된 조합원 전원은 목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조합(아래 한통계약직노조)은 지난해 말 사측이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중 7천여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에 반발해 2000년 12월 13일부터 1백7일 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이번 점거 농성은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하고, 2월 10일 이후 사측이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청원경찰을 동원해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며 노조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보겠다”는 결의로 지난 25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의결·추진된 것이다. 한통계약직노조는 점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곧 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에 파열구가 뚫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리하고 분쇄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힘이 하나로 모일 때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은 밀어 부칠 수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통계약직노조가 목동전화국을 점거하고 입구에 트럭·오토바이 등으로 차단벽을 설치하자 경찰은 헬기 1대, 경찰특공대 1팀, 경찰병력 5개 중대, 여경 1팀 등 6백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했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소방호스로 물을 쏟아 부어 신속하고도 치밀하게 농성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 미상의 조합원 1명이 실신해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이 조합원은 응급실로 들이닥친 사복 경찰 15명에 의해 양친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들은 몸도 성하지 않은 환자를 연행하며 담당 의사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한통계약직노조의 점거 및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 민주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 10여 개 노동·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한통계약직노조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이어 두 달이 채 안 돼 다시금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연행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통계약직노조 이춘하 상환실장은 “지금 한국통신은 이미 정리해고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1천6백여 명 가량 퇴직시킬 예정”이라며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 아래서 노동자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생존권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통계약직노조는 지난 파업기간 동안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5차에 걸쳐 총 84일 간 노동 투쟁을 벌였다. 영하 10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의 낮과 밤을 비닐과 담요 한 장으로 버티던 가운데 조합원 이동구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겨 올 2월 15일 이후 줄곧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현)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 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관의 위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찮게 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관에게 판결선고전에 판결주문을 누설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그 기본요체”이며,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행정 감독권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실무편람’이 “새로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돕기 위한 명분을 새웠으나, ‘실무편람’이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서 사실상 법관을 구속하는 작용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은 △반복적 음주운전자, 상습 소액절도나 사기범에 대해 단기 실형선고를 해야 하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이른바 ‘타협판결’을 지양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재판이 지연될 때,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오도하려고 할 때’ 등에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원의 오만함과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이 법원에만 가면 왜 움츠러드는지를 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보선)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분납, 은행이체, 지로 가능합니다
문의 : 02-741-5363(담당: 이창조)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지난 3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및 3천여 민간단체 대표가 모여 세계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회의의 의제는 사회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문제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 이주노동자, 난민, 선주민 등 소수자의 인권, 작년에 처음으로 ‘인권’으로 인정된 발전권, 민족자결권 등 인권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 외 모든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올해 8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철폐 국제기념일이었던 21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41년전 남아공에서 일어난 셰퍼빌 학살을 애도하며 남아공에서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찬사를 표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경제적 불평등, 무지, 차이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이 인종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며 오랜 인종주의의 역사를 끝내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로 만들 것을 희망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양자 간의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에리트리아와 에티오피아, 콩고의 분쟁 해결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우려를 표했다. 아난 총장은 아프리카 문제의 근본원인이 빈곤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이 최빈 개도국에 대해 유리한 무역조건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며 카타르에서 있을 WTO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나 쿼터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3월 22일의 자결권 및 민족의 권리 관련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국가 대표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내 이스라엘 군의 철수와 대화재개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의 폭력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해군 기지가 있는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의 거주자 권리, 카슈미르 지역 주민의 권리 문제도 또한 제기되었다.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솔레 라미도는 빈곤은 존엄한 삶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난과 질병, 특히 가난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는 세계화가 개도국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인종주의 관련 회의에서는 국가와 NGO 대표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몇몇 NGO 대표는 9월 개최될 반인종주의 국제회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대(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는 NGO의 회의참가가 제한되고 있음을, ‘남아시아인권자료센터(The South Asia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는 회의 의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빠져 있음을 비판했다. ‘고문반대 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against Torture)’은 회의의 주제가 외국인혐오증과 기타 차별로 확대된 것은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려는 서방국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유엔인권위원회는 4월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3월 31일(토)

제 18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첩관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대우자동차가 부평공장 노조 본조 사무실을 노조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옮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오전 9시 무렵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남문 쪽에 있는 노조사무실 집기를 부평공장 서문 쪽 가건물로 옮기려다 노조원에게 발견돼 대우자동차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집기를 다시 원상회복 시킨 것이다. 우성익스프레스 관계자는 30일 "회사연락을 받고 가진 갔지만 주인이 반대하는 데 우리가 집기를 옮길 이유가 없다"며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는 한 옮길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노조사무실 이전 협의요청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바로 조합원들이 현재 위치의 노조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에서 무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무실 위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접근이 봉쇄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평공장 서문 쪽의 담장을 헐어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현장과 접하는 3면은 "2미터가 넘는 철제담을 세워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새로 시설을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문 쪽으로 옮길 경우) 일과 때 노조원들이 노조사무실에 올려면 사실상 외출증을 끊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부평공장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노조집행부와 현장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평공장에 출근하는 노조대의원들이 노조집행부가 있는 산곡성당에라도 왔다가면 관

〈논평〉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서울 화곡 전화국 목동 분국을 검거한 200명의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5시간만에 경찰 특수부대에 전원 연행되었다. 왜 점거농성이냐고 하는가?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막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한국통신 측에 대해 치미는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1만명을 넘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말이 계약직이지 사실상 정규 업무를 보면서 10년 20년을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반도 안 되는 월급에다가 휴일도 4대 보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 1000명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작년 11월이었고 이어서 12월말에는 추가로 무려 6000명이 잘렸다. 특히 우리가 한국통신을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점은 우여곡절 끝에 아주 어렵사리 계약직 노조가 설립된 직후에 이 대량 계약해지가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12월 13일부터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이 필수공기업으로 분류됨에도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이례적으로 합법파업으로 인정해준 것은 그만큼 회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나 일방적 대량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00일 넘는 노동자들의 고난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내내 진행된 농성 과정에서 반신이 마비되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3명이 구속되고 18명은 회사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정부가 이 과정에서 한 일이란 주문처럼 "신속한 인력 감축, 구조조정"을 되뇌는 일뿐이었던 것이다.

목동 전화국을 점거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점점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실업과 비정규직 사이를 집적처럼 왔다갔다하는 존재..., 도대체 이런 오늘날의 노동자의 처지가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30년 전 노동자의 처지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나아졌단 말인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방적 계약해지, 버랑에 물린 투쟁, 강제진압..., 계약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게 된 오늘, 우리는 이런 풍경에 점점 익숙해져간다. 목동 전화국 점거는 노동자의 고통에 무디어지는 세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무디어진 가슴을 쳐서 아파하라. 사람이 현실팩처럼 버려지는 시절, 희망은 그 아픔과 더불어 싹트지 않겠는가.

리자가 산곡성당에 간 이유를 추궁하는 마당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간다고 외출증을 끊을 수 있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조합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부평공장 현장에서 조합활동을 사실상 중단 돼 있는 상태다. 어쩌다가 "대의원 몇몇이 선전물을 유통케 했기"고 들고 들어가 현장에서 배포해도 (=>2면으로 이어집니다)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 조항으로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자주적 단결권 완전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민주노총 서문본부, 파견철폐 공대위, 흥익매점노조 등) 소속 50여 명은, 30일 10시 30분 한국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 규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ILO(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금지 재개정 신속이행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28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재개정하라는 ILO의 권고조치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합의한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채워졌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사무국장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주적 단결권 쟁취의 역사였으며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흥익매점노조 전평호 위원장은 흥익매점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도노조 흥익회본부(한국노총 산하)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대해 고발했다.

한편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정책팀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계약직원을 자유롭게 늘리자고 논의한다며 이를 "추악한 뒷거래"라고 표현했다.

이날 규탄의 대상이 된 한국노총도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노진규 정책본부장은 "ILO가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리라 예상"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돼야 한다고 인정은 했다. 그러나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현식 사무관은 "ILO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권고한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로 일체의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31일 민중대회 이후 4월 3일 한국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또 다시 집회를 열고, ILO 권고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범용)

"시위만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경찰, 고무총탄 도입까지 고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신종화염병 제작법이 게시됐다"며 기자들을 모아 '시연회'를 열고, "신종화염병을 사제폭발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1일 민중대회 현장에서 화염병이 나올 경우 최루탄은 쓰지 않겠지만 형광색 소를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30일 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들 가운데는 "화염병 대응 방법으로 고무총탄을 사용하자"는 방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거다.

이처럼 경찰이 연이어 집회 및 시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자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화염병을 핑계로 시위자체를 완전봉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언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말하는 '신종화염병 제작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이미 18일이 지났고, 그동안 '신종화염병'이 실제로 사용된 적도 없는데 경찰이 강경진압할 명분축적용으로 이용, 실제로 물대포, 고무총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에서 "군사정권 시절 경찰이 요즘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화염병 시위는 늘어만 갔다"며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염병 시위를 '시위 문화' 차원으로 또 경찰과 시위대와의 대결차원으로만 다루는 한 이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대섭)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매항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국민대책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퇴장기공대추진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보도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20%인상' 움직임

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민행동 김관태 사무처장은 미국정부에 △분담금 20% 인상강요 중단, 한국정부에 △29, 30일 진행된 분담금 협상 내용을 공개를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여 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정부시설과 구역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 외에 는 미국에 다른 경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경비를 비롯하여 현재도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김영원)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용역이 즉시 회수하는 지경"이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사무실을 옮기려는 이유에 대해 "부평공장 폐쇄 이야기가 나돌고 숨막히는 분위기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사무실을 구석으로 옮겨놓고 조합활동을 형식적으로 인정해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노사협력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회사는 합법적으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처지를 감안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문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합원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노조간부들은 현장에 해를 미칠 위험"이 있어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작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작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회사는 또 노조사무실을 감옥처럼 만들어놓고 노조의 동의도 없이 노조사무실 집기를 옮기려 하기도 했다(3/27). 한편 인권단체들은 '부평'의 인권유린을 조사한 끝에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고, 이들을 고발했다(3/19). 인천지역 사회단체들도 경찰이 대우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 '계엄상황'을 연출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3/21)

2.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 집회·전화국 점거·화염병...

정규직 노조가 규약을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고난의 파업' 263일 끝에 이랜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3/6)했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등 5천여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김대중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3/14). 지난 연말 7천여 명이 '계약해지'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1백일이 넘는 파업을 하다 3월 29일 새벽 목동전화국을 점거해 서울의 새벽을 뒤흔들었다.

3. 복수노조 유예 - ILO, 신속히 개정해 단결권을 보장하시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는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었다. 국회는 5년 동안 복수노조를 유예, 비정규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해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이해를 실현시킬 길목을 가로막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3월 2일 단결권 보호 위반으로 ILO에 제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신속하게 법을 재개정하라'고 권고(3/16)했다. 이어 ILO 이사회는 28일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수정없이 의결(3/28)했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배려한 권고라고 우기고 나섰다(3/28). 한편,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은 정부가 신속히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재개정을 촉구했다(3/27, 28, 29).

4. '국민의 일상, 생각,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이념을 계도할 목적'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약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통제돼야하고 금지되어야 할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 스티커 등을 지하철, 버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관리자까지 지정하며 설치하고 있다. 정작 국정원의 담당자도 '좌익사범'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른다. 또한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미아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5. 기본권 억압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97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주선회 전 법무연수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됐다(3/23).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가 합헌이라고 결정(3/21)한 바 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져 술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최고 7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감옥생활을 했다.

인권이야기

- 추천인 제도를 추방하자-최민식(3/13)
- 우리 시대의 영자들-엄혜진(3/20)
-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정태욱(3/27)

기고

- 국회 법사위원회 공청회 참관기-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곽노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하) (남희섭,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논평

-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3/3)
-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3/10)
-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3/17)
-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3/24)
- 왜 점거능성이냐고 묻기 전에(3/31)

지방노동위·행정기관 결정

-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2/28)
- 서울지노위,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인정"(3/21)
- 울산동구청, 홍익매점노조 신고필증 교부(3/2)
-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중지신청(3/9)

법원 판결

- 서울고법,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판결(3/23)
- 울산지법, 홍익매점 노조필증 정지 가처분 기각(3/20)

인권단체

- 이주·여성 인권연대 발족-이주여성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3/28)

인권하루소식

2001년 4월

(제1825호 - 제1843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3일(화)

제 18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못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나이라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까 붙고 있어!” 「뻑!」 누군가가 내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 때렸다. 그는 곧 이어 나를 발로 걷어찼다. 다른 경찰들은 그를 구 부장이라 불렀다. 갑작스런 구타에 깜짝 놀라, 나는 엉겁결에 구 부장의 등을 발로 찼다. 이성을 잃은 구 부장은 주먹으로 내 오른쪽 턱을 가격했고, 이어 주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집단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한 경찰은 목을 팍 조여 숨조차 쉬지 못하게 했고, 주먹질과 발길질은 끊임 없이 이어졌다. 나는 결국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경찰들도 놀랐는지 곧바로 집단폭행을 멈췄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적인 욕설은 계속 이어졌다. “종간나 새끼! 너, 죽어버린다.” “너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할 가치도 없어!”

문 잠근 채 집단 구타

지난 3월 31일 민중대회에 참가했다가 강제 연행된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 정원철 조직부장이 남대문경찰서(서장 강영규)에서 겪었던 일이다. 정 부장은 이상원 경장, 임한순 경사, 송원주 경사, 구형서 '부장' 등 가해경찰들이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밝혔다. 정 부장의 오른쪽 아랫입술은 안팎으로 찢어져 있어, 구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었다. 정 부장은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안에 문을 잠근 상태로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극도의 공포감마저 느꼈다고 했다.

경찰, “난동 부려 제지했을 뿐”

하지만 남대문경찰서 최익주 경위는 “주먹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며, “정씨가 난동을 부려서 앉으라고 제지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정씨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도에 있었기 때문에 구타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그 복도는 철문을 통해 출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주장은 쉽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에 의하면, 정원철 부장은 동광주병원 여성 노동자들 연행에 항의하다 함께 연행됐다. 동광주병원 여성노동자들은 3월 31일 5시경 서소문 KAL 빌딩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모두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있어 집회

에 참석했던 노동자라고 확신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갔으며, 이에 대해 정 조직부장은 항의를 했던 것.

정 부장과 함께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한 노동자는 “경찰들에게 연행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자신들이 왜 연행되어 왔는지 제대로 대답하는 경찰들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라고 종용하기만 했고, 이를 거부한 정 부장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치 지키지 않은 것이다. 3월 31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던 9명 중 8명은 2일 불구속 처리되었다. 하지만 정씨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민중대회 이후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83명이며, 이중 정 조직부장을 포함한 10명에게는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또는 훈방 조치됐다. (범용)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편집자 :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연임포기를 밝혔다.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에 그 배경을 듣는다 (→'기고'는 2면에 계속됨)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지난 3월 19일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연설에서 자신의 4년 임기가 올해 9월 만료되지만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빈슨 판무관의 '자발적 연임포기' 결정은, 대부분 유엔 국제기구의 장이 연임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움과 함께 결정의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에서는 벌써 후임자 선정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빈슨 판무관(56)은 개막연설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유엔의 빈약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종종 좌절되었다”며 “회원국가로 구성된 다자간 국제기구가 필연적으로 강요하는 제한을 벗어나 밖에서 자신이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 동안 겪어온 고충과 좌절감, 그리고 연임 포기의 배경을 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판무관실 예산은 유엔 전체예산의 약 1%에 불과하며,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 1면에서 계속됩니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관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침해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인권침해와 관련한 해당국가를 비난하거나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무관의 행동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에 올리는 데 기여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를 방문한 후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 해 체첸 사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현장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러시아 군부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녀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한편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관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 로빈슨 관무관은 "비타협적이고 솔직한 의견표명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여 자신의 행동에 유감이 없음을 표명하였다.

각국 국가인권위 설립 적극 지원

한편 제네바의 대다수 인권 NGO 대표들은 그녀의 연임 포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관무관실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듯이, 관무관은 항상 정부보다는 인권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NGO의 권리와 역할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인권위를 비롯한 다양한 유엔 인권관련 회의에서 일부 정부가 NGO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NGO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국제기구의 장이 지역별로 순환하는 원칙에 따르면, 차기 관무관은 아시아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빈슨 현 관무관의 연임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단합해서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NGO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전 에쿠아도르 외무부 장관 출신의 초대 관무관 호세 아말라 라스 씨처럼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감 없는 직업외교관이 차기 관무관이 된다면 관무관실의 역할이 매우 축소될 뿐만 아니라 관무관실과 국제인권 NGO의 협력도 매우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지난 94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관무관인 호세 아말라 라스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임했고 현 로빈슨 관무관은 97년에 임명되었다. 이 제도의 설립은 90년대 국제 인권단체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관무관실은 제네바에 위치해 있으며 은 약 100여명의 직원과 10 여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unhchr.ch 참조.

(이번 주 '인권이야기', 필자 사정으로 쉽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1. 한통계약직 노동자 -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 50여명,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 시작 (3/26) / ILO 집행이사회, 한국에 공무원 결사의 자유보장, 복수노조 허용권고 (3/28) / 한통 계약노동자 목동 전화국 점거농성, 5시간만에 경찰에 전원 연행 (3/29)

2. 사법권 침해혐의 '실무편람' 폐기하라!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 (3/26) /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 (3/28)

3. 인권침해자-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울 란데라 진상조사 규명위에 남아공 경험 설명 (3/28) / '실무자보다 책임자를 밝히는 게 더욱 중요하다', 파울란데라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3/29)

4. 온라인 저작권, '인터넷을 황폐화한다' 진보네트워크, '소리바다와 정보공유'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 (4/1~14) / 디지털 저작권관리로 MS등 거대기업 독점강화 움직임 (3/28)

5. 경찰, 노동자와 대결의식 고취-고무총탄, 물대포... 서울시경, '신중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 (3/29) / 1만여 명 참가해 종교공원에서 민중대회 -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 (3/31) / 경찰, 보건의료노조 간부 격리시켜 집단구타 (3/31) / 시위진압용으로 실명·사망 위험 있는 고무총격총 사용여부 논란 (4/2)

6. 목적적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 (3/28) /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 (3/28)

7. '세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타인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폭력중지와 팔레스타인 민간인보호 촉구 결의안 잠정합의 (3/27) / 예루살렘서 차량 폭탄테러 발생 (3/27) / 팔레스타인 어린이 반 이스라엘 시위 중 포복훈련 (3/31)

● 국내소식

이주·여성 인권연대 발족-'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자' (3/28) /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근거 밝혀라고 요구 (3/27) / 미국,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3/29)

● 해외소식

인도네시아군, 아체반군 소탕작전 -민간인 7명 사망 (3/24) / 사파티스타, 에스테르 사령관 첫 의회연설 -원주민권리 보호법안 입법 촉구 (3/29) / 사모아 한국계 의류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현대판 노예노동' (3/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4일(수)

제 18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군법무관이 거창사건 발생 현장인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를 직접 찾아가 희생자 묘역을 살펴보고, 당시의 정황을 거창사건 생존자들에게 듣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입에 담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군법회의 재판기록과 판결문은 지난 51년 거창사건 직후

민간인학살 사실이 알려져 열린 군법회의 기록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한 군장교 4인에 대한 재판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심대섭)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이후인 1951년 2월, '공비도벌'을 명분으로 육군 11사단 9연대가 경상남도 거창 일대에 거주하는 민간인 7백여명(최소 추정치)을 학살한 사건으로 51년 3월 제헌의원 신중목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군은 이른바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중국 장계석의 전술개념을 차용해 "지켜야 할 거점은 벽을 쌓듯이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 내 주어야 할 지역은 건물을 파괴하는 등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에서 국군은 아동과 부녀자, 노인 등을 포함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 방화, 재산 약탈,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민간인 학살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는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했으나 공비로 가장한 국군의 방해에 의해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쳤다. 이후 군법회의가 열려 11사단 9연대 소속 장교 오익경 대령, 한동석 소령, 이종대 소위, 김종원 대령이 기소돼 4인 전원 무기징역·징역10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중 형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 소령과 같은 경우 군 관련 요직까지 거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한편, 거창사건이 분명한 민간인 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정작 그동안 유족들이 당해왔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은 빠져있어 유족들의 원성을 샀다. 학계나 연구자들도, 비록 군장교 일부가 사법처리되긴 했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을 특별조치법이 여전히 배제하고 있어 반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아태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돼 올해 1월 임시국회에 한국전쟁 당시 발생했던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통합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 사건밖에 없다.

5.5 인권영화제 -다시보는 명작선

· 5월 18일(금)~23일(수)

·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02-741-2407 / 02-741-5363

전자우편 hrfilm@sarangbang.or.kr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다시 촉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경찰청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어떤 조직이건 그조직의 한 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거늘 유독 한총련에게만은 그런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수배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공개서한 발표에 앞서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가해지는 어떠한 탄압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공동대표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9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요구하는 촉구서한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지난 3월 27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회 법사위, 통일부, 민주당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

이용현 한총련 임시의장은 9기 정기대의원대회를 4월 5일부터 7일까지 흥악대에서 연다고 공고했다. [심보선]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8년 1만명 정도에 이르던 결식 아동의 수는 2000년 15만명으로 늘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1999년 3/4분기에도 0.436를 가리켰다. 2001년 현재 실업률은 6.7%를 웃돈다.

이상은 IMF 구제금융이 물러간 이후 한국의 빈곤을 알려주는 수치의 일부다. 단순히 빈곤은 수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과 생존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돼 식생활의 저하, 주거수준의 하락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빈곤 현상은 '신자유주의' 라는 괴물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즘,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빈곤현상을 인권의 문제로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빈곤을 단순히 사회현상 혹은 사회문제로서만 한정시켜 바라보지 않고 인권의 시각으로 살피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빈곤의 악화를 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의 저항담론을 담고자 했다.

1장은 빈곤으로 야기된 권리박탈 과정과 체계를 정리했다. 2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빈곤의 심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고발했다. 3장은 신자유주의와 빈곤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주빌리 2000 캠페인과 태국의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했다. 4장은 빈곤의 해결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강화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문제임을 부각시켜 민중운동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장은 빈곤제거를 위한 54, 55, 56차 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의와 결의안, 유엔 총회에 제출된 '빈곤제거를 위한 유엔의 10년 이행' 보고서를 묶었다.

그간 '결핍으로부터 해방'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한 국제경제질서, 과거 식민지 유산, 자본축적의 첨병인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행위가 존재하는 한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의 열망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언젠가 우리 인권운동이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날들이 올 것이며, 이를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보고서가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필자들은 밝히고 있다. 영문자료 이외의 한글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사회권위원회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은아]

동아시아 평화, 인권, 환경을 생각하는 제3회 달빛문학제

-매항리로의 초대, 달빛아래 평화만들기

- 때 : 4월 7일(토) 오후 4시 30분
- 곳 : 매항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
- 출연 : 공대패 모두골, 소리타래, 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
- 제3회 보름달 축제 한국실행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문학제

- 때 : 4월 7일(토) 오후 6시
- 곳 : 경희대 노천극장
- 국보법폐지 국민연대/한총련

인혁당 26주기 추모문학제 -님어여, 부활하소서!

- 때 : 4월 9일(월) 오후 7시
-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 인혁당 사건 영상자료 상영/ 추모식/ 추모의 노래 : 장사익
- 진행 : 문성근
- 주최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 주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전화 : 02-777-064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5일(목)

제 18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파업에 참가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3월 30일 1년차 계약직 직원 1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고 2명은 파업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노조는 '보복성' 해고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회사측에 근거제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계약약거부 사유나 인사근거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노조는 3월 19일 회사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이외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3년 이상 4년차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호텔롯데 노조는 "회사가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후 1년차 계약직에 대한 계약 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도 파업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노동자 9명이 2월 23일 계약해지를 당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파업참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조활동과 관련된 계약해지 사태가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진 바 있다. 한성컨트리클럽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31일 경기보조원 2백명을 전원 해고했다. 경기보조원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거부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자 회사는 '노캐디 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전원 해고했던 것이다. [참조

http://hansung.jinbo.net/ja.htm)

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계약 해지→파업→재계약 합→합의번복' 사태가 이어졌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던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2명을 재계약에서 탈락시켰으며, 이에 노조가 재계약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자 12월 5일 계약 탈락자의 재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여 일만에 합의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9명까지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노조의 합의를 받아 "미운 놈한테 떡을 췌 주는냐"며 '보복성' 해고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박진희 조직부장은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갱신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

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원]

로빈슨 관무원 1년 더 복무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설득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9월 임기 만료 후에도 1년간 더 직무를 맡기로 했다(관련기사 4월 3일자 참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3일 성명에서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이 유엔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1년간 임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나쁜 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빈슨 고등판무관의 사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세계도처의 시민사회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정부들이 고등판무관의 사임결정을 철저히하도록 호소했다"고 밝혔다. [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삼미특수강, 한성컨트리클럽, 멀티 데이터시스템, 군산 개정병원. 이상은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짧게는 1백일, 길게는 4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그 동안 거리홍보, 단식농성, 노숙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 왔다. 또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황명진, 아래 순회투쟁단)을 구성해 지난 3월 26일부터 9박10일간 전국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순회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순회투쟁의 목표는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현안에 대한 사회 쟁점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조탄압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었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다.

4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순회투쟁 해단식을 가졌던 황명진 단장은 전국 각지의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노동자들이 힘없이 당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21세기 한국이라고 하지만 교섭을 해태하거나 부당하고 애 거짓 직장폐쇄까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형태는 아직도 그대로인 게 너

무나 안타까웠어요."

황 단장은 순회투쟁 기간 중에 군산 개정병원을 방문했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군산개정병원은 지난 99년부터 7백 일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이다. 군산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노조가 결성되고 파업을 벌이자 곧바로 직원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하는 등 노조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개정병원 노동자들과 순회투쟁단이 만난 곳은 군산

노동사무소 앞. 보건의료노조 개정병원지부 김은혜 지부장은 순회투쟁단을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 눈물부터 흘렸다고 한다.

멀티데이터시스템 이성호 위원장도 "김 지부장이 사측과 힘겹게 싸워왔던 얘기, 사업주가 갖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억압한 얘기들을 울먹이며 전할 때 순회투쟁단 또한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며 "장기투쟁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자인 것을 보면, 흩어져 있는 힘들을 모을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더욱 탄탄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심대섭)

휴일관계로 4월 6일자 하루소식은 없습니다.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4일 오전 8시 KBS 본사 건물 앞!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사회진보연대 등 20개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 30여 명은 KBS 노조를 상대로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씨의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최초 7개 참가단체에서 20개 단체 참여로 확대된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강철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00인위가 성폭력 피해자 두 명의 진술을 토대로 강 씨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됐다. 그러나 강 씨와 KBS 노조는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2월 26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피해자 두 명과 100인위,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동아닷컴 황우진 명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3월 9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공대위가 결성됐지만, 강 씨와 KBS 노조는 공대위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피해자 구제 △가해자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운동사회 내 성폭력 내규 제정 등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KBS 노조와 강 씨를 상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철회 △공개적인 사건해결 △피해자 요구수용 △공대위 실체 인정 등을 요구했다. 100인위 소속 활동가 시타 씨는 이날 집회에 대해 "공대위 참가단체들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공대위의 실질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철구 씨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과 동아닷컴, 미디어오늘, 한국기자협회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이상희 변호사 등)을 구성해 오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적어도 4월말까지는 매주 목요일 KBS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용)

5.5 인권영화제
다시보는 명작선

- 5월 18일(금)~23일(수)
- 아트큐브(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02-741-2407 / 02-741-5363
전자우편 hrfilm@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7일(토)

제 18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신고시 불법·폭력시위를 앞장서는 각서제출 의무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착용 금지, △화염병 관련 형사처벌자 명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염병 시위 빈발 등 해당 대학의 학생관리실적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고, 화염병 시위 전력자의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며, 민간분야에서도 '화염병 전력'을 신규채용 때 감안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화염병 사용자에게 취업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가 5일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번복한 데 이어 또다시 하룻만에 집회·시위 자유의 근본을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근대형 법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치졸한 발상"이라며 "군사정권 때도 안 하던 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하다니..."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김철준 변호사는 "집회신고 할 때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복면착용 금지는 '모든 시민이

자기 얼굴을 타인에게 항상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철준 변호사는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공직취임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화염병 사용자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지금 홍익대에서는 제9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병력은 대회장소인 홍익대를 겹겹이 포위했고,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게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적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이 자진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고려의 흔적도 없이 해맑은 청년 수백 명을 잡아들이겠다는 이 '아무진 언사'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넘어 비애를 느낀다. 공안당국이 드는 '한총련=이적규정'의 근거는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총련은 이적단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가 된 것일 뿐이다. 그럼 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지목되는가? '불온'하기 때문이다. 왜 불온한가? '감히' 권력에 반대하고, '결연히' 공권력에 대들고, '무엄하게' 국가대사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뼈뺀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한총련을 계속 이적단체로 묶어두는 것은 7조 3항으로 상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와중에도 7조 3항을 지켜낼 수 있고, 7조 3항이 살아남아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감시하고 막는 강력한 수단이며,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독재 권력의 질긴 유산이다.

새로 구성된 9기 한총련 대의원 870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멍에 질러 오늘날은 홍익대를 둘러싼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공리를 해야하고, 내일은 어디에 거처를 두고 활동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가족을 만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적단체 한총련'을 구성했기 때문에.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쟁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노사분규 발생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자행해 오던" 자로 묘사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심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이 88년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말고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근거로 검찰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3호에는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사건을, 쟁의행위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사태를 "노동관계법 제정 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소철회를 강력히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계 부의 6%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세계인구의 6%를 구성하는 선진국 국민이 세계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이성적 국제경제질서가 개도국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3일 계속된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대표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경제적 세계화'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세계식량기구는 세계의 식량생산은 온 인류를 먹여살리기에 충분하나 빈자들은 이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 인간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는 모든 인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와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4월 4일에는 여러 NGO들이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개발문제를 다루는 '루테란 세계연맹' 대표는 전지구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순위이고, 다른 중요한 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을 언급하고, 교도환경협약에서 탈퇴한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질병퇴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거대제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용식 사무국장은 검찰이 공인노무사 본연의 임무를 문제삼아 "정당한 권한과 업무영역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광주병원 노조는 지난 해 9월 5일 체불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며 파업, 6일 현재 214일 제를 맞고 있다. 동광주병원은 파업 1시간도 안 돼 직장을 폐쇄하고 12월 30일에는 폐업을 했다. (범용)

약화사들을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럽과 제3세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선택 의정서 초안'이 위의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화의 영향 아래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은 종종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초국적 기업에게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 대표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인권기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사회적 개발을 희생시키면서 경제목적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권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4월 27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한 결의문을 투표로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김민선)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감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7·80년대 대학의 일상적 감시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셈"이라고 규정했다. 민가협은 체은아 활동가는 "정부가 터무니없는 발상을 쏟아내고 이 중 하나라도 건지려는 것 같다"며 "시민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화염병을 부른 정부가 이런 기만책만 내놓는다면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일 예정된 총회에서 '화염병 엄단'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0일(화)

제 18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호사들은 9일 11시 너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변호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그리고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100인위는 "강씨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마저 고소하는 등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전혀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판단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와 KBS노조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운동사회 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더군다나 현재 강 씨와 KBS노조는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

한편 KBS노조는 "실명공개라는 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100인위와 이를 지지하는 공대위는 상식을 가

진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충격적인 방법조차 "피해여성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 준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100인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100인위는 이미 '100명

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본래적 의미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일 '해진스님 진상조사위'가 밝힌 대로 "피해자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은 운동사회조차 일반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00인위가 실명공개로 도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해진스님 진상조사위'가 강조한 대로 성폭력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을 말한다"고 이미 지적한 100인위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계기로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범용)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본보 3월 17일자 기사 참조) 가처분 신청을 한 지 31일 만이다.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지난 2월 16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 1천7백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2월 19일 경찰에 병력을 요청해 강제로 몰아냈다. 이후 사측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부평공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봉쇄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정리해고자들이 공장의 정상조업을 방해할 수 있다며 대우자노조 조합원과 상급단체 소속원들의 부평공장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던 명분을 잃게 됐다. 그 동안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도 회사측의 가처분 조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이 허락만에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우자노조에 의하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지난 4일 노조사무실을 조합원 출입이 극히 까다로운, 3면이 2미터가 넘는 담으로 둘러쳐진 서문 쪽으로 노조의 동이 옮겼다.

대우자노조의 법정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우자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반대 투쟁에 새로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심태섭)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동차

“지각 3회 하면 결근 1일, 무단결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 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 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 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들여 사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식대도 안 나옵니다. 회사에 목욕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욕도 제 돈 들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월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분노수거, 정화조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환경정화협회 ‘울산지역 정화환경노조’가 지난 3월 19일부터 파업을 하면서 폭로한 실상이다.

일 랑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깎이게 되므로 분노수거, 정화조 청소할 때 과다한 사납금(하루40만원)을 맞추고 임금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받는 일, 분노탱크에 물을 채워 분량을 과장하는 일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속죄의 의미로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고 고의로 불법편법을 조장해서 노동자를 속이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길들여 왔다.

이는 울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동종업계 모두 이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을 하는 회사들에 의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방조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명백하다. 결국 시민들은 이중의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과 불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열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정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다. 이 사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 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화의 주된 기능을 하는 사회권은 신자유주의 대한 거부 없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 민 식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4.5)/ 화염병 시위자 공지채용 제한, 평화집회 각서·명단공개 등 법률에 규정방침(4.6)/ 서울지법, 화염병 투척한 사람에게 1년6월에서 2년 실형선고(4.7)/ 대검 공안부, 화염병 사용자에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윗선 수사기법' 등 원, 자금출처 등 배후 수사(4.8)

2. 일본은 과거사에 '당당하다' 일본 역사교과서 계약 문화예술인 316명, '일본 역사교과서 계약중단' 성명(4.2)/ 일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15종의 역사교과서 '축소, 왜곡' 검증 통과(4.3)/ '일본 역사교과서 계약지지를 위한 운동본부'와 일본의 12개 시민단체, 채택반대 운동하기로(4.3)

3. 인터넷에서 함부로 복사하지 말라
문화부,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개정방침·편집물 제작, 유지, 관리에 투자를 한 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 간 부여'(3.30)

4.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 고 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영동한 곳으로 옮긴 후 출입허용
금속산업연맹, GM 대우차 인수반대 결사대 보내기로(4.4)/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사무실을 외출증 끊어야 출입 가능한, 3면이 막힌 곳으로 이동(4.4)/ 인천지법, 대우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 출입 보장해야(4.6)

6. 수치로 본 '김대중식 신자유주의'의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상승(99년 12.1%, 2000년 8%)했으나, 비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깎여(99년 -5%, 2000년 -2.5%)(4.5)/ 한국조세연구원, IMF 최대 피해자는 50대, 98년 이후 소득 계속 내리막(4.5)/ 통계청·노동부,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해마다 증가-97년 62.0%, 98년 65.9%, 99년 9.5%, 2000년 69.7%, 2000년 2월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50.2%(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5%, 남성노동자중 비정규직은 38.2%)(4.6)

7. 국가보안법은 공안세력에게는 귀중한 '보물'
한나라당 '미래연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하기로(4.5)/ '친북서적' 출판혐의 재미동포 송학삼씨 기소(4.5)/ 9기 한총련 의장에 최승환 씨 선출, 대의원 870명 새로운 양심수 후보(4.5)/ KNCC 연례회의 성명, '국보법 폐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설치' 등 요구(4.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1일(수)

제 18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사용주 단체, 중노위도 인정한 노조 무시**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가 10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운송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부터 여주·관교 톨게이트 등에서 '레미콘 시위'를 벌이고, 오후엔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역에 집결하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서 운송노조는 △노조 인정 및 단체 교섭에 응할 것 △도급 계약서 철회·단체협약 체결 △일요일 휴무 실시 △운반단가 현실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공정환 배차제도 실시 등 6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운송노조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산하 노조로 지난 해 9월 영등포구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노조설립 이후에도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등 사용주 단체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용주 단체는 미화레미콘, 유진레미콘회사 등 70여 레미콘 회사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노조원 4백여 명을 일괄 해고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들을 형사 고소·고발했다.

운송노조는 이러한 교섭 거부·고소 고발 사태에 대해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중노위는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율적인 해결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있는 회사측의 잘못이 크다"며 사측에 자율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을 수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측은 줄곧 교섭을 거부했다.

결국 중노위는 지난 6일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에서 "운송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이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을 중노위가 인정한 것"이라며 "2천1백대의 레미콘이 멈춰서야하는 이 참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만든 사용주들을 의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노동법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사용주들을 비난한 후, 운송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운송노조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로 이동한 조합원 모두가 레미콘 연합회, 노동부, 국회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심태섭]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99년 1월 1일 시행, 아래 공직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전공련은 현재 전국적으로 220여 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3일 총회를 통해 전국조직인 전공련을 건설했고, 3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차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3월 30일 전공련 소속기관에 전공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전공련 관계자에게 11일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북무조사담당관실 전공련 담당자는 "공직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분명히 공직협의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공직법에는 전국조직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공련은 11일 경찰 출두 요구에 일질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공련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범용]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대우자동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 이후 10일 경찰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아 9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에는 17명이 노조사무실에 갔다왔지만 10일에는 남문을 폐쇄해 버렸다.

10일 인천지법 집달관은 11시경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서문·정문·노조사무실·이종대 회장 옆방에 고시를 부착했다. 회사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부평공장 남문을 폐쇄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법원 결정사항을 고시하려는 집달관을 회사가 고용한 용역강대들이 몸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10일 오후 1시 노조간부와 정리해고자 등 5백여 명이 부평공장 근처 산곡성당에서 노조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부평공장 남문을 향해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대우차 정비사업소 사거리에서 경찰이 가로막았다.

노조원들이 법원 결정문을 보여줘도 경찰은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안상수 인권위원장 등이 김중원 부평경찰서장에게 "불법행위니까 즉시 해산하고 출입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인천시경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 되뇌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인권위원장 등이 민생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만나겠다고 자리를 떴다.

무방비 조합원에 방패, 곤봉 세례

경찰이 인도로 가는 것마저 계속 가로막자 조합원들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지 말라"며 웃음을 벗고 누웠다. 경찰은 무방비 상태의 조합원들을 방패, 곤봉으로 두들겨 때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 21명이 연행되고, 머리를 맞은 조합원 5명은 계속 구토를 해 인병원, 중앙병원, 성심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들 중 일부는 당장 수술해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김일섭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전했다.)

산곡동 3거리 쪽으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산곡동 성당 앞 전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펼치기도 했다.

부평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차선을 점거, 교통흐름을 방해해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사협력실 관계자는 남문을 폐쇄한 이유를 묻자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며 "새로 서문 쪽에 마련해 준 노조사무실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집달관이 회사에서 새로 마련한 서문 쪽 노조사무실 대신 기존의 남문 근처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법원 고시문을 붙인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

에 "집달관이 자기 맘대로 붙인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부상자는 42명이며 이중 정상식 정상식 조합원은 언어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고 유태희 조합원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파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조는 금속산업연맹 등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부평 산곡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폭력만행을 규탄하고, 노조사무실 출입보장을 요구한다. [심보선]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도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지법인연수생(아래 법인연수생)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다.

법인연수생은 3D업종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현지직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세원전기 법인연수생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함량미달인 내용이 가득하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시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최초 3개월 분 임금 미지급, 단체행동 금지 등.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연수생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있는 산업제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에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름통에 손가락이 눌러 수술한 에드워드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입닥쳐(Shut the mouse)"라는 말로 일축했다. 2월 19일 세원전기 법인연수생들은 임금 3만원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3월 14일에는 기숙사에 물, 전기를 끊고 화장실을 폐쇄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이들 후 회사는 '일방적 단체행동'을 이유로 이들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법인연수생 15명은 3월 21일 필리핀 대사관에 중재를 요청해 회사와 면담을 했다. 이들의 '출입국경비 사측부담, 여권·외국인등록증 반환, 3개월 분 예치금 지급'요구는 회사의 '자진 업무복귀 시 일부 선별적용, 작업거부일수에 대해 2배의 임금공제, 집단작업거부와 이탈에 따른 사측의 손실 보상'이라는 상식이하의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필리핀 대사관도 손을 놓고 말았다. 이어 4월 4일 광주 노동사무소에 방문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인연수생 15명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절망뿐이다.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명이 불법취업한 상태이다. 4월 15일이 되면 이들은 강제 출국해야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게된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2일(목)

제 18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1) 부활한 공안정국
- 2)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3) '민생공안' 적용실태
- 4) 공안대책협의회란?

'공안광풍'이 공장, 학원, 거리를 휩쓸고 있다. 집권 4년제만 등장해 나라 안을 온통 해집어 놓았던 '광폭한 퍼포먼스'가 다시금 시작된 것이다. 91년에는 이른바 '분신·유서대필 정국', 96년에는 이른바 '한총련 정국'으로 온 나라를 협박하던 '공안세력'이 이번에는 이른바 '화염병 정국'을 조성,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3면에 '민생공안 일제

'대우 공권력투입, '민생공안'이 주도

지난 2월 20일, 대검공안부(부장 이범관)는 이른바 '민생공안' 원년 방천에 따라 2월 19일 대우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20일 인천 산곡동 성당에 경찰기동대가 진입해 양주용 부제 등 성당 관계자와 70여명의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연행한 이후, 경찰 8천여 명이 부평을 점령, 부평은 '계엄상태'에 돌입했다.

3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안검사 120명중 103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 주제는 '남북관계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공안업무 방향'. 요컨대, '남북관계변화로 인해 좁아진 공안 시장을 구조조정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이를 집약한 구호가 바로 '민생공안'이다.

'민생공안'의 주된 타격대상은 "지역·집단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으로, 불법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

프 등 폭력을 동반"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저해"하므로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형구 파업유도사건으로 몰매 맞고 숨죽였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했다.

3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과 경제5단체가 나서서 "화염병 사용은 사회불안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가져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안'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우익·경제단체 지지 이어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화염병 빌미로 '공안작전' 시작

울고 싶은 공안세력의 뺨을 때려준 것은 이른바 '신종화염병'.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신원미상의 이용자가 올린 '폭발성 신종 화염병 제조법'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적발, 추적에 나서고 '공안당국'은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작전'을 현실화시켰다.

우선 경찰이 '신종화염병'을 만들어 카메라 앞에서 '폭발쇼'를 선보이고, 언제나 그렇듯 언론이 왕왕대자 겸·경은 온갖 '겁나는' 대책을 다 들고 나왔다. '총포류 등 단속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등, 화염병 투척 우려가 있는 집회와 시위는 원천 봉쇄하고 아예 허가하지 않겠다는 등, 고무충격총을 사용하겠다는 등... 4월 2일 '화염병 기동타격대'를 편성, 폭력시위에 전방을 선포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KBS 등은 9시 뉴스에 기획으로 서너 쪽지를 연달아 3월 30일 민중대회 장면 중 자극적인 것만을 편집해 '화염병 무섭다'로 도배하고, 신문은 "무기력한 공권력"을 나무랐다. 모든 논조가 신기하리만큼 일치했다. 화염병·폭력시위 -> 공공질서 파괴·국가신인도 하락 -> 외국인 투자기피 -> 경제회복 걸림돌 -> 폭력시위 엄단.

4월 2일 김 대통령이 "화염병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다시금 확인하자, 4월 5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폭력시위학생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독려했고,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술 더 떠 "화염병 투척자 취업불이익 검토"라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나왔다.

우익단체, 대통령과 행정부, 언론의 지원에 힘을 얻은 대검공안부는 7일부터 보다 공격적으로 화염병 시위자를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답하듯 법원은 8일, 철거반대시위 도중 철거용역반에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안당국이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신종화염병'은 단 한번도 시위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화염병'이 나오면 '총포류등단속법' 발동을 공언했던 검찰은 기다리다 지친 듯 아예 일반화염병에 대해서까지 '총포류 등 단속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화염병처벌법'도 개정하고-왜냐하면 현행법으로는 그리할 수 없으니까-, '집회와시위등에관한법률'도 개정해 폭력 우려가 있는 시위는 아예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감춰왔던 속내를 드러냈다! 공안당국의 주타격대상은 '폭력'시위가 아니라 시위 그 자체였던 것.

공안세력은 '김대중식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자신의 밥그릇 보전을 위해 인권이니 나발이니 하는 허물을 벗어 던지고, '법의 이름'으로 '전방위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심보선·이광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10일 오후 4시경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인근 도로에서는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곤봉과 방패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상의를 모두 벗고 길바닥에 연좌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부상자 규모와 그 정도가 심했다.

◎ 사건 경위

이날 오후 1시경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로 가기 위해 인도를 따라 부평공장 남문 쪽으로 걸어갔다. 부평공장 외곽 약 1백미터 지점부터 경찰이 노조원들을 저지했다.

노조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전경들에게 "현재 경찰의 행위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즉시 해산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세 차례에 걸친 몸싸움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8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거듭된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오후 4시경 급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모두 상의를 벗고 자리에 누울 것"을 지시했다. 박 변호사는 "그렇게 드러눕자고 한 것은 차마 그 상태에서 전경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우리 스스로 무저항을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순순히 연행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상대의 허점을 노리던 '미친 개'처럼 전경병력은 순식간에 길바닥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다. 앞줄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의 몸을 밟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었다. 또 야구방망이 휘두르듯 진압봉으로 노동자들을 가격했고, 이미 쓰러진 노동자의 머리를 수차례 반복해서 군화발로 걷어차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전경들이 지나간 자리에 옷가지와 사람들이 쓰러기 처럼 널렸고, 폭행 당한 조합원들의 몸마나 선혈이 낭자했다. 집단구타를 당한 조합원들은 온몸을 파르르 떨며 절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아무런 저항의사도 저항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극악하다. 특히 경찰이 곤봉·방패·군화발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머리 부위를 집중 가격한 점에서는 '살의'마저 느껴진다. 이미 전투경찰 대오 안으로 연행된 노동자를 집단구타한 사례 역시 이번 사태가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홍근수 목사, 오종렬 상임의장 등의 항의방문을 받았던 부평경찰서장이 별다른 해명도 못하고 '사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었다.

◎ 배경

이번 사태는 회사와 경찰병력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법하게 봉쇄한 것에서 기인했다. 대우자동차측은 지난 2월 1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몰아낸 이후, 줄곧 경찰병력을 동원해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노조사무실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조사무실 출입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출입을 봉쇄했다. 또, 10일엔 법원 집달관이 판결 공지문을 회사 건물에 부착하는 것마저 방해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했다."

◎ 피해자 반응

대우자동차 노조는 확인된 부상자만 4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엔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찢린 흉아무개 씨 등 중상자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인천 시내 10여 개 병원에서 부상당한 조합원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몸 곳곳에 멍자국이 선명하고 부기로 눈뜨기조차 힘든 노동자들, 다리와 팔에 깁스를 한 노동자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다. 갈비뼈 골절로 부평 세림병원에 입원중인 최형찬(37) 씨는 "죽지 않고 이 정도인데 다행일 정도"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이 과연 정당한 법집행을 하려는 공권력인지... 이것이 우리 인권상황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더불어 집단 폭행을 당해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중인 박훈 변호사는 "아무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다"며 "법도 안 통하는 데... 힘으로 해야지"하며 말끝을 흐렸다. (이창조)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레포럼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과거 청산
 때: 4월 14일(토) 오후 3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 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 황인성(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청산 운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사업의 의의
 문의: 배경내(02-3675-5363)

매항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항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항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항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소음으로 인해 입은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 중 매항 1, 2, 3리 사람에게 1천만원씩, 매항 4, 5리·석천 3리·이화 1, 2, 3리 사람에게 9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매항리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모두 1억3천2백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질이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있고, 주민들이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 시작한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피해를 감소시킬만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온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함께 제기한 오폭 불안감이나 생업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만규 위원장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선 자유와 평화를 외치지만 매항리에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토지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사격장 폐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미군

훈련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집단이 낸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항리주민대책위는 사격장으로 인한 가축·가옥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미국 정부를 미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심태섭)

일지로 본 '민생공안'

- 2월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 투입, 해산
- 2월20일: 대검공안부, '민생공안' 원년선언, 대우차 공권력 투입- '민생공안'// 경찰, 부평 산곡성당까지 난입해 노동자 체포, 예비사제까지 폭행
- 2월21일: 인천 일대에서는 대우자동차 관련 일체의 집회 모두 '불허'
-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 투척
- 3월 9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검사 103명 연찬회/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폭 활성화/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척및폭력시위 주동자·배후·제조·운반·사용자 추적검거/ 손해배상 책임 추궁// 경찰,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 발대
- 3월12일: 대검공안부, 팀당 5-10명씩 5개 연구반을 편성해 공안사건에 대처할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 3월14일: 경제5단체, "대외신인도 제고에 치명적", 화염병시위 중단촉구// 자유총연맹, "경제회복에 악영향 끼치는 화염병투척 용납 못한다"// 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민사소송 제기/ 화염병투척사범에 대해 방화죄 등 적용 검토
- 3월23일: 김 대통령 경찰대출입식 연설, "화염병 투척이 세계에 보도돼 관광이나 투자유치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96년 한총련 '이적단체구성죄' 적용주도 당시 대검공안부장 주선희 씨 헌법재판관 임명
- 3월29일: 경찰, 기자들 불러모아 '신종화염병 시연회'
- 4월 1일: 민주당, "신형화염병 사용을 단호히 단속하라"고 요구
- 4월 2일: 대검, "화염병 시위로 외국투자자의 발길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며,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등장해 화염병투척이 우려되는 시위, 집회는 일체 허가하지 않고, 화염병 제조·사용·소지자도 전원 추적 검거하기로// 김 대통령, "불법·폭력 시위 강력 대처"// 경찰, "극렬시위 때 고무충격탄, 물대포 사용"
- 4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화염병 제조·운반·소지·투척자에 관련법 엄격적용/ 화염병관련자 신고보상금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화염병 제조 사용 유류판매 제한 행정지도// 경찰, 화염병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 4월 4일: 검찰, "신형 화염병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정부 고위당국자, "화염병 투척자 취업제한 검토"
- 4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 공문, "학생 특별상담 활동 강화, 폭력시위 학생에게 학칙 엄격적용" 독려// 청와대,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 4월 6일: 관계장관회의, 법을 개정해 '평화시위 각서 제출 의무화, 명단공개' 추진, "화염병시위 빈발대학, 행정·재정적 차별", 공직취임 제한도 검토
- 4월 7일: 서울지법, 화염병 시위 철거민 3명에게 중형선고(1년 6월~2년)
- 4월 8일: 대검,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 설치-자료분석조, 정보수집조, 특별검거조로 운용, 경찰 화염병수사반을 24시간 전담지휘/ 배후세력에 대한 포괄 기획수사/ 마약사범처럼 정보원 등 투입 '윗선'을 추적하고 통신감청·예금계좌 추적·인터넷 IP 추적/ 화염병시위 배후조종자 특별검거/ 화염병사범에게 총포류등단속법·방화죄 적용/ 화염병시위 생김 시위주최자도 공동정범 처벌
- 4월10일: 경찰, "노조사무실 출입 막지말라"는 법원결정도 무시, 집단구타

5.5 인권영화제
 다시보는 명작선
 · 5월 18일(금)~23일(수)
 · 아트큐브(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02-741-2407 / 02-741-5363
 전자우편 hrfilm@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3일(금)

제 18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속보〉 경찰이 '4월 10일 경찰만행'에 대해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에서 "4월 10일 천인공로할 경찰의 폭력만행을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와 유감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및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위해제된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1002, 2807기동대장에 대해 살인미수, 직위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경찰이 저지른 만행을 담은 비디오를 직접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50여일 제 부평일대를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법원판결대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완전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부평만행 현장 책임자인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또 1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차 해고자들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흥분한 진경들에 의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 변호사가 부상당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2일 긴급모임을 통해 △각계 사회단체에 경찰만행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고,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와 함께 273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경찰만행을 생생히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하고 국회차

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하며, △정보운동 단체들에 경찰청 사이버시위를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아침 9시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산별대표자 회의를 갖고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 폭력만행'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에게 경찰만행을 생생히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금 심한 경찰폭력'이 아니라 '살인적 폭력만행'이라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경찰만행 기록은 민주노총(www.nodong.org)과 진보넷(www.jinbo.net)에서 볼 수 있

다). 한편 대한변협 박연철 인권위원장, 서울변협 박영립 인권위원장, 민변 송두환 회장과 윤기원 사무총장 등은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검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12일 성명에서 "과거 군사정부의 압제가 국민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경찰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변호사를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4월 10일 부평에서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배들과 하등 다를 바 없지 않은가"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도 12일 성명을 통해 "경찰만행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경찰의 잔인성과 무자비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 2면에 계속됩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경찰에 폭행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목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일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철회하라."

제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탐골 공원 입구에서 열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아래 민가협)의 목요일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372회 목요일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표명한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안'에 대해 "이는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이며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대응 방향의 전환과 집회·시위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를 할 때 "폭력시위나 화염병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는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일집회에서 민가협 체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화염병이 출현해 해외 신인

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벌건 대낮에 경찰들이 자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부평 대우 노동자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나보다"라며 "도대체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발상을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체 간사는 또 "정부는 심지어 집회할 때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마저 금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엄연한 '의사 표현'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가협은 이날 정부의 집회·시위 강력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처벌 위주의 강경책보다는 헌법에 보장

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심태섭)

(=> 1면에서 계속됩니다)

인권유린임과 동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 날 성명에서 '4월 10일 경찰만행'에 대해 언론이 뒷집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2001년 4월 10일 서울근교 부평에서 언어장애, 하반신불수, 폐파열 등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당한 노동자가 속출했다"고 지적하며 대우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어 "사실보도, 공정보도, 객관보도 등 그럴듯한 보도원칙을 세운 언론에게 대우자동차 사태는 기사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고 묻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고 자임하는 언론이 어찌 이런 사태에 눈감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규탄했다.

(심보선)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2000.11/ 정인섭 편역/ 사람생각 펴냄/ 544쪽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번역한 책이 나왔다.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고 비준한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가입한 조약은 관보에 일본과 번역문이 공시되고, 외무부 조약집에 가입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제인권조약은 접근이 쉬운 편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조약집」의 번역작업은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국제인권조약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역을 주도했던 정인섭 씨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제인권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의 기초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 국제인권조약집이 발간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크게 ▲국제인권장전 ▲차별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지역적 인권협약으로 구성되었고 20개의 선언, 조약, 현장을 담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엔에서 채택한 조약별 선택의정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선언과 조약(국·영문)은 www.unesco.or.kr/hrtrea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과거 청산
 ■: 4월 14일(토) 오후 3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 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 청산 운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사업의 의의
 문의: 배경내(02-3675-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4일(토)

제 18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4월 10일 경찰만행'에 대해 전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는 12일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 유감표명에 이어 13일 "인천지방경찰청장부터 현장 책임자까지 감찰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을 넘어 김대중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와 인권단체들은 1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4월 10일 경찰만행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17일로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4월 10일 현장에 있었던 전경 339, 189, 1001, 1002, 1027, 2807, 609, 149 부대의 기동대장을 출석시켜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한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경찰 제복을 걸친 강압집단을 보내 연일 테러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부평일대에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 등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교수협의회 등 기독교계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우자동차 노동인권탄압 기독교공동대책위'도 13일 성명에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김대중 정권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량해고, 폭력적 인권탄압을 초래하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13일 성명에서 "폭력만행에 대해 부평경찰서장 개인 잘못으로 무마하고, 중경상을 입은 노동

자들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작태"며, "오히려 경찰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권력이 광폭한 폭력단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경찰은 10일 만행이후에도 노동자들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12시 무렵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하던 김순환(40) 씨를 종로경찰서로 강제연행, 즉시에 넘겼다. 레미콘 노동자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입은 미이라 차림이 '시민에게 혐오감을 (→ 2면에 이어집니다)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부평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경악과 규탄이 번져가고 있다. 피범벅이 돼 도로에 나뒀던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처참하기만 하다. 현 정권 하에서 초라하다 못해 위선의 상징이 된 '인권'이 그들의 온몸과 가슴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경찰이 법도 안 지키느냐'는 노동자의 울부짖음 속엔 알량한 법에 걸었던 미련마저 빼앗긴 서러움이 배어있다. 노동자가 노조 사무실을 드나드는데 자신의 피를 통행세로 바쳐야 할 만큼 상황은 갈 데까지 간 지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폭력을 결코 돌발사태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대검공안부가 이른바 '민생공안' 방침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안전히 응하지 않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분쇄'를 공언했을 때부터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환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인간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뿐이다.

IMF위기와 함께 들어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생존권의 수난은 일정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옆 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의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탈법적인 공권력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생공안의 치부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일해서 먹고사는 이들의 일을 빼앗고, 주장하고 호소할 목소리마저 빼앗으려드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돈으로 돈을 먹는 소수를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기에 사회적 합의나 동등한 발언기회는 안중에 없는 것이며, 경찰을 폭력배로 부리는 일밖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권력을 우리는 독제라 부르는 것이며, 그런 권력의 끝은 좋았던 기억이 없다. 우리의 기억이 틀렸는가?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1) 부활한 공안정국
- 2)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3) '민생공안' 적용실태
- 4) 공안대책협의회의란?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남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한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질구했다. 그들은 한 번은 일터에서, 또 한 번은 '국민'의 대열에서 추방돼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두 경우 다 명분은 동일했다. 오로지 경제회생을 위해서.

2월 20일 대검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했다. '공안'의 주된 임무는 민생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제회복의 걸림돌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우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해법은 하나의 도그마에 가깝다. '오직 GM 폐각뿐'이라고 국가는 주술처럼 되뇌었다. 그리고 GM 폐각을 위해서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라며 17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하고 했다. 부평공장에서 정리하고에 저항하며 파업중이던 노동자들은 '민생공안'의 조기진압 방침에 따라 경찰에 의해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2월 20일 부평역 광장에서는 성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공권력의 무기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득세하자, 당일 오후 산곡성당에 경찰기동대가 전격 투입됐다. 기동대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산곡성당 제의실까지 노동자를 따라가 기어이 뚫아냈다. 부제의 머리를 때리고 예배를 보려온 신자들까지 체포하려 거센 항의를 받았다.

천주교계가 분노하고,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가 거세게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평역 일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심지어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들이 진주했다. 무려 8000여명. 부평역에서 나오는 모든 지하도 출입 계단의 3분의 2는 경찰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점령했

며,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공장에 이르는 모든 도로에는 경찰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섰다. 대우자동차 조합원 조끼만 눈에 띄면 불심검문을 했다. 간혹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면 "시키니까 한다"는 말만 기도분처럼 읊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끼는 모든 집회는 어느 단체가 주최하든, 무조건 '금지'됐다. 2월 20일 부평역 시위로 보아 다분히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는 경찰이 경비를 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 안으로 숨어드는 걸 막기 위해" 삼엄한 감시가 일상화되었다. 공장 내부에도 경찰 병력이 상주했다. 회사쪽이 시설물 보호요청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주류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집회까지 금지 당해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 없던 해고노동자들은 1인 시위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대우노동자에게는 1인 시위조차 '허기'되지 않았다. 3월 5일 정문 앞에서 25m 간격으로 1인 피켓시위를 하던 조합원 125명이, 3월 8일에는 38명이 연행되었다.

3월 13일까지 671명이 연행되어 20명이 구속 수감되었고, 19명이 수배됐다. 일 자리를 잃어 돈이 궁한 상태라 병원에 가지 못해 안으로 골병이 들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방패와 곤봉으로 맞아 쓰러졌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다 결국 이를 뒤에 입원하고 말았다. 3월 7일 부평공장이 다시 열면서 출근 버스를 저지하려던 해고노동자 가족들은 광바다에 질질 끌려 다녀 온 몸이 멍투성이였고, 갓난 아이들은 군화발에 채여 그 날 이후 소스라쳐 잠에서 깨곤 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에 서풍이 비친 것은 인천지법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노동자들이 출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4월 6일이었다.

4월 10일 급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와 5백여 노조원들이 공장 남문 앞에 모여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

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상무지시라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노동자들은 항의 표시로 웃옷을 벗고 누웠다. 그 직후 남문 앞은 노동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경찰의 살기 어린 군화발 소리로 뒤덮였다.

"예전에는 경찰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한 노동자의 몸서리는 쫓겨난 자를 짓밟으며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왔던 '공안'의 변함없는 본질을 웅변한다. 달라진 점이라면 파업하고 시위하면 과거에는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것이 이제는 '경제회복 저해사범'으로 바뀐 것. '대공공안'을 내걸던 '민생공안'을 내걸던 공안세력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들은 '분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거기에 생존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경제회복을 위해 일 자리를 잃은 자들이 이제는 경제회복을 위해 죽은 듯 지내야 한다. [이광길·심보선]

(→ 1면에서 계속됩니다) 줄 우려가 있다'는 것. 적용법규는 경범죄였다.

김 씨는 건설운송노조 경기동부지구 동진레미콘에서 8년 동안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는 온 몸을 불태우며 감아 미이라 형상을 하고 그 위에 '노조 인정하라', '비정규직 실용 싫다'는 구호를 적어 넣고 나섰다가 난데없이 경찰에 끌려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부터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화문 앞에서 의료보혐료 인상반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5일째 1인 시위에 김 씨가 참여한 것이었다.

또 지난 10일 경찰만행이 벌어진 날 부평경찰서 형사를 때려 눈 주위를 멍들게 한 장면이 경찰이 촬영한 비디오에 기록돼 11일 밤 11시 무렵 경찰에 연행된 대우자동차 조합원 2명은 13일 오후 6시 현재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 '4월 10일 경찰만행' 현장에서 연행된 대우조합원 21명이 지난 11일 즉시에 넘겨져 각각 벌금 30만원을 내고 나왔다. 즉심이라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벌금을 문 풀이다.

(심보선)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레미콘 트럭 2천여 대가 4일째 멈춰 섰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지난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를 전전하면서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13일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인정과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레미콘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했으며, 저녁 8시부터는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대우자동차 노동자 등과 함께하는 '파업 문화제'에 참가했다.

운송노조 장형창 조직2부장은, "8백여 명으로 파업을 시작"했고, "12일 파견 노동부 앞 집회에서는 9백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13일에는 1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 계속 쫓겨나면서도 파업 참가인원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레미콘 기사들이 느꼈던 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요구는 의외로 명확했으며 오히려 소박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임하라는 것.

레미콘 기사들은 원래 건설사 소속 노동자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로 '지입차주'라는 이

름의 사업자가 됐다. 지입차주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레미콘 기사들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 노동, 차량 유지비 개인부담, 월 80-100만원 수입 등의 열악한 현실을 딛고 지난 해 9월 22일 운송노조를 결성해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업자인 레미콘 노동자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현재까지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7일 인천지노위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판정했으며, 2001년 3월 13일 서울지노위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래 레미콘연합회) 유재철 총무

이사는 보험모집인 등을 예로 들어 여전히 "레미콘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단체교섭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레미콘연합회는 노동부를 상대로 레미콘기사들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구하는 '종업원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이에 대해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최명선 선전차장은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지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하며 회사측의 배차에 불응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 기사들은 14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등 8인의 삭발식을 할 예정이다. 또 18일 파견 노동부 앞, 2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확인 받을 작정이다. (범용)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2월19일: 대통령,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
- 2월21일: 대통령 행사부 업무보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자 가로막음. 이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 시작
- 3월 1일: 대통령 3·1절 경축사, 상시구조조정 강조
- 3월 8일: 창원경찰, 대우차 노조 창원지부 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3월10일: 방미 대통령, GM 회장 만나 대우자동차 인수 권유 / 시카고 오찬, "정부는 노사문제에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창원경찰, 대우차 정리해고반대 주도한 사람에게 집시법위반 혐의 체포영장 발부
- 3월15일: 작년 12월 금융총파업 주도한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장 검거
- 3월16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집행부 18명 고소
- 3월21일: 울산환경정화협회, 노조가 파업했다고 폐업신고
- 3월28일: 민주노총, 노조자문한 노무사 3자개입 혐의 기소한 검찰 규탄
- 4월 5일: 한전기공 노조, 성남 본사에 집결해 농성 시작, "조기매각 반대"
- 4월 6일: 중노위, 한전기공(주)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며 직권중재 결정
- 4월 7일: 김 대통령 경제장관 간담회,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
- 4월10일: 경찰 부평에서 대우노동자에 테러// 각 언론사, 사회보험노조가 '도덕적 헤이상태'라고 공격
- 4월11일: 경총, '레미콘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하면 노사관계 왜곡'
- 4월13일: 종로경찰서, 광화문 앞 1인 시위 노동자 연행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과거 청산
■: 4월 14일(토) 오후 3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 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사회: 박래균
 내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 청산 운동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사업의 의의
 문의: 배경내(02-3675-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7일(화)

제 1834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소송

종로구(구청장 정홍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변소의 매출감소액까지 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배경을 묻자 "도심에서 시위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도심 아닌 곳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해 도심시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도심 아닌 곳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종로구청 기획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 방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해 8월 서울특별시 교통혼잡 유발 비용을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유보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서울시장이 지난 해 추진하려던 방안을 유보한 교통관리실장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활동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활동가는 또 "모든 집회·시위는 함의하고, 분노를 표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이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공공선을 위해 치뤄야 할 댓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8월 17일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며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산정해 행사나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인권·사회단체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자 유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8월 18일자**)

종로구의 이번 발표는 지난 해 유보한 배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교통혼잡 유발비용 대신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해 행사나 집회 주관단체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심보선)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서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부평만행' 현장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징벌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부평만행' 영상이 11일 산곡성당 기자회견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속속이었던 경찰은 지난 15일 방송사 뉴스화면, 채증기록 그리고 대우자동차 영상패가 촬영한 필름을 편집해 주요언론, 국회에 등에 보내는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공개했다. 경찰은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음만큼만 두들겨 패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노조원에게 잡혀 구타당한 전경 12명을 구하던 중 젊은 전경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진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위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노조원들에게 그것을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중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대중 정경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심보선)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100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로 부터 받은 가장 뜨
악했던 질문 중의 하나는 왜 100인 위원회 회원명단을 공
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개를 할 이유도, 안 할 이유
도 없다는 공식 멘트 외에 "왜 민주노총에게는 40만 조합
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는
유령인가요?"라고 가볍게 응수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KBS노조 감철구 부위원장이 100인 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100인 위원회 내부에서도 명단공
개 여부를 놓고 간단하게 토론을 벌였다. 평소 위계를 지
양하는 개인들간의 자율적·수평적 네트워크를 지향해왔던
조직운영 원리상, 고소의 대상이 특정 100인위 성원으로
제한되는 것을 거부하고 회원 전체 공동책임을 주장하고
자, 전원이 진술서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회원전체 실명진술서를 낸 만큼, 차제에 100인 위
원회 실체에 대한 여러 의혹도 불식시킬 겸 회원명단을 공
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는, 100인 위원회 회원으로 있는 성폭력 피해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보
호조치를 감구하기 힘들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이 판단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기란 불행하게도 쉬운 일이
였다. 감철구 부위원장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피해자
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며 다시 확인한 것은 이렇다. 검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다시 강간당한다"는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
로 갑작스럽게 가해자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비상식적인 행
태를 보였다. 또한 검사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나. 주
장하는 바가 합리적이지 않다.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하면
서 시간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계속 추궁하고, 수년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사실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시종일관 갑압적이고 고압
적인 자세로 심문했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고소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물론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버랑 끝에서 마지막 호소를 했다는 이유
로 피고소인이 되어 검사와 가해자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더 기막히다 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좌우(左右)를 막론한 가부장적
연대 앞에 꼼짝없이 유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
인했다.

지금 내가 되묻고 싶은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100인 위원회 회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당신들은 이
런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만한 준비
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엄혜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1. 들롱난 '비밀' -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한다'
경찰, 대우차 노조원 사무실 출입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 (4.10) /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 (4.11) / 대한변협, 경찰폭력규탄 기자회견 (4.12) /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 (4.12) /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 (4.13) /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체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구속 (4.13) / 민주노총, 경찰폭력규탄 부
평역 집회 (4.14) / 경찰, '감금 경찰을 구하던 중 전경이
충분한 것' (4.14) / 경찰, 비디오 공개-'노조측 변호사가
폭력 선동' (4.15) /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 (4.16)

2.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항의 주일대사소환 (4.10) /
한·중, 일본 역사왜곡 공동대응 합의 (4.10) / 김대통령,
일 교과서 제수정요구 (4.11) / 일 대사관 앞 455회 정대
협 수요집회 (4.11) / 중국, 유엔에서 일 교과서 왜곡 문
제 제기 (4.11) / 국회, 일 교과서왜곡 시정특위 설치 합
의 (4.12) / 이한동 국무총리,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일교
과서 국제소송 추진 발표 (4.13) / 정대협, 일제하 강제동
원피해진상규명 특별법추진 (4.15)

3. 레미콘은 아직도 80년대를 달린다!
중노위, 레미콘 쟁의조정 종료, 레미콘 노동자 파업
(4.10) / 레미콘, 노동부 앞 집회, 노조인정 요구 (4.12) /
레미콘 총파업 결의대회 및 서울대 투쟁문화제 (4.13) /
광화문 앞 1인 시위 레미콘 노동자 연행 (4.13)

4. 송두술 찢는 불다!
한나라당, 국회대정부 질문-송두술교수 사상 시비
(4.10) / 조선·중앙, '친북칼럼니스트 논란' 송 교수 기
사화 (4.11) / 이한동 국무총리, 송 교수 칼럼 이적성 없
다고 답변 (4.12) / 한나라당, 송 교수가 칼럼을 기고하는
것에 관해 집중 추궁 방침 (4.13)

5. 운동진영 성폭력, 진지하게 접근할 때
'감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4.9) / 100인위 회원
모두 1차 검찰 출두 (4.10)

6. 공공시설물을 온 몸으로 보호하라!
민기협 목욕집회, 집회·시위 가로막지 말라 (4.12) / 중
로구청, 집회 때 공공시설물 파손하면 배상청구 (4.16)

7. 주요판결 및 헌법소원
서울지법, 매항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4.11) /
참여연대, '시위전력 이유로 관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 헌법소원 (4.13) / 서울고법, 과로 및 스트레스도 산
업재해 인정 (4.15) / 서울고법, 희망되지 대상자라는 이
유만으로 정리해고는 부당 (4.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8일(수)

제 18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병원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
하며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
동자들이 있다. 지난 2월 14일 군산개
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자진사퇴를
약속하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3월
23일 이를 반복해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
지부(지부장 김은혜) 권진영 교육국
장 등 6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
서 스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
속 △2년여 제 진행되고 있는 1심 재
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체불임금
해결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감사실
시를 요구하며 17일 현재 단식농성 16
일째를 맞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 2명은
지난 4월 8일 구도·두동에 시달리다
군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남은
조합원들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은 이상
용 이사장을 구속하고 퇴진시키는 것"
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http://kjhu.inp.or.kr 참고)

김은혜 지부장은 16일 "병원을 이 지
경까지 끌고 온 것은 이상용 이사장의
파행적인 운영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탓"이라며 "단 1%의 희망만 있
어도 이상용 이사장을 처벌하고 병원
을 정상화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99년 3월부터 '이상용 이사장의 퇴진
과 병원정상화'를 요구하며 2년 넘게
싸워온 노조가 말하는 이 이사장은 온
갖 '경영비리'와 '부당노동행위'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하다.

개정병원은 98년 경영악화로 전북대

병원, 원광대병원 등과 인수협상을 진
행하던 중 서해병원 원장이던 이상용
씨가 6개월 분 체불임금 지급과 모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면서 99
년 1월 1일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체불임금은 해결
하지도 않고 개정병원의 약품과 의료
기기 등을 서해병원으로 반출한 의혹
을 사고 있는 데다가, 취임 후 석달만
인 3월 17일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
업을 했다. 99년 12월 광주지방노동
청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의견을 냈으나
군산지청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노

조는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
며 2000년 1월 4일 군산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가 완강하게 싸움을 하자 이 이
사장은 2000년 9월 4일 휴업을 철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
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고 상사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
로 신대욱 씨 등 19명의 조합원을 해
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군산노동사무
소는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군산지청에 구속의견을 냈고 2000년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
러나 40여일 만에 2천만 원의 보석으
로 석방되어 오는 4월 19일 군산지원
302호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김영원]

◎ **행사 안내** ◎

⊗ **경찰폭력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일시: 4월 18일 오후 3시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구관 2층 대강당

내용: 최근 경찰폭력 VTR 시청, 경찰폭력 사례 발표

경찰폭력 개선방안 -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과)

토론: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민주당·한나라당·천주교인권위·기독교인권위

주최: 민중연대(준)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연대) 발족**

일시: 4월 19일 오후 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정문 앞

내용: 광화문에서 1인 휠체어 시위 마지막 날 '이동권 연대' 발족

⊗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

일시: 4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6211-2200)

내용: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5호선 장한평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이동

주최: '오이도역' 장애인수자리프트추락참사 공동대책위원회

⊗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일시: 4월 21일 오후 3시

장소: 오프라인 - 연세대학교 이과대 B130 강의실

온라인 - http://freeonline.or.kr

주최: 정보통신경찰청 공동행동,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Left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4월 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이 17일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박훈 변호사, 정관채 (3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씨 등 피해자 92명과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고소·고발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조합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부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진압 사실에 대한 왜곡·조작 중단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 처벌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 철수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구속·연행·수배 해제와 노사교섭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해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한 금속연맹 김기덕 법률원장은 "맨 몸의 조합원을 방패로 찍어 넘어뜨리고 다시 경찰봉으로 가격한 사실 등은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지,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름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목이 메었다"며 "참여연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이 관심을 못 둔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손 협동사무처장은 또 "이와 유사한 폭력이 작년 호텔롯데에서도 발생했는데, 이대로 두고 본다면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대우노조원들이 의경을 끌고가 구타해 폭력진압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경찰주장과 관련, 대우차 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의경이 물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손에 때를 미는 모습까지 나온' 비디오를 상영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상영한 비디오는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동영상으로 보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심보선)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삼성동 무역센터(TRADE CENTER)는 자유무역의 상징. 17일 낮 12시 무역센터 앞에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행동이 기획한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병기 사무총장은 "자유무역협정은 UR 이후 폐쇄화된 농촌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세계화의 진원지인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분노는 집회 마지막에 성조기 화형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 △쌀수입 개방압력 △농축산물 개방압력 △산업 전반에 대한 내정간섭 △WTO, IMF의 세계화 책동 등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미 상공회의소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한·일 투자협정 및 한·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자유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 그러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하며(이행의무 부과금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한·철레 자유무역협정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263개 국내생산물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한·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파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9일부터 주중 매일 소속 단체 주관으로 집회를 해 왔고, 이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18~20일 연세대학교에서는 투자협정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토론회가 두 차례 열리고, '세계화의 그림자 밝기'란 이름으로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22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전미 자유무역협정(FTAA) 정상회담에 맞춰 준비됐다"며 "지금 퀘벡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자유무역협정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주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오는 21일을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것으로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19일(목)

제 18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세계 장애인의 해'로 유엔이 지정했던 1981년. 정부는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자"고 발표했다. 올해 4월 20일은 2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싸움에 나선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 대책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7일간 진행해왔던 1인 시위를 19일에 마치고 동시에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이도대책위는 올해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추락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부처는 오이도대책위가 요구했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나 점검 활동도 하지 않고, 공개 사과 요구 또한 묵살했다.

또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아 오이도대책위의 원성을 샀다.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은 1인 시위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오이도대책위는 "오이도역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온 당연한 결과"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첫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타시다' 캠페인을 한다.

이동권연대는 발족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계획·과정·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앞으로 일반 사회 단체들과 연대로 더욱 튼튼하고 공동 대응 마련도 활발히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 아래 장애우연구소)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편의증진법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노인일산부동의 편의증진보장관련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9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률 시행당시 장애인 시설설치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유보돼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비한 기존 건물이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이제 유보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건물은 편의증진법 벌칙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된다.

장애우연구소 임소연 간사는 "그동안 장애인들은 어렵게 외출해 어떤 건물에 갔다고 해도 자체 편의 시설이 부족해 건물 안에서조차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불편했다"며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사회적으로 미비하지만 법적으로나마 강제 의무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갖고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태섭)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철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놓인 개혁, 짓밟히는 인권 / 퍼포먼스(현 정부의 인권실종을 풍자하는 상황극)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만행 실태 발표 /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폭력진압 사태의 법적 문제 / 김대중 정부 인권실종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 성명서 발표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되기 직전 강원지방경찰청 김 아무개(35) 경장 등 경찰 12명을 대우자동차 남문 앞 근처 도로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16일 저녁 8시경에 긴급체포됐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선동에 넘어간 노조원들이 경찰관 12명을 감금 폭행해 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변명해왔다. 경찰은 정 아무개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경장 등 경찰 12명을 골목으로 끌고가 40여분 동안 에워싼 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보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편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런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와 같은 요소는 근거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도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청인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레미콘 기사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다. (심보선)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대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교수1인당 학생수 39.0명(전문대 78.0%) △사립대학 비율 80.0%(전문대 85%) △시간강사 비율 47.6%(전문대 51.8%). 이렇듯 열악한 한국사회의 대학현실이 교수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발언하게 만든 것.

최 상임준비위원장은 불안정한 교수신분 때문에 교수노조(준)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은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양산하는 정·관·학 복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임용 제도는 공부 안 하는 교수들을 짜르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반대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들을 탈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 전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한편 최 상임준비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교수노조의 역할이 전면적인 대학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의 일차적 목표가 신분보장과 조합원 보호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목표조차도 참된 대학개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이 부분적인 성취도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정치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노동조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지 않고 '헌법노조'라고 부릅니다. 비록 현행법은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지만, 헌법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수노조(준)은 △교수신분 보장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대학지배구조 혁신 △공공성·민주성·생산성 지향 △민주세력과의 연대 등을 기본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원이 1천5백명으로 확대됐을 때 교수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수노조가 현실화했을 때 한국사회는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최 준비위원장은 말한다.

"노동자를 천민시하고 불온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노동자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수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전근대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0일(금)

제 18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2001년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기념'할 마음이 전혀 안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4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강제노역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에바다 농아원 학생들이 스스로 펼쳐 일어난 '에바다'는 아직까지도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3월 2일, 에바다 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종인)는 "신임 이사 3명 선임과 옛 비리재단 측 관계자인 현 교장 해임, 신임 교장 임명"을 결의 한 바 있다. 에바다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합의는 1주일도 안 돼 깨어지고 말았다. 현재 이사회 구성을 꼼꼼히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지난 해 7월 구성된 현재의 이사회는 에바다 농아원을 정상화시키고자 모인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에바다 연대회의)가 추천한 2명과 옛 재단 측 관계자 5명이 결합한 이사회다. 에바다연대회의 쪽 의견이 수적으로는 통과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와중에 3월 2일 이사회 결정은 연대회의 쪽 2명과 옛 재단 쪽 2명이 '수적 균형'을 이루어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는 옛 재단 측 이사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한 달 보름이 넘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에바다연대회의 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옛 비리 재단과 연루된 사람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청렴한

사람이 책임지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농아원의 관리와 교육을 맡겨 에바다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에바다 농아원에 장애인에 대한 폭력·강제 노역 같은 일들이 없지만, 옛 비리재단 측 사람들이 이사회나 학교에 지금처럼 남아 있는 한 그 인권유린의 '불씨'는 언제라도 큰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5기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는 대표를 말한다. "중재자 역할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평택시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법적인 노력을 다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정상화는 외형적 정상화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뽑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96년부터 에바다에서 투쟁을 시작한 장애인들은 허름한 식당 터에 '해아래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생활하고 있다. 비리재단 쪽 사람들에게 쫓겨나 생활 견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옛 재단측이 억대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과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발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강요된 굶주림에 스스로 개밥그릇을 뒤지고 구멍 가게를 털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들이 '에바다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들이 겪었던 처참한 아픔의 경험을 다른 '장애인'이 겪지 않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심태섭)

만화 사랑방

이동수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축제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 오상훈 씨는 설명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서울대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이순녀 위원장 등 사회각계인사 20명이 복수노조금지 조항 철폐에 동참하여 참여할 예정으로, 19·20일 각 8명, 21일 4명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릴레이 시위 형태로 진행된다.

19일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1인 시위의 일환으로, 파견철폐 공대위·비정규연대회의·민주노총 서울본부로 구성된 ‘자주적 단결권 완전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아래 단결권 대책회의)’에서 준비한 것. 첫 번째로 퍼포먼스를 하게 된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소극적 형태의 투쟁”일 수 있으나, 노동자·농민·학생이 모두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투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9일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는 단결권 대책회의가 주관한 ‘복수노조금지철폐 광화문 1인 릴레이 시위 발대식 및 3차 선전전’이 있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에림 정책팀장은 “단결권 대책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복수노조금지조

항철폐를 위해 선전전을 진행했는데, “이번 3차 선전전은 광화문 1인 릴레이 시위 발대식에 맞춰 준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격주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결권 대책회의는 지난 3월 28일 IL0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개정공고를 계기로 결성된 후,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왔다. (범용)

한 언론사의 제소자 죽이기

‘제소자가 교도관 폭행하는 사례 빈번’ - ‘온정적 교화행정’ 문제제기

지난 16일 국민일보의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제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제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제소자들이 일부러... 새벽시간대에 교대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 기자는 나아가 법무부의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국민의 정부들어서... 교정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제소자의 태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는 온정적인 교화행정에 치중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17일 오후 4시경 박병권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 사건이 난 교도소가 어디입니까? “진주교도소입니다.”
- 사건 당사자들과는 인터뷰를 시도해보셨나요? “안됐죠.”
- 당사자들의 이름은요? “모르는데요.”
- 혹여 그 제소자도 피병이었나요? “그건 모르죠.”
- 그럼 사건은 어떻게 아셨나요? “확실한 루트가 있습니다.”
- 그 루트는 누구입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교도소 측은 사건발생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진주교도소의 이현태 보안과장은 흥분된 어조로 “발령 받은 지난 1월 이후 (그런 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교도관이 제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일은 결단코 없다. 원한다면 기록도 보여줄 수 있고 그건 내 명예를 걸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결국 미궁에 빠진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본지는 18일 다시금 박 기자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처구니 없게도 박 기자는 자신의 말을 반복했다. 한 기자의 물지각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기자사회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힘들게 쌓아온 ‘제소자 인권’의 새싹이 처참히 짓밟혀버리는 순간이었다.

“아 그거요. 진주 아님니다. 제 처가집이 진주라서 거기라고 그런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소측반응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재차 확인까지 하셨잖아요?
“저야 그쪽에서 진주로 확인전화를 하실줄은 몰랐죠”
-도대체 그럼 그 교도소는 어디입니까?
“그건 못 밝힌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건은 비밀비재해요.” (유해정)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19개 인권단체는 대우차 사태로 상징되는 현 시국을 총체적 인권실종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지한 사회와 정책전환, 구체적인 인권보장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차 사태 발생 이후, ‘인권난국’의 돌파를 위한 모색을 해왔던 인권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종로 탑골공원에서 연대집회를 했다.

(→ 3면으로 이어집니다)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1) 부활한 공안정국
- 2)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3) ‘민생공안’ 적용실태
- 4) 공안대책협의회의란?

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바로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 이후 근 두달만에 집회가 ‘허가’된 것이다.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나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불법·폭력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세심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동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4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월 10일 대우차 사태와 관련, 과잉진압 행위자와 과격 폭력 시위자 모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곧 △공권력이 잘못된 것은 없으며 흥분한 전경이 개인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전경 개개인을 흥분하게 한 노동자들이 잘못된 것이고, △‘불법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언제든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16일 종로구는 ‘집회·시위 도중 훼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1인 시위’를 막기까지 했다. 레미콘 노동자가 미이라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 총치하다며 경범죄로 강제연행하는가 하면, 25미터 간격을 두고 국회를 둘러싸겠다는 ‘1인 시

위’도 금지통보했다. 공권력의 이런 조치는 ‘민생공안’에 비춰보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검공안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엄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관되게 반영된 것이다. ‘민생공안’ 주창자들이 말하는 집단이기주의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세력을 말한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와 4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언명한대로 ‘상시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 대통령의 ‘개혁’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과거 1차·2차 구조조정을 운위하다가 이제는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연말 올해 경제성장률이 5.1%로 예측한 것을 수정하고 올해 성장률이 4.3%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가 나빠질 경우 3%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김대중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는 객관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민생공안’이란 바로 이런 저항을 ‘관리’하고 ‘진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민생공안’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심지어 ‘4월 10일 부평만행’에서 보듯이 범마저도 무시한다.

화염병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민생공안’은 애꿎은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되자 수원지역 대학생들을 들추시고 다녔다. 연합뉴스에 나온 화염병 투척기사를 퍼 나른 아이디를 추적해 윤호상(수원대 환경공학과 3년) 씨의 부모는 물론 휴대폰 전화통화내역까지 알아 내 괴롭히고

영장도 없이 윤 씨의 자취방을 급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윤 씨의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동광주병원 노조의 자문에 응한 공인노무사 이병훈 씨를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기소해 노동자를 도우려는 전문가에게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민생공안’에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 형식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때 ‘국민국가’는 이들이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를 엄벌하고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총결집해 펼쳐는 ‘민생공안’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생공안’이 계속된다면 공권력이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지를 더욱 뚜렷이 보여줄 뿐이다. (심보선)

(→ 2면에서 계속) 이날 집회에는 수도권 뿐 아니라 광주·전주 등 남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면서, “대우차 사태를 경찰폭력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조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유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우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인권이 죽은 시대’”라고 선언했다.

한편, 고문반대운동으로 유명한 세계교문방지기구(OMCT)는 19일 대우차 사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성명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조)

5.5 인권영화제 다시보는 명작선

- 5월 18일(금)~23일(수)
- 아트큐브(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지하)

02-741-2407 / 02-741-5363

전자우편 hrfilm@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1일(토)

제 18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 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 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4월 21,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저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및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사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가 반사회사이트 담론에 묻혀 잠정화 되기 어려웠다"며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네티즌 토론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비판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 등을 주제로 21일 오후 3시 오프라인(연세대학교 이과대 B130 강의실)과 온라인(http://freeonline.or.kr)을 통해 열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내용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실상 부활했다"

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정한 등급기준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적용되어 강제로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이광길 활동가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시행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유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2면에 이어집니다)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그저 지경도 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폭력의 '재발'은 방지될 것인가? 여러 말이 필요없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경찰폭력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혹은 군사독재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보람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런 전통 속에 뚝뚝은 경찰관들이 소위 '질서유지'를 위해 마음놓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찰폭력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하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부평에서 '과도한 물리적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한다. '경찰흔들기'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아말로 '결코 처벌되지 않는 경찰'의 구태의연한 의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고답적인 논리에 다름이 아니며 엄정한 법 집행은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 또한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과도한 물리적 행사'에 대해 정권의 비호를 믿고 사법처리를 면해보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세력의 '정략'에 이용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경찰개혁을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정권의 사병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 경찰의 자존을 세우고 싶다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하게 사법부의 처벌에 맡김으로써 "정권 보다 법이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부평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은 준엄하게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회사의 병역특례취소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병역특례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다른 병역특례자들도 이런 차별을 그토 당하겠지요."

군대에 '끌려갈' 각오까지 하며 단식투쟁을 결의한 병역특례 노동자들이 있다. 20일 현재 농성 143일 째를 맞는 (주)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 아래 멀티노조). 이들은 20일 단식투쟁 출정식에서 병역특례취소철회 등을 요구했다.

멀티노조의 투쟁은 지난 해 11월 24일 (주)멀티데이터시스템(대표이사 이태화, 아래 데이터시스템)이 '경영

악화, 사업전환'을 핑계로 병역특례를 취소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병역특례가 취소되면 병역특례 노동자들은 최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특례업체로 재취업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당시 멀티노조 조합원 15명 중 병역특례자는 모두 9명. 지난 해 12월 멀티노조는 데이터시스템의 상습등기를 통해 '회사의 사업목적이 전환된 바 없고 자본금 상태도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데이터시스템의 병역특례취소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었던 것. 이에 따라 멀티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00년 12월 21일부터 농성을 시작, 2001년 1월 5일부

터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시스템 이태화 대표이사 "나도 마지못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노조와 대화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태화 대표이사는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장기농성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자, 19일 회사의 이름만을 '스타웹'으로 바꾸기도 했다.

노무법인 참터 배동산 노무사는 이에 대해 "노조활동을 못마땅해하며 병역특례를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병역특례취소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멀티노조 조합원은 총 9명이고, 이중 5명이 병역특례 노동자이다. 이들은 회사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면 5월 24일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멀티노조는 21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멀티시스템의 불법경영을 조사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범용)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재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나섰다 구속된 송학삼 씨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오다 4월 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및 잡입·탈출 혐의였다. 재미동포이긴 하지만 '미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미국 영사관 직원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녹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가 살림터 사장과 공모해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출판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생을 만나 평생 소원을 풀어보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학삼 씨가 구속됐을 때부터 뉴욕 동포사회에서는 '송학삼 교장 송환대책위'(위원장 윤영무, 아래 송학삼대책위)를 꾸리고 송씨를 석방·귀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학삼대책위는 결성 이후 미국 현지 언론과 동포 사회에 송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상원·하원의원들과 파월 국무장관, 렐지 법무장관 등 정치권에 "송씨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미 하원 에커만 의원과 슈퍼 의원은 4월 8일 공동명의로 파월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송씨를 즉각 석방하도록 국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주민주통일민주연합, 국제행동센터, 노릇들, 통일맞이 등 미국 현지 동포 단체들도 송씨의 구속과 기소 사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송씨의 석방과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송 씨의 2차 공판은 5월 24일 오후 4시 서울지법 312호실에서 열린다. (심태섭)

(1면에서 계속)

무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에는 '억압박살! 자유폭발!'로 네티즌 한마당이 광화문 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다. 문화개혁 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청소년 보호를 앞세워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보다는 비판적 정보에 대해 차단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 문화계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는 10만8천여 건의 '불건전 사이트' 목록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70여 개 회사에 무상공급하고 전국 PC방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 23조 1항 '내용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유해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에서 기인한다.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4일(화)

제 18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췌기

법원이 검찰의 편의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제동을 걸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재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각하결정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 재청구는 심리 대상조차 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이 아무개에 대해 간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남부지원 영장 담당 판사가 "피의자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를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 부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때 간통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를 새로운 범죄 사실로서 추가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위법한 긴급구속에 터잡은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검찰이 재청구를 하면서 1차 영장 청구 기각 사유와는

관계없는 사실만을 형식적으로 추가해 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건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데 의미를 두는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

된 바로 다음날 형식적 자료만을 보완한 채 재청구를 하는 일도 있고 재청구도 기각되면 계속 재청구를 반복하여 서너번 씩 재청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중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태섭]

(지면사정으로 '인권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뒤에 다시 나머지 범죄 사실만으로 또는 나머지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체포 금지규정을 탈법적으로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

4.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2) 구속영장 재청구 요건 판단의 중요성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추가나 사정변경이 없이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제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5) 구속영장의 재청구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성과 이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의 위법성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는 아무리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1차 영장 기각 사유로 삼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자료만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재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위법이다.

2001. 4. 20 판사 박시환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작지우지한다

- 1) 부활한 공안정국
- 2) 민생 깃발은 '민생공안'
- 3) '민생공안' 적용실태
- 4) 공안대책협의회란?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 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공권력을 이를 철저히 깰았겠다는 것이었다. 3·1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이 상시구조조정, 곧 상시적인 정리해고만이 살길이라고 밝힌데 이어 역사상 처음으로 120명 공안검사 중 103명이 모여 연찬회를 열고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를 활성화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책 연구팀을 '조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국정원, 재정경제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19명이 모여 '국가기강확립을 위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이들에게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악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4월 10일 부평만행'이 이어졌다.

공대협은 누가 뭐래도 열린다

99년 6월 7일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공대협의 존재자체가 부정당할 것으로 보였다. 그해 6월 10일 김종필 총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관계차관회의를 활성화해 공대협의 노동문제 개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밝힌대로 99년 8월부터 2000년 10월 10일까지

전국 검찰(지)청 54곳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는 모두 182회에 달한다. 또 지난 해 9월 6일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대협은 학원과 대공 관련 사건은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기고 공대협 예산도 18억원에서 2001년에는 4억2천6백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6일, 또다시 공대협을 열어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불법·과격시위는 엄단하고, 불법시위가 우려되는 모든 집회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안검사의 지침하달식 공대협

공대협에 참가한 적이 있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토론하거나 의사를 개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공안검사들의 법논리에 기초한 입장 훈시가 있고 곧바로 지적을 하달 받는 식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참가일시, 장소 통지서가 오는 대신에 공안부에서 전화로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나가면 공안대책협의회가 된다고 밝히고, '발언도 기록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듯 그냥 적거나 충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런 공대협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공대협 회의록을 검찰이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참가자 명단도 밝히길 꺼린다. 그러므로 언제 누가 참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참가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몸짓은 이런 식으로 '경제저해사범'이 되며 '집단지기주의'의 화신으로 돌변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집회·시위를 통해서 의사를 집결시키더라도 할 낭이면 '불법·과격 시위'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를 금지하기로 하자"고 결정해 버린다.

관계기관대책회의=공안대책협의회

99년 3월 12일, 대통령 훈령 77호에 근거를 둔 공안대책협의회가 탄생했

다. 공대협 의장은 대검 공안부장이고, 공대협 지역조직도 해당 검찰청(지청)의 공안검사가 의장이다. 대공, 선거, 학원,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관련 정부조직의 간부들이 대통령 훈령으로 의무적으로 공대협회의에 참가해서 공안검사와 협의하고 사실상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전과 다르게 공대협은 공식기구이며 각급 정부기관은 대검 공안부장 혹은 각 지방 검찰(지)청의 공안검사의 부름에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훈령 77호에 의해.

97년 검찰은 국정원·경찰·기무사와 함께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한총련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뤘다. 그러다가 이듬해 '한총련'을 떼어내고 노동부·교육부·공보처 등을 추가해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공안합동수사본부라고도 불렀다)를 만들었다. 위 기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자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양성화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전신은 공안합동수사본부(공안합수부)이고, 공안합수부의 전신은 관계기관대책회의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전신은 79년 전두환이 주도했던 계엄합동수사본부라고 할 수 있다.

계엄합수부는 보안사가 주도했고,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안기부가 주도했지만, 공안합수부와 공대협은 검찰공안부에서 주도하게 됐다.

또 공대협 이전까지는 이들의 먹이감에 오르지 불온한 '빨간 색'을 붙이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노숙자도 사회불안세력이며 정리해고된 노동자들도 이들의 사냥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번 버려진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2001년 공대협이 내건 '민생공안'이다. 계엄합수부부터 공대협까지 이들에게는 헌법도, 인권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필요할 때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력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3면에 공대협 활동일지). [심보선]

공대협 출범 후 활동일지

1999년

3월12일: 대통령 훈령 77호,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 설치// **3월31일:** 공대협(의장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 첫 회의: 노동부·경찰·기무사·서울시·국정원등 12곳 참가, 노동계 총파업사태 등에 대해 논의, 불법 집단행동등 폭력시위자 및 배후주동자들을 추적·엄단. 불법파업 주동자나 배후조종한 노조에 재산 가압류, 가처분등 법적 대응조치 결정// **4월 9일~5월11일:** 공대협 모두 7차례 열려, 지하철파업·한총련 대책 논의// **6월 7일:** 진형구 공안부장, 출입기자에게 '조폐공사 파업유도' 시사발언// **6월10일:** 진형구 대검공안부장 발언 이후 총리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 "공대협과 별도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노동관계장관회의 활성화" 결정// **8월2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특위'에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대검공안부가 공대협의 설치근거 준비,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마련 건의했다"고 답변// **8월31일:** 이견개의원,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98년 총 40회의 공안합수부 회의 중 28회가 노사분규 관련"이라고 발표// **11월16일:** 공대협(의장 대검공안부장 이범관), 99년 6월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공대협 및 지역협의회를 활성화 결정, 폭력시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회금지 통고

2000년

4월18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서울지검 노동전담·사회전담·기획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남부지청·서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10과장,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수사과장등 참가, 전국지검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대책 논의// **6월2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문광부 관리시설과장, 서울시 관광과장 등 참가, 롯데호텔 노조 파업 대책 논의(이후 6월 29일, 7월 1일 호텔롯데와 사회보함에 경찰력 투입)// **7월 5일:** 공대협, 대검 공안기획관 주재, 대검 공안3과장·검찰연구관, 국정원 수사10과장, 금감위 기획과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 경찰청 정보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등 참가, 금융노조 파업관련 대책 논의// **7월1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등 참가, "금융노조 총파업시 파업주동자에 대한 세부수사 계획" 논의// **7월27일:** 공대협, 보건복지부등 관련기관 참가, 의료계 집단제폐업 대책 논의// **9월 6일:** 김경길 법무부 장관 국회발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계기로 공대협은 학원과 대공관계 논의, 노동 사건은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겼다"고 발표, 공대협 예산은 "00년 18억원에서 01년 4억2천600만원으로 축소"// **10월17일:** 공안대책서울협, 경찰·교육부·노동부등 참가, ASEM에 비정부기구 관련자 324명 입국금지 결정

2001년

3월 9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등 공안검사 103명 연찬회, 국민생활 불안 해소에 주력하는 '공안검찰 원년'으로 삼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결정// **3월15일:** 공대협, 대검 공안부장 등 검사 8명,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지원국장, 국가정보원 수사국단장,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심의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장, 경찰청 보안국장·수사국장, 노동부 노사협력관 등 11개 부처 19명 참석, 봄철 노동계 동향과 전망 논의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 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력(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제중화 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지만 행진허용(4.23)

2. 다른 말 필요 없다. 폭력경찰관을 사법처리하라

인천경찰청장 직위해제(4.16)/ 김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사태 유감"(4.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땀 거만있다가 정치공세만(4.17)/ 민주노총 등 7개 단체,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현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4.17)/ 18개 인권단체, 경찰폭력 책임자처벌 촉구(4.19)/ 경찰대동문회, "경찰청장 교체등 정치적 대응반대" 성명(4.19)

3. 폭 보자,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는지

대우노동자·한동계약직 등, 서울역에서 부평 경찰폭력 규탄시위(4.19)/ 인천지법, '4월 10일 부평만행' 폭력혐의 해고자에 구속영장 기각(4.19)/ 민주노총, 경찰 폭력진압 비디오 1천만 명 보기 캠페인(4.23)

4.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

민주노총 여성위, 'KBS노조부위원장 성폭력 공개 공익적 측면 있다'고 강조(4.20)/ 여성단체 의견서, 검찰에 성폭력 사건공개해 피소된 사람 무혐의 처리 촉구(4.17)

5. 3자 개입금지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어질까?

자주적 단결권 쟁취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3일간 20명(4.19)/ 서울지법, 양규현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기자 2월기준 117만1천명, 지난 해 2월 101만 2천명 보다 늘고 전체실업자 보다 많아(4.21)

◎ 해외소식

네덜란드, 삶에 지친 교역자에 자살약허용 공론화(4.15)/ 미 국무장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점령은 과도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비난(4.17)/ 유엔인권위, "일 정부 군대위안부 면책 안 된다" 결의문 채택(4.2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5일(수)

제 18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첫날 오후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도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유일하게 사진과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경찰의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대우차 노동자의 사진으로 발표를 시작한 박경신 변호사는 1차보고서 심사 때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2% 줄어든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4% 증가했던 사실과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대표단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사회권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편의시설의 부족 혹은 허술한 설비로 장애인들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면에 이어집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정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하는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조약(아래 사회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95년에 사회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95년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23일자 참조하거나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을 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보고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 제3의 경로를 통한 정보 등을 통해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회기중에 민간단체와 정부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한국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5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오늘도 원조교제의 기사를 보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원조교제에 관한 기사검색을 해 보았다. 금년, 작년, 재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원조교제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온 사회가 원조교제를 위한 거대한 흥풍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리의 여학생들의 옷차림과 눈매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고, 그들을 쳐다보는 나의 시선에서도 무언가 음흉한 냄새가 묻어 나온다. 예전의 단정하고 꾸밈없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기품있고 의연한 어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원조교제의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재학생이라고 하니 이는 학교의 실패이며, 또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하여 원조교제의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니 이는 가정과 사회안전망의 실패이고, 원조교제를 해서 번 돈을 옷·액세서리 구입비로 혹은 선망하는 가수의 공연을 찾아다니는 데에 썼다고 하니 이는 문화의 실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생의 실패를 뜻한다.

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매춘업소 등에서 미성년자 유락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상에 파고든 원조교제에 대하여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성인들을 처벌·신상공개하고, 청소년들은 선도하고 재활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이미 지금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혹시 자신들의 인생은 자기들의 것이며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청소년은 없을까? 자신들에게도 일종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몸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청소년은 없을까? 한쪽은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성적 만족을 얻으니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항변할 청소년은 없을까? 마찬가지로 자유의사와 대가성 등을 내세우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어른들은 없을까?

원조교제가 말하고 있는 학교, 가정, 문화의 실패, 청소년들의 푸르른 인생의 굴절 이면에는 바로 그와 같은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성공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학생 혹은 청소년 시절에는 배우고 조심해야 할 무엇이 있으며, 또 어른들은 그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어떤 절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형식은 이제 한낱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나? 상품시장의 논리가 오만하게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회의 인권이 허우적대고 있다.

정태욱(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지면사정으로 정태욱의 인권이야기를 오늘로 옮겼습니다.

'각하'됐던 영장 재제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각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재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의자를 재구속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재청구 요건에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되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1차 영장청구 기각사유와 관계없는 사실만을 형식적으로 추가한 것은 부적절한 청구"라며 각하결정을 내린 박시환 부장판사와는 전혀 다른 견해다.

한편 홍 부장판사는 재청구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재청구를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급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례 등으로 규정되거나 정지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박 부장판사의 영장각하 결정은 나름대로 구속영장 재청구의 엄격한 원칙을 제시했지만 홍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가급적 억제하라'고만 했기에 추상적인 말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영장 기각-각하-발부 사건'을 계기로 법원·검찰이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대섭)

(=>1면에서 계속됩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점도 알렸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한국에서 사회권 보장의 진전을 꾀하는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결론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며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민간단체의 발표가 끝나자 이번 회기의 의장인 필리핀 출신의 단단 씨는 이례적으로 "매우 훌륭한 발표"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민간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기타 자료들을 유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제네바 =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6일(목)

제 18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파 검사출신 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한나라당·여야의원 95명 공동발의안 등을 토대로 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때를 써서 현재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는 25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높이려고 힘겨루기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검직금지조항에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 옹호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다"는 캐뉼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천정배 성명, '최소한의 원칙' 발표

25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여야의원 95인이 발의한 법안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여야 정파와 의원들 사이에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안과 한나라당안을 조항별로 검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한나라당의 안(위원장을 제외한 4인, 민주당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을 택하고 △시행령 제·개정예 법률안의 간여를 금지하거나 한나라당안대로 필요한 사항을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규정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우선원칙 삭제, 증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개혁입법의 조속완수라는 명분에 밀려 빈껍데기만 남은 채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인권위는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사행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관에 비해 접근가능성, 유연성,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한낱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위해 전시성 기구에 그치게 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대학로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편집자]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근로자의 휴가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제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

국가 앞장서서 인권침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8일에도 국회가 복수노조허용을 5년 유예했기 때문. 유예란 점에하게 대립하는 쌍방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에는 언제나 사회권 개념에 대한 비틀린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 : 사회권 왜곡하고 호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 조약) 제2조에는 국가가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략) 자기 나라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은 '점진적 달성'을 곡해하여 사회권 실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가용자원의 허용한도'라는 허

울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앞에 내세운다.

그러나 97년 유엔 인권보고 매뉴얼은 '구조조정이나 경제후퇴 등 심각한 자원제약의 시기에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계획을 채택하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은 보호될 수 있으며, 사실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이 짧은 시간 내에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내용적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을 2년 연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속에 안주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는 최근 일련의 대우차 사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지난 2월 16일 노동자 1천7백5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정부는 "구조조정은 대세"라는 현실론을 내세워 이를 묵인했던 것.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권 의식이 있었다면, 당시 대우차 노조가 내세웠던 "무급순환휴직의 실시와 적극적인 투자" 등의 독자생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계속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짓밟고 말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금지

한편, 사회권은 노동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주 및 교육·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범용)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 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 존중의 의무(Respect)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방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적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주)멀티미디어시스템이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 실현의 의무(Fulfill) - 국가는 사회권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7일(금)

제 18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범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진보넷, 민교협, 다산인권센터,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64개 인권·사회단체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모범의 취지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제23조 ①항의 2)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범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고 자기 입맛대로 '차단선'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터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 스스로 비밀스럽고 자의적인 검열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견에서는 또 시행령안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문제가 제기됐다.

선별소프트웨어 설치 명문화

백옥인(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청소년 유해매체에 특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며 "결국 청소년 보호취지에서 시작한다해도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또 차단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엄중한 자료를 차단해 인터넷의 정보유통을 왜곡시킨다"고 경고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시행

령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인터넷공간을 선별소프트웨어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차단자의 입맛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분명 한 사이트에 대한 대안이 있나?"는 질문에 진보넷 장영경 정책실장은 "이른바 자살사이트처럼 사회적 현상과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사이트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부치면 안 된다"면서 "실제로 유해한 사이트라면 그 운영자를 현행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국장은 "사적인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 설치하는 자율규제가 지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율규제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의 정보접근권과 의견표명권을 일정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조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다. 사회권조약 6·7·8조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제적·구체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할 '적극적 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물아치는 정리하고, 쫓겨나는 노동자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싸였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를 뜻했다. 지난 2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나 지난해 연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7,000여명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한 사건은 구조조정 흐름 속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산 등 각종 반인권적 사회현상을 동반한다. '구조조정=반인권'의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권조약 6조는 "국가는 개인이 선택한 노동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밝히고 있으며, 조약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커녕, 오히려 '경제회생'이라는 미명 아래 '일할 권리'의 박탈을 적극 조장해 왔다. '구조조정 완수'만을

거듭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노동과 생존의 권리'를 적대시하는 섹터함마저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수 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하고, 대학마저 '예비 실업자 양성소'가 돼 버린 현실에서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조약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말리고 밀리는 노동3권

'지난해 롯데호텔 사태와 올해 대우 자동차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영상이 있다. 바로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3년을 미뤘었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합의가 안된 쟁점들은 △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정 △조사 범위 등 모두 38개.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다른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인권위법에 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3당 원내총무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권위법 표결처리를 강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인권'은 회의장 밖에서도 찬밥신세였다. 이날 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법사위 토론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런데 접수창구에서 뜻하지 않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권위법이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창구 직원이 방청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되자, 이번엔 '소위원장 허락 없이는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웠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3명의 방청이 허용됐지만, 동행한 10여 명은 접수창구 밖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올바른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음)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권의 기초가 되는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지난 3월 '계약'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에게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유보한 것은 "노에 생활을 5년만 더 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권조약은 그밖에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 동안 일할 권리' 등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통계들은 한국사회에서 천대받는 노동권의 위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4월 28일(토)

제 18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까지 부안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안, 한나라당안, 여의의원 95인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속 없는 국가기구로 하고, 인권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핵심쟁점인 '상임위원의 수, 시행령 제정권,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30일 오전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심사했으나 검찰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한 경우, 인권위의 조사개시 후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이창수 집행위원은 "소위의 분위기는

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법무부가 여야 의원에게 로비를 할 것이 예상된다"며 "인권위의 전도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되풀이된 약속이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인권단체가 전면거부하는 민주당법안을 즉각 폐기하든가 대폭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한나라당 법안과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은 여의원 95인이 제출한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차이나 특정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인권위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와 거기에 영합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법무부 등은 인권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다. 그 집요함 앞에서는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다. 그들 또한 '인권위' 설치의 대의를 부정하진 못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인권위 설치가 기정사실로 된 순간부터, 법무부 등은 철저히 '인권위'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데 주력했다.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가용한 모든 '논리'를 만들었지만, 그 어떤 논리도 '인권을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있었을 뿐이다.

지난해 집단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차라리 '솔직하고 노골적'이어서, 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반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는 '논리'로 포장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 제동을 걸기조차 어렵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을 가진다. 그럴싸한 논리로 법의 이름 뒤에 숨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오해'에서 깨어나기 힘든 탓이다.

법무부는 자신이 '인권의 주무부서'라는 논리로 인권위법에 대한 개입을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그들이 오히려 인권감시 대상이라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더구나 자신의 지위를 약용해 인권신장의 대세를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일이다.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검찰의 충실한 입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법사위 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낸다.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설 밤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팔 없는 단팔봉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달 급여액이 6만 몇천원이라고 하네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살 용기가 안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장애인 실업자 김남희(46) 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다.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은커녕 심지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부족과 파행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지나치게 적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는 1천만명 중 149만명만이 지원을 받았다. 결국 ‘국민의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일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가 2000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병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하

고 산업재해 인정절차도 복잡하다. 고용보험도 상환은 마찬가지.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시켰다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고 책임을 사장에게 떠넘겼다.

국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절실한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했다.

외형적으로 4대 보험이 갖춰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너무 빈약한 탓이다. 2000년도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의 7.4%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등은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99년 제2차 정부보고서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19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태를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

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에 직면해 대책위원회가 세워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30곳 7500여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철거 때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강제로 철거용역원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다. 2000년 1월 28일에도 관악구 봉천3동 재개발지역에 철거용역원들이 들이닥쳤다. 세입자들이 정부에, 구청에 회사에 수없이 항의했었지만 각자에게 책임만 떠넘기며 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다. 결국 철거촌의 세입자들은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삶의 질 향상기획단’까지 꾸리며 ‘인권 경시와 복지 최소한의 폐단을 시정’한다던 생산적 복지가 어두운 현실을 가리는 외피역할만 수행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사회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영원]

(→1면에서 계속) 법안을 존중해 인권단체의 비판적 지지를 받을 수준의 법안이라도 여야합의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명분축적과 흥정거리 마련을 위해 독자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행동을 통해 입증하라”며, “당리당락을 떠나 인권신장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숙 민가협 운영위원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개혁, 빈껍데기 인권위법안 반대’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28일에도 광노련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2001년 5월

(제1844호 - 제1865호)